

PART
02

인쇄매체
신문 등



01 이데일리(주)

사업명

Safe Korea! 산재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실적

안전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유용한 안전수칙을 각인하여 범국민적 안전인식 전환과 확산에 기여

내용

- 산업안전 기획기사 : 7회
 - 범국민적으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산업 안전을 위한 기획 취재기사 게재
- 훈포장 시상식 영상 : 1회
 - 산업안전예방에 기여한 훈포장 유공자들의 공적 영상 제작 상영
- 훈포장 유공자 인터뷰 프로그램 : 2회
 - 산업 현장 당사자의 산재사고 예방과 위험성에 대해 경험을 통한 안전의식 강조
 - 직업위험 분석을 통한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 모색
- 안전수칙 캠페인 : 3회
 -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끼임, 폭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제작
 - 재연을 통한 직관성을 높이고 흥미 유발

이데일리

2021년 10월 25일
09면 (경제)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반복되는 산재는 인재

되풀이되는 붕괴사고... 흠막이 설치 의무화해야

건축물 해체공사·관로공사 사고... 제도·설비 미비 속 작업자 경험 의존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소화약제 누출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자가 숨지는 특정 유형의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근로자 등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 유형으로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거푸집 동바리 붕괴, 관로공사 사고 등이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는 지난 6월9일 발생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와 발생형태, 원인 등이 유사했다. 당시 사고도 해체 작업 중이던 벽체가 대로변으로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학동과 잠원동 사고 모두 공사 계획 단계에서 기존 건물 형태, 구조 특성, 현장 주변 상황 및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광주 사고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된 상태에서도 발생했다.

공단은 광주 붕괴사고가 "현장에서 행상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행위가 미흡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의 업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중앙구조단 소방대원들이 화학복을 착용한 채 사고 현장에 진입하는 모습.

무소홀, 안전보다는 실익을 우선하는 사업 구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재하청 관행 등이 결국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된 근원적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도 매년 반복되는 중대사고다.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해 설계대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영토이다. 지난 6월16일 충북 충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지난 2월9일에도 경기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명이 다쳤다. 공단은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고 고정하는 '긴결재'가 안전인중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로공사 터파기 도사 붕괴사고도 만

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다.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졌다. 특히 굴착사면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상 비가 자주 오는 봄과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열국 흙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기 정비기사 등 작업자의 경험과 운에 기대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한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도 많은 민립 공사 내역에 간이 흠막이 설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정훈 기자 hoonism@

공동기획: 산업안전보건공단 (17.1*18.2)cm

이데일리

2021년 08월 17일
10면 (경제)

난간 없고 주의표시도 안보여... 건설현장 70% '안전 불감증'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고용장관, 신축공사장 가보니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락 사고가 많습다.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 오전 10시, 노란색 점퍼를 입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라고 쓰인 하얀색 안전모를 쓰고 나타났다. 안경덕이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분시점검한 서울 중구 신당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어수라였다. 이곳은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3층을 올리는 공사야 한창 진행(진행률 25%)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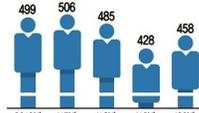
안 장관은 열곡을 지나듯이 구슬땀을 흘리며 옥상까지 올라 직접 곳곳을 훑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동행 인원은 최소화했다. 사람 한 명 경계라고 비침은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장관과 점검관이 쓴 안전모가 쿵쿵 부딪혔다. 녹슨 철근이 날브러져 있었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못이 곳곳에 있었다. 기자가 메고 있던 배낭에

물과 1시간도 채 안됐지만 안 장관이 지난간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승강기를 놓기 위해 풀이놓은 곳인 개구부에 주의 표식이 없었다. 자칫 잘못하다 밟으면 1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컸다. 제대로 된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도 없었다. 복역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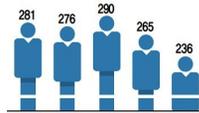
작년 건설업 산재사망 458명
중소 건설현장이 68% 차지

고용부·안전공단, 현장점검 강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부트랙'

연도별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 단위명



연도별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 단위명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경덕(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당동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충분한 휴식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작업자 13명 중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 충분한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곳만 그런 건 아니었다. 안 장관은 "지난달 현장점검의 날에 일체 불시점검을 해보니 현장 70%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달 두 차례 전국 현장 4555곳을 점검한 결과 3253곳(70.8%)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점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에서 철골 설치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3층에서 밟을 헛다리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의정부 다세대주택 5층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승강기가 놓기 위해 풀이놓은 개구부로 넘어져 사망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부진한데도 건설 산재는 계속 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58명으로 전년보다 30명(7%) 증가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9년 50.1%에서 2020년 51.9%로 늘었다. 지난해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 중 236명(51.5%)은 추락 사고사망자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건설업 공사규모별 추락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공사비 20억원 미만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161명으로 전체 건설업 산재사고사

망자의 68.2%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소 건설현장은 안전 의식, 안전시설 부자가 미흡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 산재가 늘어나자 부트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집중현장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안전공단은 △안전도-안전대 지급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 위험 관련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교체 비용의 70%까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건설차예비발전로 전기관을 통해 기승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전은 권리"라는 기조로 꾸준한 지원을 확대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장관은 기자와 만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1순위는 바로 안전"이라며 "추락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최길준 기자 chigj@

공동기획: 산업안전보건공단 (28.7*17.8)cm

산업안전 기획기사 (21.8.03 ~ 11.08)



훈포장 유공자 공적영상('21.7.)



유공자 인터뷰 프로그램('21.8.)



안전수칙 캠페인(끼임사고)(*21.7.~10.)



안전수칙 캠페인(추락사고)(*21.7.~10.)

02 국민일보

사업명

당신은 오늘 '안전'하셨습니까_산업재해 사고사망 예방 기획취재

실적

기획기사 3회, SNS 영상콘텐츠 제작 1회, 카드뉴스 제작 1회, 캠페인 홍보배너 게재, 안전 캠페인 광고 게재

내용

- 기획기사(2021.06.26.) 19면
건설현장 추락사고로...최근 5년간 1300명 목숨 잃었다...안전시계 멈춘 건설현장 '비상불'...건설현장 산재사망 절반은 '추락사'...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사고지뢰밭'... 작업발판·안전난간은 '노동자 생명줄'...7월 부터 위험 다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기획기사(2021.07.06.) 12면
산업 안전은 나라의 품격...선진국선 노사·국민이 '일심동체'...국경없는 산업재해 예방'...추락사고 위험 현장서 즉시 알려야...촘촘한 기술로 '노동자 안전' 뒷받침...사고 방치 기업 속아내는 각국 정부
- 기획기사(2021.07.20.) 12면
건설현장 33% 안전모도 안 썼다...지난해 236명 추락 사망...추락위험 사망...추락위험 일제점검... '사라진 안전모'...참담한 현실,, 더 이상의 일회성 현장점검은 없다...안전설비·제도 표준화 마련 시급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최근 5년간 1300여명 목숨 잃었다

백방 끝 노동자 안전

① 안전체계 멈춘 건설현장 '비상불'

순진 노동자 10명 중 6명 추락사
중소규모 현장과 고령층에 집중
비계와 지붕·대들보 사고 '최다'
고용부, 내달부터 일제점검 착수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3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墜落死)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빈발하고 고령층에 사망자 비중이 쏠리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음 달부터 전국의 추락·꺼임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현장 산재(상) 절반은 '추락사'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 (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 (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매년 20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에서 일하다 순진 전체 노동자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0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가 됐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난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비계(임시 가설구조물) 등이다. 공사장에 뿔뿔이 있는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구미시 휴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선라이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통로와 함께 자제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사고 지뢰밭'

노동자 추락사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억~120억원 미만과 120억원 이상 규모도 건설현장에서는 각각 45명, 29명이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안전보건 시설부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일수록 추락사고 대응에 취약했다. 지난해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는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는 43명, 20세 이하는 5명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60대 노동자 C씨가 충청북도 소재 공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데 구조의 정장을 입고 작업하다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

기도 했다.

직업발판-안전난간은 '노동자 생명줄'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보다는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국격을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운 민낯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조치나 추락 방지방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 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붕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7월부터 위험 대형 건설현장 일제점검

고용부는 7월부터 사고사망이 잦은 전국의 추락·꺼임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 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 변화를 유도해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불시하에 순찰·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추락 관련 고위험지역인 비계와 발판 작업, 철골·트러스 작업, 지붕·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주로 살핀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드론 전용 차량을 기존 108대에서 404대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위험기계가구 교체제를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상 위험기계가구는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사망사고 위험이 큰 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해 건설 현장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교체 비용 50%를 사업장 당 1억원 안대 지원한다. 올해는 이동식 크레인 2352대와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694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형 작업발판 추락 방지법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건설현장의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최근에는 채광창 안전덮개-안전블록 세트도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가 지원 대상이며 구매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금액에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조치 등 기술지원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kmb.co.kr

국민일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잘 들리는 고음질 기도형 보청기 SQ10

★ 대한민국 동행세일! 한정 할인판매!! ★



SQ 10 보청기는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자연스런 소리,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국내제조/국산 보청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청기를 선물하세요!”

다양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 ▶대화 할 때 ▶TV시청 할 때
- ▶휴대폰 통화할 때 ▶강의 들을 때



대화, TV, 전화, 강의가 잘 들립니다^^

SQ 10 보청기 특징과 장점

1. 간편하게 사용하는 충전식
2. 양쪽용 이어폰을 통한 양방향통화
3. 편리한 사용법
4.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5. 내성력에 맞게 간단히 볼륨조절
6. 빠른 울음 소리 등 잡음이 적음
7. 국내제조제품 (Made in Korea)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자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교성민회호 : 2020-GN1-06-0006

판매처 : 비전케이(www.vjk.co.kr)

통신판매 신고번호 : 2014-서울양천-0287호 | 농협 302-1237-5704-61 비전케이(배회장)

구입문의 02-2168-3844

기획기사(2021.06.28.)-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최근 5년간 1300명 목숨...(17면)

(이슈매체) 기획비

18

기획

2021년 7월 6일 화요일 국민일보

산업 안전은 나라의 품격... 선진국선 노사·국민이 '일심동체'

벼랑 끝 노동자 안전

◎국경없는 산업재해 예방

국가마다 추락 예방 선제 조치 미국, 5월 첫주 사고 예방 캠페인 영국·독일, 안전장비 업그레이드 일본·싱가포르, 관리·감독 강화

건설업 추락재해 사망사고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사망사고 사례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재량 환기 출입 등을 위한 창이나 문) 덮개 파손, 노후 설비 유지, 안전도 미확충, 부주의로 인한 밧 헛딛 등 범규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사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동자 생명 보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e나라자료를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사고 사망인원(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0.46(여덟퍼센트)로 일본(0.14)보다 3배가량 높았다. 미국(0.37)·독일(0.15)·영국(0.03) 등과 비교하면 최대 19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주요 선진국의 산재 사고 감축 사례를 차용해 들여다보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추락사고 위험 현상저 축시 어려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12년부터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떨어질 재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매년 5월 첫째 주를

추락재해 예방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사립주·노동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추락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자발적 현장 참여'가 핵심이다. 노동자들은 일무를 잠시 쉬면서 고용주에게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책을 함께 모색한다.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OSHA는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일과 도시명·고용주·사고 설명·사고조사 보고서 등을 담은 '추락 사망사고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매년 5월은 사다리 안전의 달로 지정해 추락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이런 노력은 건설업 노동자 추락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미국의 건설업 노동자 수는 2017년 107만명에서 2018년 112만명으로 4.7% 늘었지만 건설업 추락재해 사망자 수는 389명에서 340명으로 12.6% 감소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인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영국도 건설업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다리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자발적으로 작업장이 낡고 불안정한 사다리를 새 제품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교체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HSE는 2007년에 캠페인을 시행한 후 2009년까지 3년간 7000여건의 불안정한 사다리를 교체했다. 2011년부터 영국 사다리연합회가 캠페인 사업을 이어받았다.

싱가포르는 2005년부터 노동자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는 취지로 '비전 제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고소(高所)작업 안전 연·기업 감시 프로그램 정책과 함께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체계로 자리 잡았다. 캠페인 시행 후 유과도 분명했다. 싱가포르의 산업 재



해 사망사고인원은 캠페인을 도입한 기점인 2004년 0.49에서 2018년 0.12로 약 75%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중흥기술로 '노동자 안전' 뒷받침
 각종 신기술로 노동자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독일은 건설 현장에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수평안전대 부착설비·슬래브 거푸집 조립 시 추락사고 예방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능동형 추락방지시스템은 안전대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활용도 노동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추락 높이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 추락 위험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던 기존 평가체계를 구체적

으로 수치화했다는 데는 작업의 위험성을 투명명화해 나열하는 효과를 냈다. 영국은 2015년 '고소작업에 관한 제도'를 도입해 추락사고 감축 효과를 보고 있다.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전 과정의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영국은 철근구조물 지붕에 패널 등을 설치한 데 '롤링 트롤리(Rolling Trolley)'라는 레일이 깔린 이동용도를 만들어 자체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락방

호망이나 부착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시공 과정에는 에어메트를 활용도목 권고하고 있다.

사고방지 기업 속아내는 각국 정부
 '대리 눈'으로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기업은 적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건설사업 원·하청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관리를 의무화하고 대상 공사별로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계획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비계(임시 가설구조물) 추락 등에 관한 특별규칙을 제정도 관련 규정도 고쳤다. 추락방지 의무 기준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작업발판·안전대 등 설치 요건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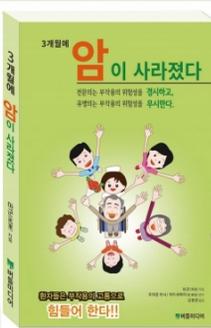
싱가포르는 기업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보건 관리 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업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18점 이상이면 해당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나 취업허가 연장조치에 관한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근로자 수요가 많은 자국 산업의 특성을 활용도 사업주의 법 준수 범위를 강화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처음 격상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은 나라의 국제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걸맞은 안전체계를 갖춰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최재원 기자 jchoi@kmb.co.kr

국민일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3개월에 암이 사라졌다'



전문가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유명인의 부작용의 위험성을 무시한다.

본서는 암재발, 전이방지와 일상생활로 복귀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 방사선, 수술에 대한 효과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부작용과 독성에 대한 무지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방사선 물질에 대응, 키쿠 키토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은 항암제의 실제를 알고 하루라도 빨리 중요한 결단을 내리자.

키쿠키토산

선착순 20곳

일본생물화학(주) 한국지사는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15년만에 처음으로 키쿠키토산을 취급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상담자 TEL. 010-9917-1699



전자책 인터넷 교보문고 전자책 (Play store >> 교보 ebook 설치 후 구입)
 위암치료와 식도암치료 3,000원 위암치료와 담낭암치료 3,000원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암치료법 5,000원
 폐암치료와 신장암치료 3,000원 대장암치료와 방광암치료 3,000원 유방암치료와 악성림프종치료 3,000원
 난소암과 자궁경부암 그리고 전립선암치료 3,000원

건설현장 33% 안전모도 안 썼다... 지난해 236명 추락 사망

벼랑 끝 노동자 안전

③ 추락위험 일제점검(끝)

고용부, 3545곳 현장점검 실시 69.1%에서 추락위험 요인 발견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에 과태료 정기적 점검으로 예방체계 마련”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난간·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상당수였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체계마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산업체별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사라진 안전모’ - 참담한 현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3545개 건설현장 중 2448개(69.1%)는 안전조치가 미흡해 추락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이 처음 이뤄진 것으로 바뀐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800여개 팀이 투입돼 10여 미만과 10여 이상 사업장을 각각 3080개(86.9%), 465개소(13.1%)를 점검했다.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고용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건설현장 추락위험’을 지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산업체별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51.9%·458명)이 가장 많다. 건설업 예에서 추락사



사진=게티이미지

고 사망자가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공단은 고위험 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안전조치가 잘 갖춰졌는지, 안전대·안전모·안전화 등 노동자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건설현장 10곳 중 7곳에서 추락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했다. 개인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소(46.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현장이 1156개소(32.6%)로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도 안 쓰고 현장을 누빈 것이다. 이밖에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장은 834개소(23.5%), 개구부(재량) 랑기 출입 등을 위한 장이나 문) 덮개 등 안전시설 불완전 사업장이 382개소(10.7%), 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실패 미설치 사업장이 347개소(9.7%)였다.

더 이상의 일회성 현장점검을 없다 건설현장 추락위험 점검결과에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 조

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10개 현장은 패트를 점검과 연계해 한 번 더 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공단은 건설·제조업 등 산업체별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오는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게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가업 사고사망자 201명 중 95명(47.3%)은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 기계·기구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또 12명(6.6%, 7%)은 기계·기구를 정비·보수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작업발판 미설치	834
안전난간 미설치	1665
개구부덮개 등 불완전	382
추락방지용 등 미설치	347
자중작업 안전조치 불완전	128
일비계작업 안전조치 미확인	19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불량	1156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설비·제도 표준화 이런 시급 노동 전문가들은 “속된 강경식” 산재 사고 예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전방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와 제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재 사망 감축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분야에서의 선제적 조치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5월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 중 유일하게 조영우 현직중공업 차장이 사업장 내 대형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공로를 인정받아 참관산업훈장을 받았다.

조 차장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37명 동안 신서천화력기전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았다. 이 기간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 차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장이 있는 실례해서 300 이상 무개의 중량물(보일러·터빈 등)을 도르려고 옮기는 재제시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 모든 작업 과정을 안전에 맞춰 조정하고 맞춰 표준화했다”며 “중량물 인양 시 표준 재질 기준을 수립해 점검기관에

확인 후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타워크레인 등 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본격 작업 전 발사자(한국중부발전)와 협의해 안전체표와 옥상작업 시 시설 10종을 현장에 구축하는 데도 앞장섰다. 가상체험(VAR) 기기 10대를 플랫폼 공정에 맞춰 제작하고 도중 노동자가 공경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또 밀폐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밀폐공간을 70~80곳으로 크게 늘려 지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밀폐감시자 여러 명이 상시 감측을 하도록 편성했다. 밀폐공간에서도 감시자가 환풍기·측정기 등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수칙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표준화했다.

안전계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시 될 수 없다”며 “사람사고 감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장관리와 의식·문화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철 기자 jchoi@kmb.co.kr

국민일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이슈페커) 기획비

임상시험 특화된 당뇨화 고품질 품목
특허번호 : 특허 제 10-0687192호
국내최초 특허특허 인증 획득
발명의 명칭 : 충격완 흡수하고 압력 집중을 완화하는 구두용 미를 포함하는 당뇨화

특허받은 당뇨화 적용 깔창 / 국내최초 종합병원에서 임상시험 완료!

충격완화, 무릎 충격흡수, 날아가는 듯한 구름보행이 가능한 기능성 깔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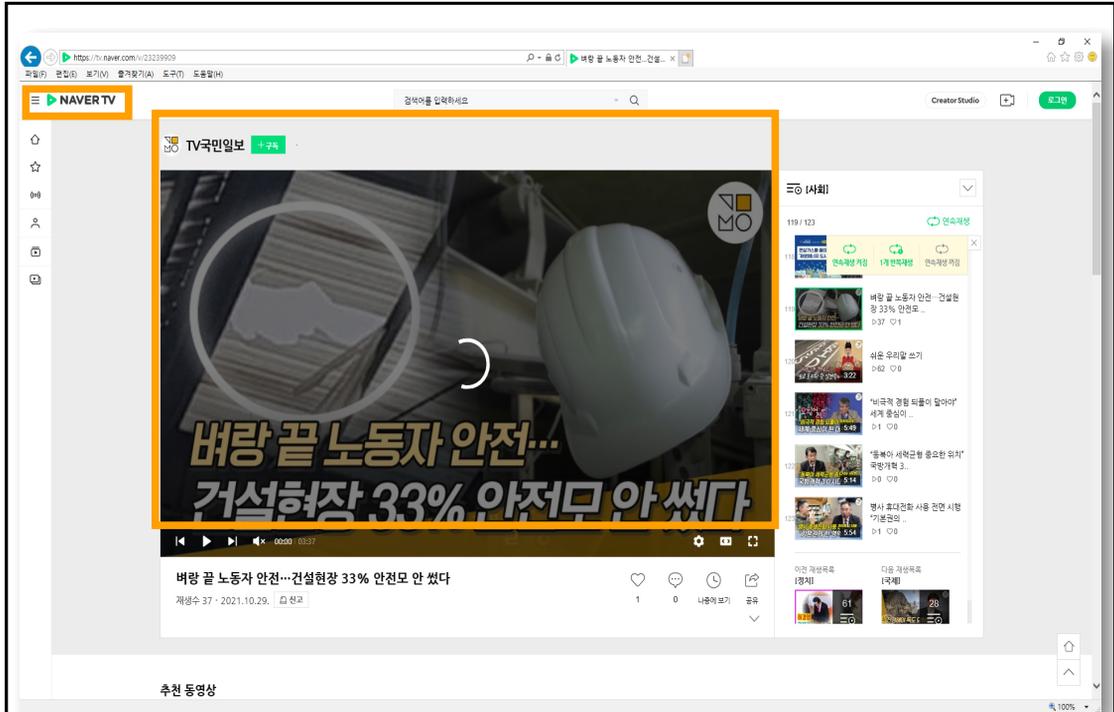
당뇨를 앓는 사람들에게 신발과 깔창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바이오텔 오솔라이트 깔창 (면파동형)

은 나뭇잎는 갖기야. 미백제 출산한 미백제도 오솔라이트 깔창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단돈 5천 원에 불과한 가격에 줄어든 것만으로도 편안한 지면의 충격을 감소시켜 준다. 장미는 장미는 제품이다. 특히 오솔라이트는 세 계적으로 안정하고 항균하고 항균성이 강한 제품이다. 새로운 신발

이 잘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들에게 바이오텔 깔창을 권장하는 이유는 안정감있는 쿠션감과 뒤꿈치 지지 않는 부드러운 감촉으로 발이 편해지고 보행이 안정되고 신발과의 마찰 공기를 순환시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신발을 바꾸지 않아도 깔창만 바꾸어 주는 것으로 새로 산 신발같은 신축성 나뭇잎을 받을 수 있다.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수상 경력이 많은 주드 품질과 효과는 탁월하다. 발도 부푼만큼 매우 우수한 제품이다. 장미로 인해 발이 불편한 사람이나 평소 기성화가 잘 맞지 않아 보편적마다 신발이 핏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바이오텔 깔창을 사용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나이가 드신 장년층이 후의 불편을 무릅쓰고 진해지는 지면의 충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충격완화 깔창이 있는 신발이나 깔창으로 편안한 안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다. 바이오텔 깔창은 과학자 발명품사가 진정할 수 있으며 50%발인기에 무료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품사이즈는 225-275mm까지 청신에서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정사이즈 신발이 가능하다.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99-3825



Naver TV 게재(포털 검색 시 콘텐츠 노출) 및 배너 캠페인

2021년 대한민국 경제선진국 진입... 산업 안전의 국격은?



벼랑 끝 노동자 안전

지난해 5월 경북 구미시 축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선라이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동료와 함께 자재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시계 멈춘 건설현장 '비상불'

지난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9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현장 신재사망 절반은 '추락사'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3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추락(墜落死)한 것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사고 지뢰밭'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다.
노동자 추락사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6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억~120억원 미만과 12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각각 45명, 29명이 사망했다.



작업발판 · 안전간판은 '노동자 생명줄'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비계(임시가설구조물) 등이다. 공사장에 뱅 둘러있는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추락위험 일제점검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일 산업재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본격 나섰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큰 건설현장의 고위험 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안전조치가 잘 갖춰졌는지, 안전대·안전모·안전화 등 노동자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사라진 안전모' ... 참담한 현실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안전간판·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상당수였다.
3545개 건설현장 중 2448개소(69.1%)는 안전조치가 미흡해 추락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전설비 · 제도 표준화 마련 시급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률만큼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최대 1.0에 7배 정도 높다. 신재 사고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 전방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와 제도를 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추락·개입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관행 변화를 유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위험기계가기구 교체 지원의 '안전투자 혁신사업'과 일제해 작업 발판, 추락방지망 설치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중심사업 등을 통해 신재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안전은 나라의 품격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국격을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운 민낯이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차등 격상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
나라의 국격과 연결될 수 있는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갖춰야 할 때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03 (주)한국경제신문

사업명

산업안전 캠페인

실적

온라인 배너 캠페인 및 지면 캠페인 등 추진

내용

- 온라인 배너 캠페인 : 3개월
- 산업안전 관련 지면보도 3회
- 온라인 카드뉴스 캠페인 : 1회



한국경제매거진(캠퍼스잡앤조이)
<http://www.jobnjoy.com/>



한경닷컴(모바일한경)
<http://plus.hankyung.com/>



모바일한경 인스타그램 (mobilehankyung_official) 게재내역

B 4 2021년 10월 29일 목요일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울산·포항

한국경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

합동취업지원센터 이사장

합동취업지원센터 이사장인 김민준 이사장은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에서 열린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을 위한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합동취업지원센터 이사장인 김민준 이사장은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에서 열린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실적과 경영 성과, ESG 경영 성과와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종이로 보던 국가자격시험 컴퓨터로 - 디지털 전환 속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

합동취업지원센터 이사장인 김민준 이사장은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에서 열린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간 실적과 경영 성과, ESG 경영 성과와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총력’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ESG 경영 컨퍼런스에서 “ESG 경영 디딤돌 삼아…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ESG 경영 1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간 실적과 경영 성과, ESG 경영 성과와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ESG 경영 2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ESG 경영 3단계인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 후 ESG 경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전국면(‘21.10.29)

04 안전신문사

사업명

“추락, 끼임, 충돌, 질식” 4대 악성 사고사망 근절 캠페인

실적

신문지상 캠페인 7회, 카드뉴스 7편, 안전보건영상 제작 8편, 파워인터뷰 4회, 책자제작,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기획기사 5편, 기획광고 7회, 전문가 칼럼 10편 등

내용

- 신문지상 캠페인 : 7회(지면 및 홈페이지)
 - 사고 알아야 예방법 보인다
 -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안전에 날개 달자 등
- 카드뉴스 : 7편(홈페이지 및 안전신문 인스타그램)
 -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지원
 - 산재사망, 어디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등
- 안전보건영상 제작 : 8편(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
 -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 4대 악성 사망사고!!
 - 언제나 웃어야만 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충 등
- 파워인터뷰 : 4회(지면 및 홈페이지)
 - 윤준병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안전을 말하다’ 등
- 책자제작 : 단행본 1권
 - 4대악성 사고사망을 줄입시다 <추락·끼임·충돌·질식을 피하는 방법>
-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기획기사 : 5 편(지면 및 홈페이지)
 - 산재사망자 1위 고소공간 추락재해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사다리 추락) 등
- 전문가칼럼 : 10편(지면 및 홈페이지)
 - [윤충식]산업재해를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 [이윤정]예외주의와 안전불감증 등



창간 32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520호

safetynews.co.kr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산업안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 만들자’

문 대통령, 령책 사고 이선호 씨 조문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명확히 규명
전국 헌안 일제집행... 유사사고 예방

원와하는 문대통령이 지난 19일 평壤에서 일화나 나체로 송진 고 이선호씨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송진 고씨는 이날 이가 의결을 마칠 때 ‘말을 전했다고 생애는 정다. 헌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무회의에서도 ‘이날 사고가 령책이라는 공중 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과반이 비상회의 대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고지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간 기발한 조지현상을 공취하는 헌안 추수 유사비 사고예방을 위한 주체적인 방안을 논의, 마련했다. 마한된 때에 이대 비호는 유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 사법조치

권력기관 편이 대 이선호 씨 부인은 “절차와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재발 없이는 이런 사고를 낚아챌 때”라 이날 조문으로 우리 아가 의결을 마칠 때 ‘말을 전했다고 생애는 정다. 헌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무회의에서도 ‘이날 사고가 령책이라는 공중 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과반이 비상회의 대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고지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간 기발한 조지현상을 공취하는 헌안 추수 유사비 사고예방을 위한 주체적인 방안을 논의, 마련했다. 마한된 때에 이대 비호는 유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 사법조치

문대통령은 지난 19일 평壤에서 일화나 나체로 송진 고 이선호 씨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간 기발한 조지현상을 공취하는 헌안 추수 유사비 사고예방을 위한 주체적인 방안을 논의, 마련했다. 마한된 때에 이대 비호는 유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 사법조치



문대통령은 지난 19일 평壤에서 일화나 나체로 송진 고 이선호 씨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간 기발한 조지현상을 공취하는 헌안 추수 유사비 사고예방을 위한 주체적인 방안을 논의, 마련했다. 마한된 때에 이대 비호는 유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 사법조치

2021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주력·기밀·중동·집식 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질식=사망’... 구조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악성 중 악성사고’

본 취재팀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신문을 통해 합니다.

본 취재팀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신문을 통해 합니다.

**봄·여름철 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서 빈발
고용부, 위험정보 발령... 내달까지 집중점검
안전보건공단, 질식예방 예방장비 무상 대여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등도 측정·환기 필수**

질식을 예방하려면 ‘4대 악성 사고사망’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임시다를 주제로,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임시다를 주제로,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임시다를 주제로,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질식예방’에 대한 실용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임시다를 주제로,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임시다를 주제로, 특히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 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 ▶ 과 ▶ ▶ ▶ 를 이용해 불러 주세요!

www.shai.or.kr

원칙을 세우는 바른 사람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융합Project

SHAI 3.3

• 중대재해 예방 • 안전보건 점검 • 중대재해 대응 •

특허출원 중
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SHAI)
“Shai as a boy’s name is of Hebrew and Arabic origin, and the meaning of Shai is ‘light’.
-shai- (SHAI, “circumspect” in Webster’s dictionary), careful to consider all circumstances and possible consequences.”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본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3-8F)
중대재해예방단 : 02-807-0003 / E-mail : shai3.3@shai.or.kr

[신문지상 캠페인] [2021년 안전신문 캠페인-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3편] ‘질식=사망’... 구조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악성 중 악성사고’(05.20.)



창간 32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 1527호

Safetynews.co.kr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사 모두 불만... 보완입법 요구

정부, 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작업장 질병 범위를 급성, 만성, 인과 관계 규명, 사업주 예방 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목록을 구체화하고 소상관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이 고려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지난 9일 정부는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이하게 관련 조지 등이 원해의 빈도보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만성,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부분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다.

반면 환경분야의 경우 이불 노출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무산성) 제외 50일 이상 치료 기간에 따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제외된 것만 제외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사업의 범위가

상해사고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지만 상해추적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콘서트장은 제외됐다.

중대 산재와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책의 의무의 경우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 등 안전 관리 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하면 예산·인성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는 별다른 시행령에는 좀 더 구체적인 관리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것이 경총 등 경영계 등의 주장이다. 2면에 계속

2021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락·기임·중독·질식' 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백화점 고용노동부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첫번째 현장점검으로 지난 14일 건설현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첫 작품 '격주 현장점검'

격주로 건설·제조업 안전 면밀히 살펴 오는 28일 제조업 가업요인 집중 확인

과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점검을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추락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미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불량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 폐사할 제조업 반드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오는 28일 시행되며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의 날 운영기간 동안 추락·기임·질식·중독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현장의 경각심 제고와 안전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마치고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을 넘어 사업현장의 산업재해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강조하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기임 등 재해 유형 재해율도 낮추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본 캠페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신문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진흥원, 안전전문기관 최초 'ISO 45001' 취득

중대재해법 대응대책 등 제시 하반기 6개 지사 인증도 추진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을 공식 인증받았다. 국내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는 처음 달성한 성과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KSR인증으로부터 ISO 45001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김강실 KSR인증원 회장,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 김강실 KSR인증원 회장은 "안전보건진흥원의 ISO 45001 인증은 ISO 45001 인증기관으로서 '최종'이라 '건설'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증과 관련,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수여식

안전보건진흥원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KSR인증으로부터 ISO 45001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김강실 KSR인증원 회장은 "안전보건진흥원의 ISO 45001 인증은 ISO 45001 인증기관으로서 '최종'이라 '건설'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에서 김강실 KSR인증원 회장은 "안전보건진흥원의 ISO 45001 인증은 ISO 45001 인증기관으로서 '최종'이라 '건설'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AMPLIFIED FLEXIBILITY & COMFORT
SUBLITE CASUAL WORK WEAR SERIES

대리점 모집

MINI BLOCK 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 (인증번호 : 12-AV2CY-00042)

1. 폭격관공과 추락에 대비하는 3중 잠금 방식
2. 계층기 소용돌이 및 산락방지
3. 작업상태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조절이 가능한 한바퀴조절장치 탑재
4. 화염차단기능으로 안전이 향상

구분	모델명	길이	중량	중량	중량	중량	중량
Mini 2.8	Mini 2.8	173x10	112	143	30	1.1kg	
	Mini 2.8	173x10	117	143	30	1.2kg	
Mini 3.2	Mini 3.2	173x13	130	160	33	1.3kg	
	Mini 3.2	173x13	136	160	33	1.4kg	

대리점 모집
COV (주)코브인터내셔널 041-363-5777
서울 02-633-0210 | 부산 051-956-9299 | 대전 042-658-0201 | 대구 053-811-5777

[신문지상 캠페인] [2021년 안전신문 캠페인-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6편]산업안전보건본부 첫 작품 '격주 현장점검'(07.23.)

(이쇄매체) 31면 110



창간 32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532호

Safetynews.co.kr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산재예방은 경영층 리더십이 중요 하반기 안전보건 최우선 실천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사망사고 발생 10개 건설사 대표에 당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사 대표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안전 재해 분석 결과를 전달하며 하반기 재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롯데건설(주), (주)대영건설, 마린건설(주), 효성

중공업(주), 두산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건설안전계를 이끌어가 는 임제이면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산재예방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제에 반의 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안전안전의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안 경장은 “유행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최했다. (가운데) 안경덕 장관은 “장제에 반의 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안전안전의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희환 기자

‘안전한 추석 보내기’ 화재안전대책 마련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청, 오는 23일까지 추진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안전대책을 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 는 오는 23일까지 화재취약지역에 대 한 예방활동과 연휴기간 특별경계근 무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청은 먼저 산업시설(공장·창고,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운수시설(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 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기로 했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 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

치하는 행위 등을 점검으로 점검에 위 반 사항을 선제 조치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화재(화재) 등 코로나-19 관 련 시설의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 고 자율적으로 화재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실질점검 시행키로 했다.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오 는 17일부터는 소방관서장이 재난을 대비해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비상대태세에 가동된다. 또 이통업체가 증가하는 가사 등 대 중교통 시설에 구급차 및 소방차와 소 방관을 배치해 현장에서 초기의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 급증 에 대비해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고 응 급의료 상담사(사)와 의료기관-어국 운영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가운데) 안경덕 장관은 “유행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

2021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락·끼임·충돌·질식’ 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안전관리뉴스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날 따라 해봐요”

“일사 후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여러 경력을 사정받게 건의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가이드북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인테리어(중소기업) 소속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가이드북은 이해하기 쉽네요.” - B제조(중소기업) 대표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통제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속 개선하는 일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필수다. 여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사업주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77지 핵심요소·우수사례 등 담겨

행을 눈앞에 둔 산업현장의 일선 사업장에서 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를 통해 삼가했듯 중소기업 등 일선 산업현장에서 이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안전을 위해 필수다. 여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

본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과 안전신문이 함께 합니다.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 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cov-int.com

AMPLIFIED FLEXIBILITY & COMFORT
SUBTLE CUSHION WORK SERIES

대리점 모집

MINI BLOCK 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품 (인증번호 : 12-AV2CY-00043)

1. 즉각적으로 추락을 막아주는 이중 잠금 방식
2. 재물이 소형화 및 경량화
3. 작업상황에 맞게 힘줄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원터치조절장치 탑재
4. 회전과부적으로 영입이 없음

Model	힘줄 길이	중량	길이	중량		
Mini 3.0	3.0M	17.5 x 2	117	141	30	1,160g
Mini 4.0	4.0M	17.5 x 2	117	141	30	1,205g
Mini 4.5	4.5M	17.5 x 2	119	156	32	1,850g
Mini 5.0	5.0M	17.5 x 2	119	156	32	1,940g

대리점 모집
서울 02-2625-0770 대구 053-255-2290
인천 02-639-0001 부산 051-818-5777

[신문지상 캠페인] [2021년 안전신문 캠페인-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7편]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날 따라 해봐요”(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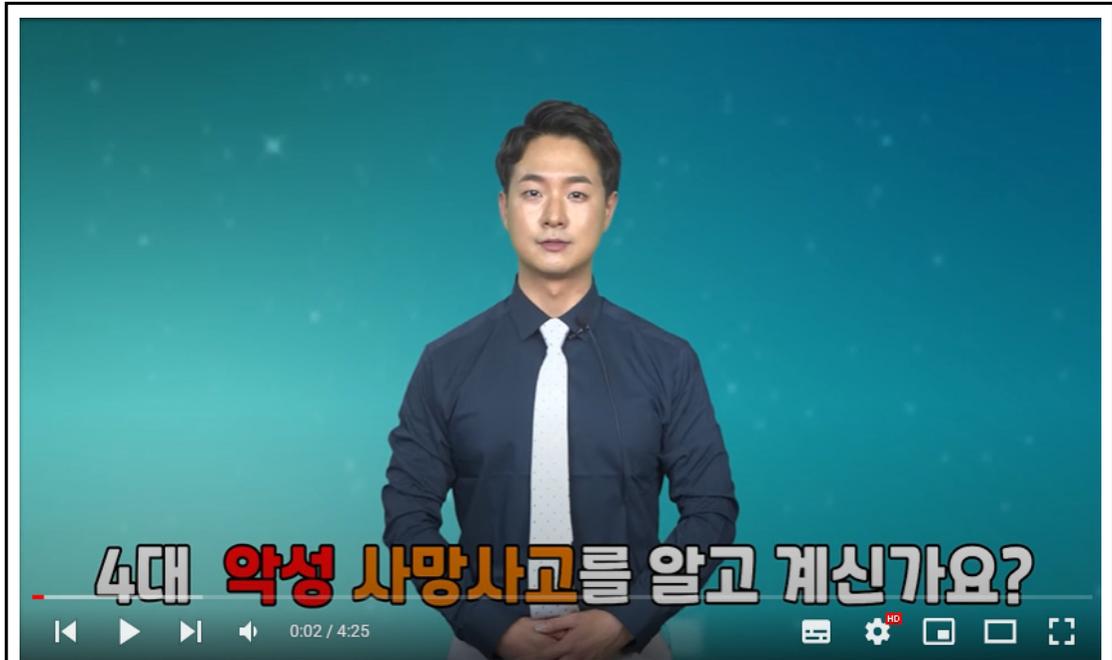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지원!

[카드뉴스]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지원(03.31.)

산업안전보건본부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는?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본부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는?(07.22.)



[안전보건영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 4대 악성 사망사고!! (04.12.)



[안전보건영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알려줄게(06.11.)



창간 32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529호

Safetynews.co.kr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사망뎀 최고 '무기징역'

정부, 광주 철거 공사 재발 차단 하도급 해체공사 안전 대책 강화

앞으로 건물 등의 해체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보면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자진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관련법상 연면적 500㎡ 미만 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

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의 건축위원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체계획서에는 영상 촬영 등 중간가 작성해야 하고 만약 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중요 해체작업시에는 영상 촬영이 의무화되고 건축물 규모와 상한 없이 공사장 주변 도로가 혼잡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을시 세제 하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해체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소도 영도록 해 체공사 착수 지원 지침 개정과 같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만약 업 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자가 적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도 과태 및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겼다.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당청 협의에 나온 내용대로 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토 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기로 했다.

특히 만약 불법 하도급을 통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관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도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드라이프' 아웃토록 선정된다. 정민혁 기자



인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시 송로구에 위치한 콜센터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인경덕 고용부 장관, 콜센터 방역상황 점검

인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시 송로구에 위치한 콜센터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시설인 사업장, 콜센터 등에 대한 방역현장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콜센터 텔레마

케타의 상담 현장을 찾아 방역관리자 지정, 작업중 마스크 착용, 좌석간 칸막이 설치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인경덕 장관은 "최근 직접내 코로나 감염이 새삼스럽고 있어 방역의 긴장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라며 "자

를 확대하고 일과 후에도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안 장관은 "어를 휴가를 8월초에 집중하지 말고 9월부터 확대-분산해서 사용하고 휴가시에도 사담들이 많이 몰리는 휴가지를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안전신문의 혁신 캠페인
윤준병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안전을 말하다

"끊임없는 중대 산업재해, '근로감독시스템' 작동안돼 발생 시·도지사와 감독권한 공유해야"

2021년 안전신문의 혁신 캠페인을 위해 소용과 등7의 주역과 권역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2021년 안전신문의 혁신 캠페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2021년 안전신문의 혁신 캠페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와 감독권한 공유해야"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2021년 안전신문의 혁신 캠페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와 감독권한 공유해야"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주전자같은 의정 활동을 표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전자는 항상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고 고개 속이 결혼하게 자기를 내놓습니다. 또 주전자는 구멍이 있어 늘 소용과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과 용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자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충을 듣고, 기후환경 등 관련 현안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열대 비정규직 채용 개선과 노동자 안전 보장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일반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결심한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하고 근로감독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실제 예방을 위한 수많은 입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2면에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

마련했지만 중대 상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의 근로감독시스템이 산업현장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을 지속 충원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현재 근로감독관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해 공유한 후 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위촉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위법하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내용을 기세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처 이기주의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설분야 전문 대리점 모집 031-5183-9118

건설산업 현장에 특화된 인공지능 통번역기, 지니톡 고2

- 외국인근로자 교육
- 1:1 컨설팅
- 소용 많은 현장 OK!
- 인타석이 없어 OK!

한컴라이프케어 HANCOM LifeCare

안전관리비 품목 가능

다국적 근로자와의 현장 소통을 위한 필수 안전장비 산업현장의 안전 - 명확한 소통에서 시작합니다

- 건설산업용 언어팩 포함 (건설산업용 용어 400여개)
- 65개 언어 동번역 지원
- 소용 많은 현장에서 사용 가능
- 장문 번역 가능
- SIM카드 사용 가능
- 사진/이미지 번역 가능 (12개 언어)
- 음성인식 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 인공지능 대표기업 iFLYTEK(중국정부선정의 중국어 번역 정확도 9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문 신청 번호: 1AA-1910-298435, 고용노동부 인문 처리 접수 번호: 2AA-1910-336618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다국적 언어 번역기 한국투자개발공사 100% 시범 운영중

[파워인터뷰] 윤준병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안전을 말하다'(08.12.)



창간 32년

안전신문

Safetynews.co.kr



We Cover You
코브 인터내셔널
Tel. 041-939-5777
Fax. 041-939-7999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536호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 누가?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해야”

고용부·경찰청, 관할 다름 속
관련 법안 법사위에서 논의돼

중대재해처벌법(사내재해와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간의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 실제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중대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와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의 수사 주체라는 이유로 두 기관의 ‘갈라치기’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 놓고 유관속 국회 법사위는 “수사권 관할권은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수진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수진 의원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등 중대 산업재해의 전담 수사권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라는 내용을 넣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이 중 박 의원에 초점을 맞춰 중대산업재해의 수사권 주체를

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원진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법과 관계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제106조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등 수사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법 102

조는 “수사권은 근로감독관에게 있다”고 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성격이 지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관련 공공기관은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공’)과 근로감독관의 공동 차원에서만 도출된 수사가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 산재 조사라는 것이 산업현장의 공정을 알아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등 일반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익 기자

찰도 중대산재에 대해 적어도 2차적이나 보충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경찰청의 의견 피력 후 유관속 국민회의 의원(법사위)은 “정부 부처간에 관할 다투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전문가이지 법사위냐”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하는 게 있는데 경찰청에서 ‘무리’로 하겠다’며 ‘우리 관 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산재 수사권에 대한 양측의 노동

부의 손을 들었다.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관련 공공기관은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공’)과 근로감독관의 공동 차원에서만 도출된 수사가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 산재 조사라는 것이 산업현장의 공정을 알아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등 일반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익 기자



2021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전을 말하다’

“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1차적 책임져야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기업의 리스크 감소시켜 안전한 일터 만들어 줄 것”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시키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진본가들은 2021년을 산업안전문화의 대변하는 해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만나 향후 변화와 앞으로의 정부 대응방향을 들어봤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100일이다. 본부장으로서는 기간 소화는?
- 산업안전보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재사망사고 감축 목표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환경을 조성한다는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국(府)민위 조직을 본부단위로 작성할 것이다.
“별 출방 후에는 일 할 일이 지어 안 갔다. 총리님을 모시고 7월 13일 출방식을 개최했고 다음날에는 전국의 모든 관공관들이 중소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의 추방과 같이 위험요인을 계속마다 일제 점검하는 장에서 안전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하는 많은 일부 속에서도 목적이 소와 제조업체 3800여개소를 점검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말까지는 일정한 사업 처리를 완료치 위해

“노동자들은 작업 전 10분만 시간을 내서라도 작업 중 위험요소는 무엇이며 안전조치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정을 집중연속하고 있다. 또 건설, 화력, 유류탱크 등 주요 업종의 사업주의 건립의무 순차적으로 개최했고 중대 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건설사의 경우에는 본사가 물론 전국의 건설현장을 동시에 감독하고 있다. 아직 사고 사망자수 공식통계가 높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현장의 추방과 같이 위험요인을 계속마다 일제 점검하는 장에서 안전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하는 많은 일부 속에서도 목적이 소와 제조업체 3800여개소를 점검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말까지는 일정한 사업 처리를 완료치 위해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 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 잡고 함께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

- 손잡이 잡고 이용하기
- 걸거나 뛰지 않기
- 노란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종합민원센터 1566-1277

[파워인터뷰]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전을 말하다’(10.07.)

지붕공사 추락사고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로 해결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협용 설치비 3000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지붕공사 중 추락 사고를 방지 위해 신규개발된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보급에 나섰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구입비의 7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사용 후 수거할 수 있는 일정한 무게와 충격에 견디는 3.8kg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지붕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를 신규개발하고 지난 5월부터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보급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를 방지 위해 신규개발된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보급에 나섰다(사진은 채광창 안전덮개 점검 현장 모습).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보급금 지원 방안이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한 현장의 안전덮개 설치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덮개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전덮개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전덮개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자는 “채광창 안전덮개의 개발 및 제조비용을 통해 지붕공사 중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안전 실천으로 산업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산재예방 연구·예산 태부족... 산재예방투자 후진국”

장철민 의원, 2020 예결총서 “R&D예산 반영 국회책 6곳뿐... 그마저 비중도 1% 미만” 지적

산입제에 영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예 내’라는 장철민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정부를 향해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의 소폭 증감만 특별위원회 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입제’에 영향을 위한 연구는 생략된 종합연구 과제인 ‘산입제’가 필요하지만 정책 산입제에 영향을 위한 예산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R&D 사업은 주로 국회 연구개발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과학기술원은 경제

인사과학기술원(NRO) 산하 26개 연구기관, 지역과학기술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6개의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는 미비했다. 장 의원은 경제인사연구회 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연구개발 산입제에 R&D 예산 반영을 분석한 결과 전체 50곳의 국회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입제 관련 예산은 산입제에 영향을 연구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총액(원)이 없으니 연구 진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관련 부처

인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 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또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루빙스튜디오 화재, 광주 건축용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안전을 미비하고 나타나 발생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는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입제 관련 예산은 산입제에 영향을 연구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총액(원)이 없으니 연구 진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관련 부처

장철민 기자

2021년 안전총과 혁신 캠페인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 ① 산재사망자 1위·고소공간 추락재해
- ②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사다리 추락
- ③ 제조업종 대표 악성 재해·기암사고
- ④ 건설기계 등 사각지대 주의하라·중물재해
- ⑤ 발생했다 하면 목숨 잃는 다·질식재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안전보건전문가까지 수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날 안전에서는 ‘죽거나 다치는 이들’이 발생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큰 특성이 있다. 특정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며 그 형태 또한 과거와 유사하며 대는 것이다. 이에 안전전문가는 지난해 5회에 걸쳐 4대 악성사망사건의 현황과 재해 사례를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882명중 328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사고 중 3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해 발생 형태별로 분류해 볼 때 가장 높은 사고비율을 차지했다. 추락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과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 밝혀졌다. 추락방호망도 이와 같은 이유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공정을 조정해 작업자에서 설치된 작업방판을 해제하지 않고 보수작업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치기 불발할 경우 구멍을 설치해 작업 중이 발생할 경우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드로워블록은 빠짐 위험이 낮은 링이 달린 것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재해사태를 분석해 보면 추락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다른 사고들에 비해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이 중요하다. 근로자는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체크 포인트

작업시작 전 작업내용 숙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하고 추락보호망 및 안전대 설치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하고 하고 철거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하고 하고 철거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하고 하고 철거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하고 하고 철거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하고 하고 철거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

경광등

차량용 싸인보드 / 슬러경광등

Creating mars light

▶ 차량용 싸인보드(사각모양) 1500x1500

▶ 차량용 싸인보드(사각모양) 1550x900

▶ 회전경광등 K1250

▶ LED 싸이키경광등 K1350 LED

▶ 스트로브 싸이키경광등 K1350 스트로브

▶ 970-47슬러 A형(10w)

▶ 1180-47슬러 A형(10w)

▶ 1800 슬러(5w)

▶ 1800 양방향슬러(5w)

▶ 1구 고출력 슬러 길고형(5w)

▶ 1구 로출력 슬러 길고형(5w)

▶ AC장형싸이키구경광등

▶ AC장형싸이키구경광등

▶ 차량장형싸이키구경광등 - 1180~1280 스펙치 - 봉고, 포티 1150 / 2.0 이상 로픽

▶ 차량 LED 6구 차량장형싸이키구경광등

경광등/싸이렌/신호등/엠프/전자봉/점멸기 제작

경광등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사동 210-2 Mobile, 010-3713-6223
Tel. 0212265-4980 / 2268-4980 Fax. 0212272-1286 Mobile, 011-713-6223

[인쇄매체] 신문 110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산재사망자 1위 고소공간 추락재해(09.16.)

20대 건설사 산재승인을 2년새 43% 늘어

박성민 의원, 복지공단 자료 분석 '상생물산엔지니어링' 승인 저조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대 건설사 사들의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가 2018년 건수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산재 승인 건수가 2018년 1807건에서 2019년 2243건, 지난해 2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봐도 1583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 수

도 있다며 예외가 나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방보 참사'에서도 확인됐던 건설현장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 승인이 늘어 나고 있다며 대담히 시달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2018년~올해 7월) 20대 건설사들에 대한 산재 신청은 총 9440건이었으며 이 중 823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생물산이 산재 승인을 가장 저조(83.88%), 태영건설(86.6%), SK건설(86.5%), 포스건설(87.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동 기간 이

는 20대 건설사의 사망자는 총 188명이며 8044명의 부상자가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산재 승인 기준)했다. 부상자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GS건설(1476건), 대우건설(960건), 대일건설(868건) 순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 열광에서는 안전을 지키고 싶어도 정부 자원의 적절한 기준이 없어 유감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상생한 안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관련적으로는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안전관리에 대한 범주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희 기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광주지역 건설현장 점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최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의 추라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9일 '안전점검의 날(태드데이-Day)'을 맞아 광주지역의 추라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3대 안전조치 중수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두용 이사장은 "건설업 추락사고는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최근 고층·고밀도 서울관악지정·서울남부지역과 함께 15개 현장 점검반을 구성, 지역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은 지난 7월 31일부터 광주로 시행되고 있다. 점검 범위 점검으로 이날 일제점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건설현장 책임자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최근 고층부 서울관악지정·서울남부지역과 함께 15개 현장점검반을 구성, 지역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카드보, 자물쇠요청, 추락 위험조각 등 Safety-light'장도 배포했다.

김도근 서울남부지사는 "이번까지 현장에 시행되는 일제점검을 통해 사

2021년 양성준이 약속 '국민의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양전보전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발생 원태면으로 분류해 볼 때 추락사해에 이어 끼임사해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끼임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망사고 유형으로 이후 오래될수록 전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악성 사망사고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한인간공학과 관련한 '제조업 끼임 사망'과 각종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끼임 사고는 주로 설비 기계에 의해 발생하며 구체적으로 벨트, 롤러, 컨베이어, 천공드릴, 지게차, 배양 탱크, 산입용 로봇 등에 의해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안동시 소재의 한 풍상에서 노동자가 배양기인 파인볼과 배양기 사이에 신체 삽입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재해자가 혼자 배양기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양기가 작동하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끼임 사고는 주로 노동자가 출퇴근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설비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고의 경우도 설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작업시 안전조치 없었기나 다른 노동자들이 기계를 오작동시키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이용해 작업중임을 알렸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작동을 막으려면 기계적 안전장치도 필요하

- ① 산재시 사망률 1위-고소공간 추락재해
- ②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사다리 추락
- ③ 제조업종 대표 악성 재해-끼임사고
- ④ 건설기계 등 사각지대 주의하라는 중대재해
- ⑤ 발생했다 하면 목숨 잃는다-질식재해

다, 작업자가 불규칙하게 안전장치를 등용 할 때에는 관련 설비 기능이 정지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신체나 옷자락이 끼임 경우 설비가 중단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다면 더욱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실제 대한인간공학회 연구 결과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계에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은 1152건으로 방호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해 방호설비의 유무가 끼임 재해에 영향을 크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에에도 작업자는 통

제조 포인팅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는 악성사고 안전달걀 등 방호장치 반드시 설치 위험작업은 2인1조로 해야 하고 표지판 설치해 '작업 중임을 알려야'

이 넓은 소내나 장구근이 달린 바지 착용을 삼가 해 끼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의 위장은 '끼임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해로 조차지 차원과 개인적 책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조작자 차원에서 반드시 시 사업장에 안전달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현장점검시 장치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조치 작업에 끼임이 일어나더라도 벨트가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본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과 안전신문이 함께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실집행 5000건... 선지급제 도입해야"

송재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써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00여건이 넘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수정 안건에 대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국외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에서 각종 사고가 줄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부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4m 아래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여 일만 훌쩍 넘어에서도 2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사"라며 "그나마도 사고의 원인이 좀 하나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산업법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이 계약 의무를 도입하여 모든 기업 계약에 반영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지출이 계약 수급업체 초과해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업체에 징정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용접·용단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법규 지켜 화재·폭발 예방하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23조(인명피해 예방) 등을 준수 하라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라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라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라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라

매월

산업안전법신문 무료 제공!

사업주 · 노동자 안전의식 고취, 아직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문제를 산업안전법신문이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안전신문사는 산업계별 유형별 취약시기에 맞춰 매월 산업안전법신문을 제작 ·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신문은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만화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물론 예방을 위한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행동의 변화로 이끄는 **산업안전법신문!**

지금 귀사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구독신청하시면 매월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작 문의 = ☎ 안전신문사 02-2275-3408

[중대재해로부터 배우는 안전] 제조업종 대표 악성 재해- 끼임사고(10.0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엔 효과 빠른 3대 안전수칙!

추락위험 방지

추락위험 방지 수칙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울망 설치 등

끼임위험 방지

끼임위험 방지 수칙
원동기, 회전축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 점검시 운전정지 등

보호구 착용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지급, 착용

산재예방엔 효과빠른 3대 안전수칙! (안전신문 지면 7회 게재)

2021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4대 악성 사고사망을 줄입니다

추락·끼임·충돌·질식을 피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주)안전신문사

책자 제작



창간 32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531호

Safetynews.co.kr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인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고용부 서울청 소회의실에서 차병교노동부장관과 안전보건공단 차재호부총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 사고 개편을 TF 대의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현장 10월까지 '무관용 원칙' 감독

인근 고용노동부 장관 '위기관용 TF 대책회의' 열고 "관련기관 기능자원 총동원 현장 위험요인 제거" 밝혀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안경미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광용 없는이러는 표현'이라 쓰여 또다시 산업현장에 대한 강력한 현장감독을 예고했다.

10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기능자원이 총동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전대책 TF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대책과 관련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관용 TF 대책회의를 열고 이의회의는 차병교노동부장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속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반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도 차병교 장관이 참석했다. 안경미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안전보건감독은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경미 장관은 "최근 6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시정하고 감독의 실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자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지원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별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감독을 위해 기존의 자원의 모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2021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락·가임·충돌·절식' 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임시다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왜 민감할까?



안전칼럼

정혜선

대한건설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당히 보세요. 분기별 매출보다 분기별 탄소배출량에 더 신경쓰고 야근 소크보다 자기가 밥을 먹어야 더 건강한 기업이 있다면 상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업의 신용 속도만큼이나 자구의 기후변화 속도를 걱정하고 혼자 글로벌 네이션이든 대신 자은 내비게이션을 키워내는 기업들의 세상은 지금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 글은 ESG를 표방하는 모 기업의 광고내용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다.

요즘 기업은 ESG 경영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만 매우 적극적이다.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활동이 직·간접,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추구했다.

ESG 중 사회적 책임경영을 뜻하는 'Social'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건 개선, 인권문제, 건강 및 안전, 직원 관계, 협력사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곧 산업안전보건을 중시해 이행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려면 산업재해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산업안전보건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와 닮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ESG 경영에 앞장섰었다

는 기업들이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에 부담을 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도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좋게 하기 위해 불우이웃 성금이나, 복지금, 기부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기업 내에 사회공헌팀이라는 전담 조직도 설치해 운영했다. 지금은 이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변질된 위험한 지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ESG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기업의 ESG활동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ESG활동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파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이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ESG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이 ESG 지표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ESG의

실질적인 지표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

ESG의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에는 산업안전보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기업에서는 위험적인 평가항목으로 ESG 활동을 하지 않고 ESG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려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도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품 구입을 확대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을 ESG의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ESG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

jhsgns@hanmail.net

* 본 칼럼은 안전보건공단과 안전신문이 함께 합니다.

매일 새로운 안전뉴스를 '인터넷 안전신문'에서 만나보세요!

YouTube에서도 다양한 안전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AMPLIFIED FLEXIBILITY & COMFORT
SUBLITE CUSHION WORK SERIES

Reebok

대리점 모집

MINI BLOCK 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품 (인증번호 : 12-AV2CY-00043)

1. 즉각적으로 추락을 막아주는 이중 잠금 방식
2. 세로의 소형화 및 경량화
3. 작업상황에 맞게 길이가 짧아질 수 있는 원터치조절장치 탑재
4. 회전고리부착으로 양립이 일품

Model	길이	중량	직경	높이	색상	수량	단가	총액
Mini 3.0	3.0M	17.5x2	117	141	30	1,142g		
Mini 4.5	4.5M	17.5x2	117	141	30	1,205g		
Mini 6.0	6.0M	17.5x2	117	150	32	1,879g		
Mini 8.5	8.5M	17.5x2	110	154	32	1,949g		

COV (주)코브인터내셔널 041-363-5777

대리점 모집
TEL 02-2625-0700 FAX 053-256-2298
181-0421-0201 041-363-5777

[전문가칼럼] [정혜선]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왜 민감할까?(08.30.)

05 매일노동뉴스

사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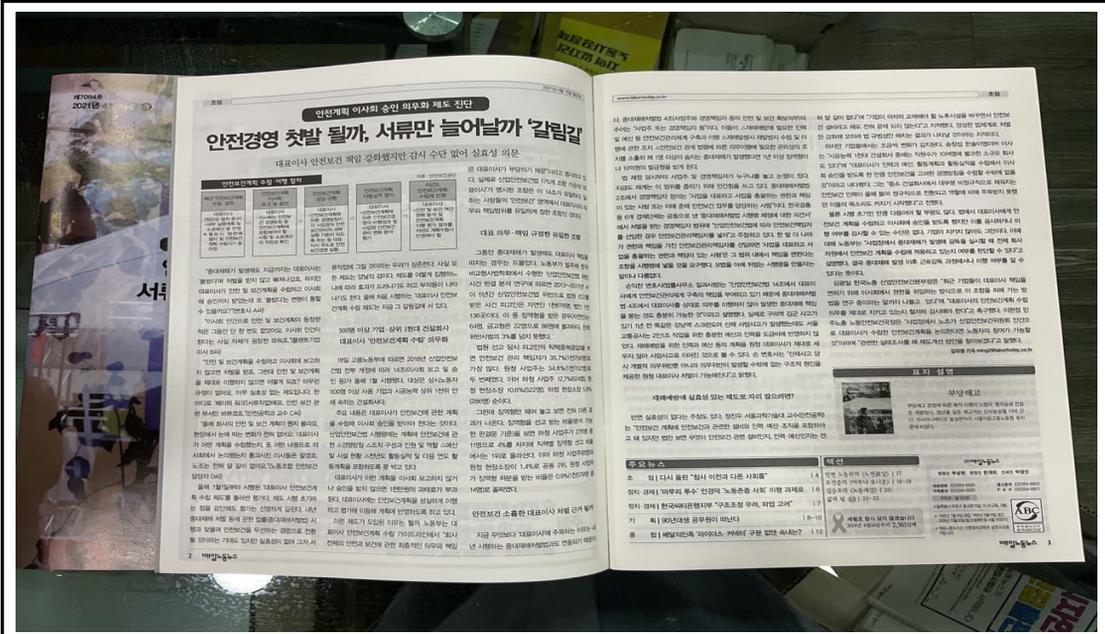
안전한 일터, 대표이사의 의무입니다

실적

기획·심층보도 및 칼럼, 사고사망 예방기획시리즈, 좌담회, 온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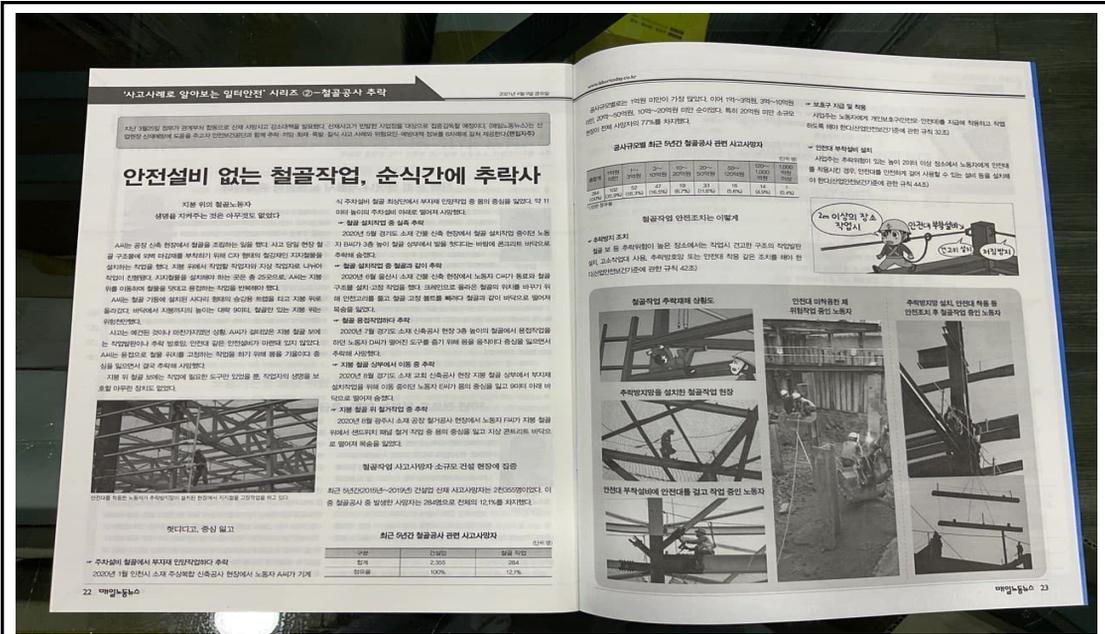
내용

- 기획기사 : 5회
 - 안전계획 이사회승인 의무화 제도 진단
 - 사고 재발 방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획기사
- 안전보건 전문가 칼럼 및 사고사망 예방 기획시리즈 21회
 -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일터안전 시리즈
 - 전문가 칼럼
- 전문가 좌담회 1회
 - 중대재해법이 재해예방법이 되려면
-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15회
 - 3대 안전수칙 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캠페인 광고 180일
 - 안전한 일터, 대표이사의 의무입니다



[안전계획 이사회승인 의무화 제도 진단] 안전경영 첫발뿜을까, 서류만 늘어날까 '갈림길' (2021년 4월 19일)

『인쇄매체』 신부호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일터안전' 시리즈 - ①개구부 추락 (2021년 4월 2일)

『인쇄매체』 신부호



전문가 칼럼 - 김은아 산업보건연구원장
(10년뒤 미래의 암을 예방하려면) (2021년 5월 10일)



전문가 좌담회(2021년 10월 27일)



3대 안전수칙 오프라인 광고(15회)

2021.07.14 | 인제출 기자

‘인력 감축’ 전제로 교대제 개편 설득 나선 서울교통공사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임금 단계교섭 안전으로 제한한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일선 노동자를 상대로 구조조정안의 해나간 교대제 개편 설득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

2021.07.14 | 이재 기자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160원

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월 191만4천4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천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로서 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인원 공약

사진이야기

청소 키트

칼럼

민주노동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누구를 위해 배송은 이뤄지는가

대표기

광고 안내 >
기사제목 >

구독신청

노동사건 따라잡기

판례기법
지위사 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본 이
예할 수 없는 판결

노동판례
공공기관 지위사 정규직 고용 불발판건 직접고용의무
이행한 것

노동위원회 결정
노동위원회 결정

안전한 일터
이 캠페인은 현안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많이 본 기사

- 1 이재용 사면 추진하는 정권 말...
- 2 [간호직 공무원 고 이한우씨] 6개월 460시간...
- 3 좁히고 좁힌 중대재해 범위, 논란의 정부 시행...
- 4 C대안통은, 중노위 만장 불복 '법원 판결 받았...

온라인 배너(안전한 일터, 대표이사의 의무입니다) 270일

06 국제신문

사업명

Never Again

실적

기획기사 5회, 특별 인터뷰 1회, 기자 칼럼 1회

내용

- 기획기사 1(2021. 08. 24)
 - 살려고 간 일터, 죽어서 온 그들(1면)
 - 배달 늦어면 배정 페널티… 오늘도 목숨 건 곡예운전(3면)
 - 단기 배달 라이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3면)
- 기획기사 2(2021. 08. 31)
 - 3년 새 산재 3배 급증… “우린 로켓배송 연료입니다”(6면)
 - “남을 위해 좀 참으라 했던 말 후회”(6면)
- 기획기사 3(2021. 09. 14)
 - 영세어선 사고다발에도 보험 소외… 안전관리는 이원화 혼선(8면)
 - 3t 미만 선박 어선원보험 가입자 전체 8% 불과(8면)
- 기획기사 4(2021. 09.24)
 - 안전교육 책임자도 없었다… 노동자 탓이 된 죽음의 반복(6면)
 - “40년 베테랑인 나도 못 피한 사고… 업주 압박할 수단 필요”(6면)
- 기획기사 5(2021. 10. 05)
 - “하루면 설치할 안전장치도 외면” 건설사 방치가 부른 죽음(6면)
 - 하도급·노동자 탓으로 못 돌리게 발주·시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6면)
- 특별 인터뷰(2021. 10. 26)
 - “후진국형 산재 증가… 처벌 강화하고 교육 병행을”(20면)
- 기자 칼럼(2021. 10. 28)
 -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을 없다(6면)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 0515500-5114

국제신문

부울경 최고신문 kookje.co.kr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1월 12일 오전 9시 4분 부산 수영구 현수항철쭉 산책로서 원동에서 노동자 시40대(씨) 19층 아파트 비계 작업대 위에서 철물 받수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1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부산항 남양항 20미터 직경의 정자선 1600 t급 유조선에서 불이 나 미안마 국적 선박 E300대 씨가 숨졌다.

#2월 12일 오전 5시 4분 부산경항청 소속 O300대 경강이 자택에서 쓰러져 치료 중 숨졌다. O 경강은 장기간 주말도 없이 집회 현장을 뛰다보니 등 두꺼우에 시힘으로 피아했다.

#2월 16일 오후 5시 4분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공에서 크레인 포탑이 해체 작업을하던 노동자 D500대 씨가 경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졌다.

#3월 22일 오후 6시 30분경 북구 이마트 건설 현장에서 도자기 시 40대(씨) 한 명이 추락하여 숨졌다. 이마트 건설 현장에 있던 도자기 시 40대(씨) 한 명이 추락하여 숨졌다.

#3월 7일 밤 10시 40분경 남구 도원동에서 배달 노동자 40대(씨)가 아파트 부딪혀 숨졌다.

#4월 14일 오후 6시 40분 해운대구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G500대 씨가 크레인

1번 사이에 끼어 숨졌다.

#4월 23일 오후 2시 20분경 강서구 한 신발 부품 공장에서 시 30대 기계가 폭발해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 H 600대 씨가 두개골에 맞아 숨졌다.

#5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구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노동자 H500대 씨는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 가세진 불길을 피해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해 숨졌다.

#5월 23일 오전 8시 40분 동구보전소 간혹적 공무원 J300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J 씨는 근로자 19로 장기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4일 새벽 전남 방에 작업 중이던 시 씨는 오수 초 밀포 작업 도중 경관을 잃고 사망했다.

#6월 22일 오후 5시 40분 조천소에서 일하던 130 t급 이선 선바 지대대 위에서 20여여 고경 작업을 하던 선장 L400대 씨가 추락해 숨졌다.

#6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금정구 이마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던 택배 노동자 M600대 씨가 차에 깔려 숨졌다.

#6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중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 N300대 씨가 130kg 무게의 추에 머리뼈가 맞아 숨졌다.

#6월 26일 오전 11시 4분 서해구 조천소 건물 확장 공사에서 노동자 20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다. 가세진 이산화탄소 누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7월 5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건물에서 화물용 승강기 리프트를 수리하던 O200대 씨가 승강기 통로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7월 9일 밤 11시 30분경 서해구 YK500대 공장에서 노동자 P500대 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7월 12일 오후 7시 40분 남구 이마트 외벽 굴삭 보수를 작업 중이던 O700대 씨가 추락해 숨졌다.

#7월 13일 새벽 4시 30분경 기장군 공설시장거리 라면에서 노동자 P500대 씨가 3m 지하 쓰러져 자택에서 숨졌다.

#8월 18일 오전 8시 40분 강서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S700대 씨가 입욕구에 상반신이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2021년 부산 노동자 사망 사건 기록>



태종 북상-대미한 아선들 제12호 태풍 요미에스가 북상하고 있는 23일 오후 부산항 5부두가 대미한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국힘 12명, 부동산 불법 의혹”

권위 발표-열린민주당 1명 적발 이르면 오늘 의원 명단공개 검토

국회의원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대립적인 정치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 의당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정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위원회 산 12명에 13건의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위원회 직원사항은 >부동산 명목 의혹 2건 >토지보상금, 간혹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권위원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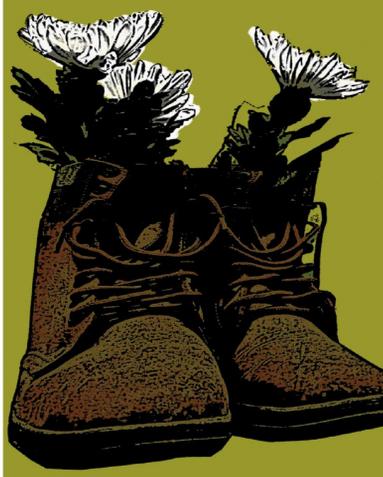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울경 의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에서 “사실 무관”이라고 부인했다. 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회의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들의 명단 공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에 1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의경 의원의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합법거래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특조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기사 5면 정영수 기자

살려고 간 일터 죽어서 온 그들

작년 산재 사망자 부산 295명-전국 2062명

취재 수업을 하던 일터는 유해한 현상 사망 사고다. 집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나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근로노동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12%가량 상승하며 사망자 수는 부산 295명이라고 전국 2062명이라고 다자간 1명도 사망한 부산 11명, 1명, 전국 10만 85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종받은 수만 이었다. 일터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의 수는 줄지 않는다.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전폭 2.1% 늘었고, 부산형은 전년보다 무려 10.5%가 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제신문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가능한 모든 기사를 직접 일터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 피기도 했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의 목소리도 들었다. 행장은 권고안을 내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일하는 다시 노동자를 죽이고, 뺄을게 하고, 다치게 할 것이다. 국제신문은 산업 현장 곳곳에 도시락 배달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조여외에도 양행 일터를 만들어는 기사를 보도해 시작한다. 이는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산업재해, 내내 아제안(Never Again)’!



BNK 캐피탈 장기렌터카

문의전화 1577-2280

BNK 캐피탈

국제신문 창간 74 주년을 축하합니다

AI KOREA 2021 2021. 9.1 ~ 3일간 **bexco 제2전시관 4층**

2021 K-ICT WEEK IN BUSAN

AI KOREA, IT EXPO, CLOUD EXPO 등 3개 행사를 통한 산학연협력 기술 및 네트워크의 장려와 교류, 물론 등 지역 특화 산업과 AI 기술과의 접목, 바이어 상담회, AI 기술 애용 상담회 등 투자유치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IT EXPO | **AI KOREA** | **CLOUD EXPO**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과학기술진흥원, bexco,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자산업진흥회, 한국경제신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배달 늦으면 주문 배정 페널티... 오늘도 목숨 건 곡예운전

산입재 Never Again

(1) 배달노동자가 쓰러지는 이유

지난 6일 부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낮 최고기온은 30.5도까지 올랐다.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어떡할 나가요.' 오전 11시 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역 주변 출구에서 만난 라이더 윤영연(38) 씨도 기자를 만나마자 걱정 섞인 인사를 건넸다. 이날 기자는 배달노동자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알리기 위해 도보 배달 체험에 나섰다. 배달 물량이 가장 많은 점심 시간대 서면역이었다. 라이더 유나은 소속은 씨의 도움을 받았다.

■아스팔트 열기에 시작부터 달 땀방울이 내리듯 주문은 서민 전포시장 내 '물고기집'이었다. 배달자는 음식 현장을 잘 이해할수록 상가 내 한 집도 아귀만큼 배달을 배내서 넣고 어떻게 냈다. 호기롭게 기차를 나오자 아스팔트의 열기가 온몸을 덮쳤다. 배달용 배낭을 메고 한 걸음 내딛자 등 전체가 뜨겁게 쫓겼다. 가게에서 배달지까지의 거리는 약 700m. 평소 같았으면 운동 삼아 걷기 좋은 길이었지만, 무더위 탓에 너무 달게 느껴졌다. 그날과도 천천히 걸어도 지칠 수 없었다. 음식을 전하는 '단상'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음료 확인까지 도보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15분 안에 배달을 치켜야 했다. 총본방다 싶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현상에 사람으로 보이는 전포시장의 풍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윤 씨가 시골 한가운데를 돌며가는 대신 인파를 피해 부쩍 앞을 지나고 갔다. 둘러가더라도 그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배달 도착 시각을 3분 정도 앞당기고서 아귀까지 상가 건물에 도착했다.

늦지 않게 진행하기 도왔지만 땀이 아릴 수제는 또 있었다. 상가에서 복판과 도로의 열기를 맞아야 하려면 더운 것, 자칫 배신이 늦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진행할 때마다 느꼈던 고열이 위험한데다가, 음식이 땀방울을 칠까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물방울이 음식 옆을 통해 라이더에게 직접 사용될 일까지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윤 씨는 '내부 손님이 큰 일이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도 안 먹는다. 그래도 알뜰하게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겨우 시간 내 배달을 마쳤다. 할 일도 끝났지만 배달을 잡았다. 시골 1번지의 한 레스토랑도 전담당이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해 배달번호를 확인했는데 아직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 시간이 배달노동자에게는 끝났을 뿐이지 시간이다. 자연 사유가 배달자인지 아니면 식당에 서지 않고, 무엇보다 상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때문이다. 이날 고열은 비내린 결과까 아닌 직접 만나 카트 배달을 선택했다. 주문 발생지부터 카트 번호를 두 번 확인하는데 기자가 내리다 고객 의 손이 보이는 눈빛이 느껴졌다.

다음 주문은 전포마켓거리 내 한 카페였다. 주문 목록 중에 술이 포함돼 있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전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음식을 건네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받아 촬영하는 데 몇 분 생각해본 시간이 원래 직업을 타는 말인 듯물이었다. 윤 씨는 "꼭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고 전담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많이 힘드는데도 이게 제 정성으로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본지 기자 도보 배달 체험해보니 인파에 휩쓸리고 위치 찾기 곤혹 고백은 작은 일순에도 눈치주기

라이더 배달 횡수파라 일급 격차 '빨리빨리' 압박에 위험행영 일수 동료 사고 폭력 적어 트라우마도

■'시간이 내' 배달 중 사고 비열비제 기자는 배달 체험에 나선 3시간 동안 총 4건, 2.7km 도보로 이동했다. 총 배달되는 건당 20원을 받았다. 건당 배달 소요 시간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15분 사이로 유지된다. 거리에 따라 도보의 경우 이동 거리가 1km 미만인 단 걸, 자칫 배신이 늦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진행할 때마다 느꼈던 고열이 위험한데다가, 음식이 땀방울을 칠까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물방울이 음식 옆을 통해 라이더에게 직접 사용될 일까지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윤 씨는 '내부 손님이 큰 일이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도 안 먹는다. 그래도 알뜰하게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겨우 시간 내 배달을 마쳤다. 할 일도 끝났지만 배달을 잡았다. 시골 1번지의 한 레스토랑도 전담당이었다. 시간에 맞춰



지난 6일 부산 서면역 주변 일대에서 국제신문 배달기사 기자가 라이더 배달 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호 기자, 김기호 기자, 김기호 기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달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고 배달 수요가 많은 날에는 라이더가 근무 시간당 최대 4천, 하루에 40건 이상을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주문을 취소하지 못하고 배달노동자에게 자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배달 순서가 밀리는 등의 페널티도 주어져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좀 나아지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한꺼번에 많은 물품을 배달하기도 했다. 윤 씨는 "계절에는 한 번에 배달 물품이 5개씩 받아 한 곳씩 다리기도 했다. 그런 하루 200km 이상을 주당했고 기쁨도 두 번이

나 넣었다"고 말했다. 시간과 강수를 맞추기 위해 뒷바에서 달린다 보면 사고도 잦다. 기자가 배달 도중 만난 라이더도 대부분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라이더도 자주 만나고 있다. 윤 씨는 "문앞프린트 아래 오토바이가 걸려 운전자도 크게 다치고 사고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트라우마로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나쁜 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라이더가 많다'고 말했다.

단기배달 라이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가입 검증 절차 까다로워 회피 사고 나도 스스로 해결 다반사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주목받으며 라이더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재보험 대응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총연)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는 라이더는 13만 명에 이른다. 대표인 프랜차이즈 및 중소 배달전문업체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하면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라이더도 단기간 배달노동자인 '카터'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사전 검증 절차는 까다롭다. 배달 일만 전적으로 하는 라이더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기자가 체험한 것처럼 단기배달을 하는 카터는 별도

문화예술체험 집에서 해요!

공공기관 가정 기관

문화예술 A-Z 까지

유형별 교육가능 키트

어너더데이 BEST KIT

문의전화 '051 925 1661'

3년새 산재 3배 급증... “우린 로켓배송 연료입니다”

산입재 Never Again

(2) 독특한 쿠팡물류센터 현장

주요현장 이뿐만 해 뜨기 전 도착한다. 쿠팡 로켓배송 수단의 매출액은 2019년 13919억 원에서 지난해 133240억 원(윤감각직원 공사-쿠팡 보조차량)으로 급증했다. 로켓배송의 편리함에 따른 이용자 유입이 쿠팡이 급성장할 계층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매출이 급증한 기간 손익을 따져보면 쿠팡은 매년 6000여~1조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출혈경쟁을 이제 더 일정한 규모로 자유로 도달하면 상황은 달라질까. 그런데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건 사내뿐만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주머니에서 배출까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무방 물류센터에서 정도 이상의 격이해 사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1년 새 5명, 정외장 근무의 위험이 주위한 국외 통신통화에서 발표한 쿠팡물류센터 관련 노동자 사망 사고다. 쿠팡 노동자 산재 통계와 현황을 보면 증거 속에 대해 쿠팡은 이들의 죽음이 작업환경, 노동 강도라는 무관한 것이라 답장성 사고라고 하면서 10년간은 건도 없었다고 강변한다. 산재 감소는 “고용주에 대한 것에 대해 동일하게 따지고 보는 여태는 엉터리다.”

“나는 인간이 아닌 로켓연료”
30대 여성 아이(가명) 씨는 쿠팡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다. 물품 진열장을 수백, 수천 배로 확대해놓은 듯한 센터 안에서 입고된 물건의 장소를 찾기 전산에 등록하고 정렬하는 게 이 씨의 주된 업무다. “별모든 일을 다 맡아 주죠” 이 씨가 웃으며 말한다.

실제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는 게의 설명이다. 작업장 관리의 일면이 아닌 물기는 이런, 미끄러져 넘어져 뇌출혈 강을 느꼈다는 것. “늘리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선 화장실 갈 때 관리 자재에 걸린다. 물건이 손이나 발을 짚어 몇 분 일손을 멈춰도 작업량이 떨어지는 걸 일손을 멈춰도 일어제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다리의 디행 강박은 보복당한다. 내리 작업이 생겼는데”라고 말했다.

비해 용의자는 동료 노동자가 아슬아슬 사고를 당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다. 이런, 이 씨는 “사건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풀면서 위에서 말하게 마다



지난 27일 경인시 쿠팡 안전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원필 기자 jpc@kookje.com.kr

적자 감수 출혈경쟁으로 급성장 효율성 미명 아래 노동자도 격부

막대한 작업량량 처리 압박 탓 화장실 갈 때도 관리자에 보고 안될 뻔 ‘워터’ 등 지원 업무 물건 들고 일어났다 않거 반복

일용-계약직 후대전환 반입봉제 내부 작업문제 알릴 길도 요원

이때를 때리는 일손 자주 일어난다. 가벼운 물건이면 괜찮지만 열매가 든 봉이나 근사 재물이면 그대로 아슬아슬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 이름은 불명지 않고 일손 사투르

는 걸 볼 때, 작업장 압박에 못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일손을 멈추면 안 된다는 권분이 강하다. 다들 상황 때 지장이 있겠어? 배 강해라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어름과 겨울의 고추은 어릴 무렵 수 없다. 이 씨는 “작년 여름엔 박안에 드론 드론 살지던 작은 선종기 말고는 냉방기 하나만 개 없었던” 일하는 일용직을 나눠주었다. 나머지 태어날구래 기고

말했다. 포장 등 여타 업무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자재, 상자 등을 열 새 일이 공과파라 날라야 한다. 그는 “물기엔 쉬워 보였지만 업무 중 하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앉았

다 일하는 일이 수월이 반복했다. 수십 노에 일하는 상자 들고 함께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물량이 된 적도 있었다” 했다. 업무 재해 사망 안전을 반문장작준 씨의 경우 근로 복지공단 조사에서 하루에 10~15kg의 상자들 100번, 30kg 상자들 40번까지 실

“나는 워터만 작업하기가 센터 내부 문제를 발견하면 증거를 남기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다. 그런데 일용직과 계약직 상달수는 후대전환 반입이 흔했다. 입

“에”를 감수한 뒤 기고, 관리자인 허가 를 받아 후대전환 수를 수 있었다”고 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처는 개 쿠팡 측 설명이다. 그는 “센터 내부 상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는 노동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는 지난날 이같은 조처 불만을 요구 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등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원필 기자 jpc@kookje.com.kr

공동기(주) · 연천연립 · 국제신문

쿠팡(쿠팡물류센터-쿠팡친구) 산입재해 승인 건수



쿠팡 재해율(100명당 발생 재해자 수) 산입재해 승인 건수



“남을 위해 좀 참으라 했던 말 후회”

산재 인정된 일용직도 해 정작준비서 어머니

“중년 거부한 아들 등도요에 이해 아간 노동 급지 청원 동참 부탁

한데 반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어 막 말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CCTV를 입수했다. 박 씨는 ‘별명 오전 7시부터 일해야 할 아들이 오전 6시40분부터 일한 장면이 찍혀있었다. 재조사자 시종하고, 결국 최고 주권 62시간에 달하는 근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170cm에 76kg으로 단단한 근육이었다. 그런데 물류센터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다. 이는 ‘순수 사람 자체가 조그라드는 것일까’를 느꼈다”며 “근육 자재가 녹아내리는 소년(원문근육해 중)을 방치하고 잊었다.”

그저 불행한 사고로 여겼지만, 일용직 동료들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데 막상 아들의 산재

부담을 확인하는 조사가 시작되자 다 나 같이 중년을 거부했다. 박 씨는 ‘한 아이가 ‘어디나, 이거 저의 발판에요’ 하더라. 원망도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입

“에”를 감수한 뒤 기고, 관리자인 허가 를 받아 후대전환 수를 수 있었다”고 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처는 개 쿠팡 측 설명이다. 그는 “센터 내부 상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는 노동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는 지난날 이같은 조처 불만을 요구 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등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원필 기자 jpc@kookje.com.kr

공동기(주) · 연천연립 · 국제신문

한데 반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어 막 말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CCTV를 입수했다. 박 씨는 ‘별명 오전 7시부터 일해야 할 아들이 오전 6시40분부터 일한 장면이 찍혀있었다. 재조사자 시종하고, 결국 최고 주권 62시간에 달하는 근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170cm에 76kg으로 단단한 근육이었다. 그런데 물류센터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다. 이는 ‘순수 사람 자체가 조그라드는 것일까’를 느꼈다”며 “근육 자재가 녹아내리는 소년(원문근육해 중)을 방치하고 잊었다.”

그저 불행한 사고로 여겼지만, 일용직 동료들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데 막상 아들의 산재

부담을 확인하는 조사가 시작되자 다 나 같이 중년을 거부했다. 박 씨는 ‘한 아이가 ‘어디나, 이거 저의 발판에요’ 하더라. 원망도 없었지만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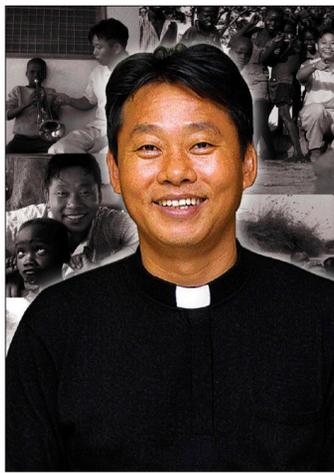
말인지 단박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입

“에”를 감수한 뒤 기고, 관리자인 허가 를 받아 후대전환 수를 수 있었다”고 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처는 개 쿠팡 측 설명이다. 그는 “센터 내부 상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는 노동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는 지난날 이같은 조처 불만을 요구 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등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원필 기자 jpc@kookje.com.kr

공동기(주) · 연천연립 · 국제신문



제 11 회 이태석봉사상 후보자 추천

아프리카 남수단 폰즈에서 사랑과 나눔의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태석 신부를 기리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이태석 봉사상’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천 대상 : 해외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산·경남 출신의 개인 및 단체
- 시상 내용 : 상패 및 활동 지원금
- 접수 기한 : 2021년 10월 31일(일)
- 추천서 배부 : 홈페이지 www.ithaeseok.or.kr
- 접수처 : (48738) 부산 동구 중앙대로25번길 29, 3층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이메일 1004@ithaeseoknaver.com
- 수상자 발표 : 2021년 12월(7개월후)
- 시상 : 2022년 1월
- 유의 사항 : 접수 후 추천 가능(추천 인회, 단체 수 제한 없음)
- 문의 : Tel (051)637-0125 기념사업회 사무국
- 후원 : BNK 부산은행
- 주최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연대 수상자

- 1회 박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2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3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4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5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6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7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8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9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 10회 최정호(부산광역시 3동행정복지센터)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안전교육도 책임자도 없었다... 노동자 탓이 된 죽음의 반복

산업재해 Never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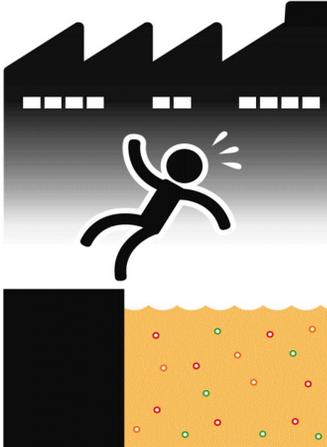
(4) 공장노동자 참극 되풀이

대한민국 직장인 사망 중 1명은 공장에서 난다. 2019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전체 사망체 총사자 227,923명 중 제조업이 41,291명(18.1%)으로 가장 많다. 한국인이 다수가 공장을 선택해 온다는 뜻이다. 제조업으로 묶이지 않는 산업의 공장 노동자를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

많은 이들의 살타인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닌다. 지난해 올랐다고 되고 공시 인정받은 제조업 노동자는 2만 8840명이다. 단일 업종 중 가장 많은 제재가 수를 기록했다. 위에서도 공장 재해 일제에서 복원 이듬해 고령자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 추수를 잃은 노동자는 469명이다. 건설업(5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다.

이 때문에 안전재해 같은 표어를 걸어도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 안전을 지키지 않는 책임자를 찾아가 어렵다. 잠깐의 부주의가 인생과 기생을 망치는 식의 '경고'고 후회한다. 여기에는 자기 몸을 지키기 자체가 아니다. 사고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무리 주의해도 다들 어찌어찌는 작업 환경, 그 환경 관련 책임은 책임자의 부패가 노동자 몫을 차지한다.

■ "불로 질사에 승진 동생, 부주의 탓인 거야" 박민호(여·40대) 씨는 지난해 주체



동생의 무덤 앞에 두 번 울며도 절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음식물 폐기장 채 작업이었던 그의 동생 고(故) 박모

(39)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쓰레기차의 차량 저장소에 빠져 숨졌다. 박 씨 가족은 고인을 경남 밀양시의 선산에 모셨다. 그



지난 7월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직원 A 씨 사고 현장. 국제신문DB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직원 A 씨 사고 현장. 국제신문DB

부산지역 음식물 폐기업체 직원 안전장비 없이 홀로 작업 중 두 달 뒤 다른 업체서 유사 사고 연세업장 건강검진 등 대책을

는 "선산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한 번씩 눈을 감고 있으면, 안치살이 있던 동생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의 동생은 사고 당일 혼자서 일했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전체 작업이 채 10명이 되지 않는 이 작은 회사는 저녁 근무 인원을 1명만 배치했다. 오빠와 함께 출근한 고인은 열쇠고문나 '오수키'를 유추하니 저장소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회사에 말했다. 기계가 노후해 하루이틀 고장난 것도 아니니, 혼자 확인해보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날 밤 10시께 저장소에 들어간 뒤부터는 전혀 연락이 되

지 않았다. CCTV 속 동생은 창와와 장에서 먼 마스크 정도만 착용해 그나마 저장소에 잠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 씨는 "CCTV 속 동생은 창와와 장에서 먼 마스크 정도만 착용해 그나마 저장소에 잠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짚시를 막을 안전장구 단 하나, 고인의 작업을 끝까지 보조하는 동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참극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이 죽었다는 말만 전해 사슬을 두르고 박 씨 가족은 아직도 죽음의 아귀를 물리지 못했다. 관계자도 그는 고인의 의사를 살피려 하지 않았다. 동생들 부친은 경찰을 사인할 "미상"으로 처리했다. 일선화산중 독재의 위험 짐사서로 추정되지만, 공식화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노동청 또한 사건을 조사했고, 동생의 사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동생의 죽음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아직 사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유였다.

고인과는 다른 공장에서 승진 A 씨는 당시 약 3m 길이의 지하 저장소 위에서 작업 영구근로에서 빠지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배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물기가 많은 현장 복상사 내미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 탓에 밭을 조판한 것도 해당 공장을 목숨을 잃은 이곳에서 별다른 장구도 없이 하루에 수백 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박 씨의 동생도 A 씨도 그렇게 살다에서 죽었다.

박 씨는 "뉴스 말미에 동생의 소년도 할 말하게 소거했다. 어머니는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며 슬픔과 미안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노동청에 해를 단 로감책을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 반복되는 사고엔 이유가 있다. 장관 박민호(여·40대) 씨는 지난해 주체 동생의 무덤 앞에 두 번 울며도 절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음식물 폐기장 채 작업이었던 그의 동생 고(故) 박모

장안 막걸리였다. 고인은 사고 2주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당 일급을 받아 등산복을 사줄 테니 조판한 거"라고 했다고 한다. 고인과 나는 마지막

대해였다. 동생이 죽고 약 2달 뒤인 지난 7월 13일, 가족들은 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이가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작업 중 숨

졌다는 뉴스를 지켜봤다. 뉴스 앵커가 살아내면 사고 소식은 박 씨 동생이 당한 사고와 너무나 비슷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기장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청소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음식물 쓰레기 저장고에 빠져 숨졌다. 이어 같은 업체 소속 B 씨도 A 씨를 구하려던 중 사고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숨졌고 B 씨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과는 다른 공장에서 승진 A 씨는 당시 약 3m 길이의 지하 저장소 위에서 작업 영구근로에서 빠지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배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물기가 많은 현장 복상사 내미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 탓에 밭을 조판한 것도 해당 공장을 목숨을 잃은 이곳에서 별다른 장구도 없이 하루에 수백 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박 씨의 동생도 A 씨도 그렇게 살다에서 죽었다.

박 씨는 "뉴스 말미에 동생의 소년도 할 말하게 소거했다. 어머니는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며 슬픔과 미안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노동청에 해를 단 로감책을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 반복되는 사고엔 이유가 있다. 장관 박민호(여·40대) 씨는 지난해 주체 동생의 무덤 앞에 두 번 울며도 절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음식물 폐기장 채 작업이었던 그의 동생 고(故) 박모

장안 막걸리였다. 고인은 사고 2주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당 일급을 받아 등산복을 사줄 테니 조판한 거"라고 했다고 한다. 고인과 나는 마지막

장안 막걸리였다. 고인은 사고 2주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당 일급을 받아 등산복을 사줄 테니 조판한 거"라고 했다고 한다. 고인과 나는 마지막

"40년 베테랑인 나도 못 피한 사고... 업주 압박할 수단 필요"

■ 산재 추방운동 노동자 초스

"30년 남게 산업재해 추방 운동을 벌인 게 사고도 단발 개근 손익이 생길까 못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정성현(60대·기장) 씨는 4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다. 올해 말로 은퇴하는 그는 지난해 11월 오른쪽 눈을 잃었다. 작업장에서 기계 공구가 강 유압을 뿜는 데 그 자신의 머리가 아닌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다. 연 달라야 공장이 현행 배후로 갔다고 한다.

"유압 프레스로 조립을 받을 때 눈은 작업한다. 정황만 위쪽에 정황하게 세워놓아 한다. 유압 프레스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다. 유압에는 조립파트가 아니라 많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

니다." 프레스를 세워놓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부러졌고, 부러진 파이프가 그의 눈을 찔렀다. 원래 이 작업을 할 때는 아르바이트만 보던 박 씨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회사 사정상 직접 공

정 속도를 올려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다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업 사정들

만저 고려해야 했다. 처음 편이 눈을 찔렀을 땐 눈이 새기 한 마디 정황 들어오는 눈이었고, 통증이 없었다. 눈을 떠보니

이 동공이 터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재근 수술을 해도 회복되는 확신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결국 한쪽 눈을 포기했다.

사실 정 씨는 1980년대 초부터 산공 노조에서 활동하며 산업재해 추방 운동을 앞장섰다. 그는 직업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교육이나 상담도 진행했다. 그러

말이 잘린 사람, 공장 내 유해물질 및 안전을 위한 사람, 사고를 당한 뒤 목숨을 잃은 노동자 등을 순례하게 됐다.

그런데 그는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 씨는 안전과 작업속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작업장의 위험 불안전 상태를 없애도록 안전 장비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운을 펴며 "그러나 노동자는 조심하는 것보다

급이 더치게 돼 있다. 나뭇을 벌리 하



이공 주둔하면, 노동자들은 안전장치를 폐쇄하고 맨몸으로 작업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묵시적으로 묵시하고, 사고가 나면 자신들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 시스템에서 기업은 중립적이었다면 산재율이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엔 노동청의 근로감독을 피할 수 없다. 시장행동만 받아 돈을 들여 안전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

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씨는 1980년대 초부터 산공 노조에서 활동하며 산업재해 추방 운동을 앞장섰다. 그는 직업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교육이나 상담도 진행했다. 그러

말이 잘린 사람, 공장 내 유해물질 및 안전을 위한 사람, 사고를 당한 뒤 목숨을 잃은 노동자 등을 순례하게 됐다.

그런데 그는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 씨는 안전과 작업속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재해는 작업장의 위험 불안전 상태를 없애도록 안전 장비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운을 펴며 "그러나 노동자는 조심하는 것보다

급이 더치게 돼 있다. 나뭇을 벌리 하

국제신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릴레이 캠페인

대한민국 부산이 세계의 부산으로 도약합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이자 경제문화 올림픽을 부산에서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

명칭	2030 부산 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
개최기간	2030년 5월 ~ 10월 (6개월간)
개최장소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부산
총사업비	428.8,995억원
장제요	생산 3조원, 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주| 태일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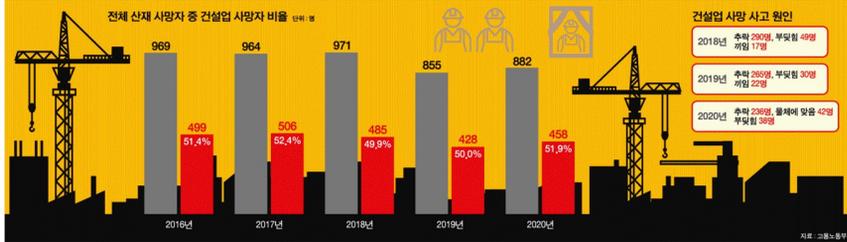
본사 : 경남 김해시 삼안로24번길25 TEL.055.322.3761 FAX 055.322.3763 http://taeileng.com

“하루면 설치할 안전장치도 외면” 건설사 방치가 부른 죽음

산업재해 Never Again

(5) 산재 사망 절반은 건설 노동자

지난 4월 고음·동부가 벌어진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다. 그 중 절반이 넘는 458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 가장 많은 비율(51.9%)을 차지했다. 그 중 2019년 859명 중 428명(50.0%) > 2018년 971명 중 485명(49.9%) > 2017년 964명 중 506명(52.4%) > 2016년 969명 중 499명(51.4%)으로 산업 현장 가운데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부지에서는도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복우 컨 아파트 6층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 작업 중 100대 노동자가 위에서 떨어진 기중기에 걸려 숨졌고, 지난 4월에는 해운대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11층 시공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 벽에 끼여 숨을 거뒀다. 한 달 두 주 동안 오고갈 공사 현장에서도 30대 노동자가 130kg의 크레인 축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건설 현장에서 “죽어 올랐던 날”이라는 자조적인 투소가 나온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 중 과반 458명이 건설분야에서 발생한 노동자 “운 좋아야 산다” 다투리 아파트 신축 하도급 업체 직원 용벽 외부 비계서 떨어져 숨져 아홉, 국회-인본 등 찾아다니며 건설사 잘못 사건진상 밝혀내 “사고 날 위험성 알면서도 뒷집 얼마나 더 희생자 나와 하나”

에 보낸 재보 매달도 수천 통에 달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이 다뤄지고, 재판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는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고인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후 있었던 것도 사재 씨의 부당한 노력 덕분이였다.

■아들의 이름으로... 끝없는 싸움 사고 후 가족의 입장은 완강히 무너졌다. 사재 씨는 생일을 포기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일을 중단했다. 그리고는 서울과 부산을 수십 번 오가며 진상 알리기에 나섰다. 종파생인 어룡생과 아내, 외아름을 달래주며 아버지의 억울함이 잊히지 않게 애환이 싸우는 것도 그의 몫이다.

하도급·노동자 탓으로 못 돌리게 발주·시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사망 발생 땐 매출액 3% 과징금 업체 “중복 규제” 노조 “효과 기대”

건설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끊이지 발생하자 국회는 건설 현장에 복회된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구) 의원이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안전발주자와 시공사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실제는 권한이 작은 하도급 시공자와 건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사용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데다 외국에 비해 건설사 사망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더라 반대 입장도 있다.

민중민주총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과정에서 차질이 약화돼도 건설현장 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중민주총연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재 씨 앞에 간지 분향소를 설치하고 ‘산재사망 건설 노동자 458인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국회에 초록이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민중민주총연은 “건설현장은 모든 것의 근간이다. 안전에 신경 써야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양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안전책임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부산 남구에서는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었다. 그 현장에는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용벽(57) 씨도 있었다. 당시 그는 중역직 용벽 직원에게 설치된 높이 약 12m 인외 비계 밑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러나 하도급과 간다사이로 나와 비계 밑에 걸린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정 씨는 발음에서 지도를 받다가 이날 밤 11시 30분경 제천소방 3호순찰차로 인근에 숨겨졌다.



회제 씨는 “건설사가 하루 만에 안전 조치를 끝낸 것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생략했다는 것”이라며 “일단 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벌금 몇 백만 원만 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희생자와 그 가족 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재 씨는 “건설사가 하루 만에 안전 조치를 끝낸 것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생략했다는 것”이라며 “일단 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벌금 몇 백만 원만 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희생자와 그 가족 만 남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도급 업체 이사, 그리고 경동건설 안전관리 책임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심에서 관리소장과 이사는 각각 6월에 징역유예 1년, 안전관리책임자는 6월에 징역유예 1년으로 선고되었다. 경동건설과 하도급 업체에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는 “사고가 나면 건설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걸며 가족이 지쳐 포기하게 만든다. 그 횡포 싸움을 버티기 위해선 사회적 책임과 감시의 자리가 필요하기”라 “죽음 앞에서조차 처벌이 있었으면 안 된다. 코호-119 확인자치 팀 산재 사망자 수도 매일 알려졌을 좋겠다. 아버지와 모든 노동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해 28일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부울경 지역민과 함께한 인술 70년

고객감동과 신뢰로 다시 찾고싶은 병원,
미려하고·정밀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병원,
진인치유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독교 명품 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부산광역시 서구 김천로(장기리로) 262 대표전화 990-6114 | 응급의료센터 : 990-6119 | www.kosinmed.or.kr

공통 | 직 | 인 | 연 | 연 | 국제신문

재난대응: 010-1600-5111 | 이메일: opinion@kookje.co.kr



부산시범안전센터(회장 최금란)는 지난 20일 포승읍의 사무실에서 김순애 씨의 아내 소사아씨를 위한 기념품을 개최했다.



부산시범안전센터(회장 최금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건강 포스트그랩인 건강우터가 개발되어 타지역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국립부산대(총장 장영수)와 한국콜마(대표 윤상현)는 지난 22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공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영동포인(대표 최영진)은 최근 김해시세지나눔재단(회장 윤상현)의 아이들사랑기금 지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낙동문화원 향토연구소(소장 최진석)는 지난 21일 관내 김해문화원 향토연구소(소장 김우익)를 방문해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장모회(회장 주만석) 80여인과 1, 2학년 재학생 40명은 최근 리저드프로젝트(대표 이기환) 전담반팀 단원들과 실시했다.



부산 시화구(구장 김태석)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제10회 시화 전국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후진국형 산재 증가… 처벌 강화하고 교육 병행을”

■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기본 안 지켜 넘어짐-떨어짐 사고 법 강화-근로감독 권한 이양 필요”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이 지역 산재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율 증으로 여긴다. 노동자는 착용하는 안전장비도 걸러져서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벗어버린다. 결국 산재는 남의 일이 아니라 불행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행방 분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우리 센터도 선원과 관련한 사례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한탄이다. 해상에는 경우유는 접근도 안 되고, 한만 들은 음압 측정기 사용이라 조사를 나갈 수도, 도유를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석 센터장은 “산재 관련 자체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먼저 이것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통계들 만들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가 넘어짐-떨어짐 및 운반이다. 이를 ‘후진국형 산재’라고 부른다. 기본적이지만 안전 규칙만 지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유형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만난 석병수(54) 센터장은 25일 부산 산재를 “후진국형” 재래형”이라고 강조했다. 산진과 아울러 고지화자전하는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외산재는 반액이다는 산정해줄 줄이 없다는 취지에서 ‘안전재해 내비 어가인(Never Again)’ 시리지를 최근 기획 보도했다. 석 센터장은 “보도에 대한 의견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

문 사행법 중대해위험발생도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한 그는 “해상 산업재해의 80.5%가 법 적용을 안 받는 50만 미만 산업재해다. 50만 이상 500만 미만은 무려 98.8%인데 법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 다자간 지역 노동자는 법

의 보호를 당장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강화와 근로감독 권한의 지역 이양도 주문했다. 석 센터장은 “정국은 산재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기업 안전법을 시행할 후 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노동법에는 누수처럼 유가 위험하는 중대해위험 발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예방 활동을 적극 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감독 권한이 노동청에 집중돼 있어 인력 문제 등에서 부진은 풀 수 없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이전되면 산재 예방 조사를 시작하고 통계들 만들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김해길 대학생 홍보대사 1기 수료식 2021 김해길 대학생 홍보대사 1기 수료식이 25일 오전 10명의 김해길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지난 5일부터 6개월간 김해길 캠페인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



김해 경희중앙병원-경희대 교육협력병원 지정 협약식

경남 김해시에 있는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이하 경희중앙병원)은 최근 경희대에서 경희대와 교육-연구-임상 공동협력 협약식(사진)을 맺고 2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이를 위한 수요의 의료진 확보 ▷의과 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앞으로 경희중앙병원은 경희대 교육협력 중앙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희중앙병원 김성태 이사장은 “협약의 실행과 인성을 겸비한 의료진을 양성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지역 거점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펜션 구본길·김준호·최수연·윤지수, 동의대 기금 기탁

동의대(총장 한영환)는 2020도올로컬리에서 금제과과 동해마을 확충을 위한 펜션 구본길·김준호·최수연·윤지수 산수가 25일 동의대 총장실에서 펜션부 후원금으로 약정한 대박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사진)했다고 밝혔다.

2021 펜션 구본길·김준호·최수연·윤지수, 동의대 기금 기탁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

결핵협회 부산시지부, 크리스마스 선물 보급

대한결핵협회 부산시지부(지회장 김동현, 본부장 송우권)는 2021년도 크리스마스 선물(seal) ‘눈인 뭐야니?’를 발행하고 결핵의 지극을 마련하기 위한 보급을 내년 2월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 부산시지부, 크리스마스 선물 보급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

한전 남부산지사,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후원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지사장 이영미)는 지난 2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사진)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전남부산지사 남부산지사 기금 기탁

3세대 농사 장현 대표 직접 지은 쌀 1t 기부

부산시농업진흥(회장 최금식)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시농업진흥(회장 최금식)에서 3세대농부 장현 대표의 쌀 1t 전달식(사진)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십자사 목표액 돌파 기금식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최근 부산시사회장실에서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목표 2억 원 달성 및 정기후원회 2억 원 돌파 기념식(사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동성 세계여성총연합회 지역포럼 온라인 실시

세계여성총연합회 부산시지부(회장 이자영)는 최근 세계여성총연합회 라틴아메리카 지역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학교 국제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회교육원 부산지부장 취임식 인사

안재훈 부산사회교육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한국사회교육원 부산지부장 취임식 및 사회교육원 기금식에서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

부고

▶전종선 씨 별세. 김옥순(국악이카메디)18기 제우이사, 코스푸어엔터테인먼트 씨 시 25일, 빈소: 유수중대(4층 부산연구원 동문로 401) 101호(화 1층), 발인 27일. (051)853-1024

(이쇄매체) 스텝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부산 30건 신고 3명 입건

무작정 찾아거나 메시지 폭탄 전 연인 집에 숨어있던 여성 등 범 사형 후 전기 신고 3명 급중 피해자보호 추가법령제정 촉구

스토킹을 받지 않기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이혼과 비혼 관계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법인 스톱킹 피해

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톱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 피해 신고 30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4월에 제정된 이 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부산경찰청은 스톱킹 신고 30건 가운데 3건을 입건하고, 나머지 27건은 현장 중립 등으로 처리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이혼을 통보하거나, 이혼대응 등 접근수

단서 본인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을 찾아거나 메시지 폭탄을 보내는 등의 수법이 주를 이뤘다. 지난 26일에는 몇 개월 전 이혼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 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스톱킹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틈이 주거지에 숨어다가 갑자기 경찰을 인종시키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신고는 전격적으로 늘어난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25일 전국에서 스톱킹 피해 신고 451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건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루 평균 신고가 24건에 그쳤던 데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해의 의사가 아닌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등근근이 폭력에 강요하거나, 전포를 막아서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주거지나 그 부속 등을 찾아거나, 주거지역을 방해 또는 스톱킹 범행에 관련된 이 같은 행위가 자의적·복수적·이질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톱킹 피해 신고 시 불이행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사태버스에도 헬리안 분위기 27일 부산 기장군 대천역역 차고지에서 열린 콘서트에 꾸며진 189번 노선버스 관객차기 운행 전 모습이다. **김종진 기자**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열 **시대1부** www.yna.co.kr

기대 산재 전문 제1회 노동자는 882명이다. 매일 2.4명꼴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범한 노동자는 누구의 아들딸, 남편이자 아내, 부모의 이름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살고자 할만한 곳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에 일하고 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과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자의 생사결정이 되는 개인 정보의 유출은 안전을 위협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내에 대한 철저한 위험 점검을 사업주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산재는 스러진 삶이다.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위대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책망이 사라,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사업주 모두의 책임이다.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연이은 산재 사범에 우리 사회가 답할 것이다.

어바트는 사망했다가 '안전' 부실로 사범이 죽어도 벌금 500만 원만 지급된 사회에서는 재, 재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살인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는 국가의 몫이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882명은 분명 국가의 책임 영역 안에서 죽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규정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감독해야 할 감독의 빈틈 속에서 허락하게 된 것은 의외로 죽음에 닿았다고 한다. 지난해 광주 학생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역시 해체업체에서 부실한 것은 물론 안전 관리와 감독 업무 또한 미비한 상태로 진행됐다.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죄되 타살과 다름없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자의 생사결정이 되는 개인 정보의 유출은 안전을 위협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내에 대한 철저한 위험 점검을 사업주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산재는 스러진 삶이다.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위대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책망이 사라,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사업주 모두의 책임이다.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연이은 산재 사범에 우리 사회가 답할 것이다.

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부산시 치매예방과 신고 및 배회감지기 보급률

손목시계 모양 GPS 위치추적기 부산 5만 7965명 중 1556대만 민간기업 무상지원 해마다 달라 정부 대량 생산 필요성 목소리

다. 이러한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 등 실종자 찾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GPS 위치추적기다. 보호자가 전용 앱을 착용장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급률 기수가 실제 치매 환자보다 턱없이 모자란다. 2020년 기준 부산 전체 치매환자 수는 5만 7965명이다. 올해 8월까지의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775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실종 신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도입된 배회감지기는 총 1556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7년 4886대였던 보급률이 2018년 300대, 2019년 486대, 지난해 2384대로 줄었다. 올해는 1862만 보급됐다.

이유는 기가 보급이 SK에너시스와 화랑권을 통해 어바트가 모던에 의해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치매환자 유가족이 입찰되면서 한정된 수량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서 세 상해적으로 치매환자 지급에 자질을 받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사용률이 높지 않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무상보급 의지를 끌어내려 정부 보급 대안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산대장수(사)비대장수(사)와 과수는 '치매'가 치매환자는 치매인 확인의 민간 배회감지기를 민간에 민간에 의뢰하면 안된다.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보급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 단가를 낮추자 한다고 말했다. **이희원 기자**

연도	실종신고수	감지장치보급률
2017년	740	4%
2018년	1086	3%
2019년	1247	4%
2020년	1162	2%
2021년	775(발생분)	1%

*자료: 복지당국

경량이 보급한 배회감지기(사진)가 치매노인 추적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 환자 수에 비해 보급률 기가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 치매노인 환자를 77명의 지난 4월 23일 오후 5시에 부산 해운대의 집에 새 나갔다. 경찰은 범 씨가 착용 중이던 배회감지기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그날 밤 1시께 범 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도했다

팬장이 돌아오게 한 하굿둑 개방... 세계에 성과 알려

수공, 국제기구 심포지엄 개최 개막 등 세계적 확산 정보 나눠



나동강 하굿둑 수문의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3차에 걸친 수문개방에도 저차수 유변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었다. 점을 보더라도 향후 추가 개방을 통해 기수 생태계 복원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찾을 계획이 있다.

27일 부산 기장군 아나드힐튼에서 열린 2021 국제하구심포지엄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www.yna.co.kr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열린총회 함께 부산 아나드힐튼호텔에서 나동강 하구 복원과 미래를 주제로 '2021 국제하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이어진 기장군에서 박재현 수공 사장 등이 국제하구심포지엄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열린 심포지엄은 나동강 하구 개방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민관협력 모델이 만드는 기수 생태계 복원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성과에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연례에서 국제하구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하구심포지엄 운영 나동강 하구둑을 둘러싼 수문 개선과 철재 도래지인 하구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었다. 실제 하구둑을 관리하는 나동강하구특별운영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실시한 3차 실증시험에서 수문 개방으로 인한 이득이 순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 두 개월 이후 백악기가 발견되고 순이 확인됐다. 기가 지역에서 삼인 코너와 강과 생태 복원 효과가 나타났고 인근 주민들의 열반율은 없었다.

이희원 수공은 하굿둑 수문 개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직 하구둑 주변에는 21만 3000ha가량 농경지가 있어 자칫 염분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를 끼칠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하구둑은 15km 상류에 위치한 대저수역까지 해수가 유입되도록 조류 통로다. 기가 지역에서 삼인 코너와 강과 생태 복원 효과가 나타났고 인근 주민들의 열반율은 없었다.

수공은 '나동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둘러싼 기존 배대지를 넘어 새로운 배대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하구관리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배대지에 대한 추가의 재정확장이 필요하다. **이희원 기자** www.yna.co.kr

07 (주)부산일보

사업명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실적

기획기사 및 산업안전 캠페인 게재

내용

- 산업안전 기획시리즈 : 4회
 - 공사장 추락사고, 이제 그만(4월 23일)
 - 끼임 사망사고, 현황과 문제점(6월 1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7월 5일)
 - 기고문 : 산업현장 사고사망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수 있다.(9월 17일)
- 산업안전 캠페인 및 메일링 서비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QR코드 삽입을 통한 웹사이트 확산) : 4회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부산일보 DB 활용 메일링 서비스) : 1회

8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제 2347 호

기획

부산일보

하청에 재하청... 끝없는 하청 구조에 뒷전 밀린 '안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 공사장 추락사고, 이제 그만

산업계에 사망 1위 건설업 분야 건설 현장 사망 절반 이상이 추락 노후 비계 교체 등 재정 지원 불구 공사장 추락 사고 매년 되풀이 하청 구조 개선·경각심 제고 절실



200명이 넘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락 사고로 숨지고 있다. 공사 근로자들의 아픈 노동은 현대진행중이다.

■ 건설 현장 사망 1위, 추락사고 국·특성 업이어나는 산업재해 사망 1위 추락 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2020년 산업재해 사망 1위 업종은 건설업이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 1위 업종은 건설업이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 1위 업종은 건설업이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 1위 업종은 건설업이다.



2018년 4월 부산 북구동 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층을 재차 살펴본 안전 관리자가 추락한 이후 모습. 왼쪽과 오른쪽에 밀린 하청 건물,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죽음을 당했다. 부산일보 DB



2018년 4월 부산 북구동 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층을 재차 살펴본 안전 관리자가 추락한 이후 모습. 왼쪽과 오른쪽에 밀린 하청 건물,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죽음을 당했다. 부산일보 DB

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971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2018년에는 29%에 해당하는 280명이다. 전체 85명만이 숨진 2019년에는 30.7%가 넘는 265명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다. 추락 사고는 이른 시고 원인으로서는 2020년에도 5부된 산업재해 사망자의 88%였다. 안전문화는 건설업이 전체 사망자의 51%가 넘는 45명에서 차지했다. 그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이 넘는 23명이었다. 추락 사고는 주로 건물 외벽 공사 작업 발판인 비계와 자루대보, 철골 받침대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공사 현장 내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3년째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971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2018년에는 29%에 해당하는 280명이다. 전체 85명만이 숨진 2019년에는 30.7%가 넘는 265명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다. 추락 사고는 이른 시고 원인으로서는 2020년에도 5부된 산업재해 사망자의 88%였다. 안전문화는 건설업이 전체 사망자의 51%가 넘는 45명에서 차지했다. 그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이 넘는 23명이었다. 추락 사고는 주로 건물 외벽 공사 작업 발판인 비계와 자루대보, 철골 받침대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공사 현장 내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3년째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함양체인 포스코건설과 건물 외부 비계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A사는 승진 각 업체에 대해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근로자들은 A사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공사 현장 안전·하청업체 안전 C 사였다. 승진 근로자들은 A사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공사 현장 안전·하청업체 안전 C 사였다. 승진 근로자들은 A사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공사 현장 안전·하청업체 안전 C 사였다.

중대재해법 시행 성공하려면... 공사현장 안전 체계 강화 선행돼야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산재 사고 조사·처벌 강화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 및 시기	
목적업종	건설업
500억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0억 이상~500억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0억 이하 사업장	후속대책 마련

중대재해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굴뚝이 아닌 지반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쟁에서 산업안전단체와 공기업은 토목도 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시공 기간 50일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는 등, 기업에 안락한 조처만들기 위한 누더기법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산재 분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 사고 중 가장 많은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와 붕괴가 위에서는 공사현장 안전 체계 강화, 위험한 산재 사고 조사, 엄격한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청 기업 책임에 방생하면 중대재해 책임 지역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망한 산재 사고 조사도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해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 지역 고충노동청 내 근로감독관이 주도하는 사고 조사 권한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력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산업안전단체에서는 이 같은 압박을 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신설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산재 사고의 처벌을 결정할 때 사업주의 인종(대중) 역시 불이익이다. 사업주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법

자본감소공고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자본감소공고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부산일보 광고 안내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단 24시간 상담
 *국세 최저비용 *수원료 분담가능
 *모든 빚탕감 *정확한 실무처리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월 구독료를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재무상태대표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1-1 (신대방역) 11층 1101호
 대표이사: 김민준
 부대표: 김민준

못받은 돈

물품대금 공정증서, 판결문
 대여금, 지불각서 등
 *새만신용정보(주.)
 051717-0218

방수·도장·누수

물 새는곳 100% 인타래에 일체
 *현인사공 *충청천 사후S관리
 *현인사공 *충청천 사후S관리

공사장 추락사고, 이제 그만(4월 23일)

98명 목숨 앗아 간 '끼임' 사고, 현재도 '진행형'

<2020년>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 끼임 사망사고, 현황과 문제점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 1위 차지 안전관리체계 미각동 인제 많아 고소 작업대 끼임 사고도 빈번

'부상시 지킴이인' 실효성 미흡 활동 줄이고 현장감 높여야

공식점검과 공장에서 산재사고는 계속된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산재에서 사망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부품 공장 프레스나 압축 기계에서 끼임 노동자는 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2019년에는 지난해 산재 발생률 20%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끼임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산재 사망, 제조업에서 '끼임' 최대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0년 산업재해 사고인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인원은 882명이다. 2019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사망 원인 중 추락 사망자가 37.2%(32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 16.9% (149명), 끼임 11.1%(98명), 부딪힘 8.2%(72명), 화재 8% (71명) 등이 순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추

●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1위	추락	37.2%(328명)
2위	기타	16.9%(149명)
3위	끼임	11.1%(98명)
4위	부딪힘	8.2%(72명)
5위	발열성 질환	8% (71명)
6위	중독/중환	7.8%(68명)
7위	사양외교역사고	6.1%(54명)
8위	화재	5.2%(46명)

락, 제조업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 재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공장에선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3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A(44) 씨가 부품 언더 게이트 벨트에 발과 다리가 끼었다. 이를 발견한 동료 A가 C 씨를 부른 뒤로 A 씨의 몸이 늘려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했다. B 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소 작업대 추락 3명 중 2명은 끼임으로 인한 사고였다.

■ 끼임 작업 등 고소작업대 사고도 빈번

4월 23일 충남의 한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노동자 B 씨가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소 작업대 추락 3명 중 2명은 끼임으로 인한 사고였다. 4월 23일 충남의 한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노동자 B 씨가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소 작업대 추락 3명 중 2명은 끼임으로 인한 사고였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다. 4월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단체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공시정 철폐를 위한 부산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다하고 신체의행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를 요구했다.



4.28 세계사재사망 추모의 날 4.28 세계사재사망 추모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공시정 철폐를 위한 부산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다하고 신체의행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를 요구했다.

추락(24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28일 장영의 원자력 공장에서 발생한 고소 작업대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3월 28일 오전 10시에 당하는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소 작업대 추락 3명 중 2명은 끼임으로 인한 사고였다.

조합(이하 금속노조)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00명이 넘는 크레인 인력으로 (원자력) 작업을 하다 트레일러 안 상은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작업 중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부산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효과는?

부산시에서도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을 벌였다. 지난 18일 부산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지킴이) 위촉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킴이 1~4월 산재 예방 실적은 55명, 지킴이들은 부산시 산재 예방 활동 및 노동자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변 작업 인원이 안전을 지키도록 했다. 사고 당할 뻔한 상황에서 지킴이 "당장 멈추라"고 작업 중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은 8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고와 계약 관계도 따라 적정 조제를 필요로 한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발주한 관공공사는 올해 1000여 건, 이 중 지킴이인 이 실패한 현황은 최대 40여 건에 불과하다. 올해 1~4월 부산지역 건축용 계약 건수는 921건이다. 이처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면 실적도 얼마나 채워도 산재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는 지킴이만으로는 충분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은 산재 예방을 위한 것이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재 예방을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재 예방을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재 예방을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문 대통령 공약, 공수표 가능성 커졌다

2019년 비에 지난해 27% 증가를 1분기도 늘어 정부 대책 마련 중대제해책 필요 현실감 높여

최근 10년간 산재사고 사망 발생률 추이

2011년	1129	2017년	969
2012년	1134	2018년	964
2013년	1090	2019년	971
2014년	992	2020년	882
2015년	955	2020년	882

이 늘어 보인다. 2020년 산재 사망자(882명)는 2017년 대비 82명(8.2%) 줄었다. 2019년 대비는 27명(3.2%) 줄었다. 사망사고 81%(71명)는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7일 산재 사망사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업장 증가 36.4%(312명), 5인 이상 29인 사업장이 45.6%(402명)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어떤 화재 사고가

사망자가 증가의 영향을 받고 싶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 감축 공약에 달성하기 위해 2월 27일 목표를 다 정했다. '전년(2020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세워 올해 70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20% 감축 계획이 공수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 1분기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다 때문이다.

고용부 미흡이라며 '정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치는 대책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 산재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던 대신 공약에서 내세운 목표에는 한참 모자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예방 실적은 81.6%가 넘는 미흡한 실적으로 중대제해책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면" "고용부 예산 산재 예방 비용도 삭감"을 우려하며 "예산은 인원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 금주특권점★

부산시내 (면적600㎡이상) 가맹점 시세조사 마감! 남은 신청 마감! 010-2935-2882

부동산 6개월이상 경매자 알바 도입! 부동산 6개월이상 경매자 알바 도입! 부동산 6개월이상 경매자 알바 도입!

명지상가 44평/실투자 1억대~! 명지 지리실세상! / 송남빌딩 / 송남지리실세상! / 송남빌딩 / 송남지리실세상!

명지판매상가! 명지판매상가! 명지판매상가! 명지판매상가!

호남리조트 판매! 호남리조트 판매! 호남리조트 판매! 호남리조트 판매!

사과문

사과문! 사과문! 사과문! 사과문!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상속환정승인공고!

건축신고서 지정·공고된 도로폐지공고

건축신고서 지정·공고된 도로폐지공고! 건축신고서 지정·공고된 도로폐지공고!

김해시장

김해시장! 김해시장! 김해시장! 김해시장!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구독료 할인 받으세요!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월 구독료를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자동차(계좌/카드)이체 신청방법

전화신청 1544-7044

www.busan.com

끼임 사망사고, 현황과 문제점(6월 1일)

(인쇄매체) 구독비

16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제 2325호

기획

부산일보

마음 급한 중소기업 “정부·지자체 안전설비만이라도 지원을”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

부산 중기 협회, 법 시행에 대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에란 대대적 사업주, ‘부추’가 사igo 확인 인식 안전관리 비용 예산 미책정 73% 정부 업종별 ‘상세 가이드’ 요구

오랜 정들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부추법’)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환영하는 ‘부추법’이 여러 번 반박했지만, 통과된 법은 단정 및 개별 뒤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대응이 늦다. 법안 시행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현재처럼 줄어들 수 있을까.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주, 정부 모두 산업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법 시행에 함께, 누구도 잃지 않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취해야 할까.

■법 시행 대응 ‘안전교육 강화’ 대부분 부산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가량은 준비나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중소기업의 99%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안전지원부가 지난달 10~14일 부산 20개 20개 중소

부산 기업 규모별 사업장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수

기업규모	사업장수(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수(개)
합계	234,401	425,101
5인 미만	278,809	1,442,115
5인 이상-50인 미만	51,809	558,394
50인 이상	3,441	457,820
	(1.2%)	(13.1%)

자료: 2020년 국민안전조사(산업재해)

기업은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0.8%, 할 것이 없다-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1.4%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50.2%가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38.4%는 ‘준비-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1.4%는 ‘준비나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47.8%는 아직 대책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가 78.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별도의 ‘사전 안전관리/평가 운영’(25.9%)과 ‘시설 보강이나 보드 교체/부품 교체’(17.4%)는 이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안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사업장들이 인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 부주의’ 등 직원 미준수(47.7%)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설 노후화’(10.7%)와 ‘정보 관리 인력 부족’(7.3%)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하지만 올해 4월 2일 경기도 평택부에서 발생한 대형선박 사고로 씨의 사망 사건을 보면, 근로자의 부주의만은 아닐 수 있다. 근로자 유족, 즉 근로자가 사망한 대(반)의 안전관리 요



부산중소기업기자재공급협동조합은 지난달 1일 진행된 부산고용노동청과 만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의무사항 준수 시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줄 것을 건넸다.

원, 사고가 난 기업엔 관내에 나가게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는 스프레이가 있었다면(설비 투자), 무리한 작업 지시가 없었다면(안전 관리 책임) 구 중점 생명을 잃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이 모든 것들은 ‘책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84.1%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정부·지자체가 설비 지원해야 실제 중기협회와 부산중소기업기자재공급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예산이 부족한 점을,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 기업(73.1%)이 책정하는 기업(26.9%)보다

부자금이 부족한 현행 법규, 즉 공방별 표준안전 작업기준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가이드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기준을 모두 지켰다면 사고 발생 시 면책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중소기업기자재공급협동조합은 지난달 1일 부산고용노동청과의 긴급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최금식(선보협(주) 회장) 이사는 “중기기업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 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출액 대치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당국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해·약형 구조에 따른 산업현장 최하위에서 상생사고와 1차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인적, 재정적 여건에 맞지 않는 안전조치를 쏟아 내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조금은 또 ‘자영업자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해·약형 법안이 없도록, 영웅담을 만들어 주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함께(중·대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능별’ 조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안전 및 고노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대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만나 자리에선 소수인사담당자들과 협조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방법 관련 업무 소진(안전)에 대해 ‘우선 안전조치 조’를 위한 예산 투입 일정 여부 등을 안전보건(안전)에 대해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로 규정해 계획안을 밝혔다. -글- 이현향 기자 ijournal@busan.com

조만간 발표 시행령에 촉각... ‘사업주 징역’ 조항엔 우려 높아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노동계 약하다’ 지적, 완화하길 듯 경총 ‘처벌보다 예방 중심 추진’

지난해 전기과에서 일하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 권을 본과 같다. 전기 안전 부품 불투명화 화재 등 사전 사고가 잇따라면서 시행령

내부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측의 요구는 거세고 갈등은 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급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과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중소기업안전지원부 부실

본부에서 발표한 대책이선으로 씨의 사망 사건을 보면, 근로자의 부주의만은 아닐 수 있다. 근로자 유족, 즉 근로자가 사망한 대(반)의 안전관리 요

우려를 비롯한 견고공지를 원할이 책임이 있는 요구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국(가정) 설문은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조 직인 최금식과 재계 측의 행태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국가 중재가 있어야 할 일”이라며 수색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노동

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단정에서 산업안전보건(가정) 설문은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조 직인 최금식과 재계 측의 행태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국가 중재가 있어야 할 일”이라며 수색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노동

성 때문에 산업 사고 사망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근절하려면 인력 기 위해서는 준비나 대응을 강화할 기업 자율 책임을 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중기협회의 장정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향 기자

이 기사는 한국안전신문조각만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 - 언제 어디서나 OK! 라꾸라꾸 온열 침이식침대 파격세일!

라꾸라꾸 온열 침이식침대 파격세일!

특히 이식침만으로는 가정용,이식침만으로도 2인용 침대가 가능합니다.

중대 디자인 특허등록 030-0960079

최대 10% 할인 (17% 할인 포함) 안전조치 (100%)

안전한 침이식 침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식침도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식이 편리합니다.

자율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한 온도 조절은 온, 냉, 온/냉을 동시에 1.2 온/냉-온/냉이 가능해 부피가 작습니다.

고급 라꾸라꾸 침대는 확실한 A/S도 가능한 인공피복으로 만든 고가품이 많지만, 저희는 우수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꾸라꾸 전통시 호(초)침대
1인용 629,000원 → 499,000원
3인용 필수시트/인식침/방가제

전통 고급 라꾸라꾸(인식침) 침대(1인용)
1인용 499,000원 → 399,000원

3인 침이식 침대를 바꿔 주세요

문의전화 1644-5621 카드결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7월 5일)

Opinion

한계에 대한 열광: 끝나지 않은 도전



김병석
문학평론가

현대사회 전문화·세분화로 구체적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상실 우려
능률과 성과 모두 퇴보 위험도

메이저리그 투수·타자 겸업
오타니 쇼헤이 도전 경이로워
중대한 통찰과 엄청난 노력 결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미국 야구계는 기이한 기록으로 인해 상흔이 늘었고 있고, 또 그만큼 열광하고 있다. 현대 야구에서 한 선수가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것은 분명한 선례으로 공인되고 있었다. 유소년 시절 혹은 대학 시절까지 권타와 포수수로 동시에 뛰며 플레이한 한 선수가 투수로 전향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추산수도 그러한 경우였다. 그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그는 투수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타자로 전향해 그 분야에 진출해 왔다.



이처럼 선례는 배반 추산수만큼 선례는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야구선수들은 투수로서의 재능과 타타로서의 재능 사이에서 한쪽을 배려하여 선례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오타니 쇼헤이는 한 쪽이든 현실적으로 떼어놓지 못하니 한쪽이든 타자로 전향했다. 이런 재능을 택하는 경우는 나타나고, 이른바 선수 사색학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색학은 모야모야, 투수이든 타자이든 양쪽 재능을 골고루 그리고 골짜기 유자라는 것은 기이하지만 보인다. 속직의 말에서 요망한 것은 긴장적인 행동으로 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도 현대 야구에서는 한쪽만 해야 한다는 편견이 우세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의심도 재능을 지녔다고 해도, 타자와 투수 사이의 갈림길은 운영적일 부

어디있을 것이고, 대항복은 그 열광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배반 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혹은 언젠가, 끊임없이 다른 유혹을 느낀다.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면서는 다른 한쪽이든 운영학이 야구에서의 길을 키워준다. 선례를 전향하여 그 분야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을지도 기이하게 소실할 써서 소실가로 대체하는 기쁨을 보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는 모야모야 은근히 일어난다.

오타니 쇼헤이(Ohtani Shohei)의 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는 다소 무모할 수도 있는 도전을 통해, '한쪽만 할 수 있다'거나 '한쪽만 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도, '한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도전에는 중대한 통찰과 함께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양자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를 넘지거나 그를 초과할 자는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한계를 향한 그의 열광적 도전이, 우리의 삶이란 반복을 통해 보여준다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2021년 시즌을 마무리하든, 그의 도전이 매우 인상 깊은 표제가 되어 있다. 그의 도전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의 도전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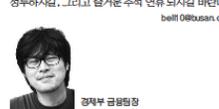
주식 팔고 연휴 보낼까?

올 추석 연휴는 무려 다섯(18~22일)나 된다. 연휴가 다가오면 언제 주시 투자자들은 연가 시작되기 전 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배반된다. 긴 연휴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한다니 그동안 중 해외에서 악재라도 터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다보니 고민 또한 더욱 깊어 보인다. 올 추석 연휴의 경우 주말(19~20일)을 제외하고 하루(20~22일)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쉰다. 이에 연휴 전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는 17일 단 하루만 있다. 팔고 가야 하나, 들고 가야 하나,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장차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석 연휴 주식시장은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 반박되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2005년 이후 추석 연휴 전 주 1주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휴 이후의 수익률이 연휴 이전보다 평균 1.6배 정도 10배 이상이다. 단순한 수열연립, 전문가들은 연휴시장이 직전의 결과로 해석한다. 앞서도 언급했듯 연휴 직전에는 투자자의 불안이 커진다. 이러한 불안이 실제로 주식 매도로 이어지고, 그만큼 중시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 수익률은 연휴 직전보다 올라가는 것이다. 들고 보던 단편적인 일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연휴 전에 주식을 팔았다.

이렇듯 과거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결론 내리지 않, 17일 주식을 팔고 추석 연휴 보낼까? 그리고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낫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일 뿐, 과거에 근거했다고 해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FOMC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결과는 23일 발표되겠지만, 해외 도중에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지만, 국내 중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정황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이쯤 되면 '그래서 말리는 게냐, 말라는 게냐' 역할을 내지는 분들도 있을 테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연휴 직후 수익률이 연휴 전보다 더 좋더라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식 매매의 결정은 결국 본인 뜻이다. 다만 '연휴 전에는 배는 개 지 않았을까?'라는 메타 반박되는 단호한 고민으로 매도 압박에 주식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단, 20일과 22일 정체를 불안 요인이 예전한 상황에서는 연휴 전 성격 대응(추가 매수)까지는 추천하지 어렵다. 다만 정부하사실, 그리고 출근을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란다.



김병석
경제부 금융전문가

Opinion

산업현장 사고 사망,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다



김동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장

최근 들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노동자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도래되었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안전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구르다 다칠 수 있다면 일어 조금 늦어도,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업주가 경영책임이다.

이 의미는 추락 및 끼임 위험 방지 조치, 필수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철저한 점검사항 또는 위험 환경은 무조건 일직을 적용하여 일한 작업을 통해 할지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관내의 고층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직원이 건설 현장과, 제조사업장 1만 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내년부터 중대재난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는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새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함께, 담은 것만이다. 이 프락터 속에는 한 아이를 낳고 온 마음을 필요하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점검 대상 제조사업장 중 64.6%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의가 개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고층노동부와 안

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현장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노동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치를 같이 보살피려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현장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노동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치를 같이 보살피려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현장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노동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치를 같이 보살피려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현장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기본이고, 노동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치를 같이 보살피려 한다.

김정운, 송희준, 송길영, 유홍준, 김명준, 김대식

BSCC 인문학 콘서트: 향연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오전 11:00 전석 20,000원

2021. 3.26(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활력의 조건 김정은 | 부산시립합창단
2021. 4.30(금) 어디서 볼 것인가 유원준 | 부산시립합창단
2021. 5.28(금) 진정한 삶의 송길영 | 부산시립합창단
2021. 7.30(금) 향락의 조건과 장안정신 송희준 | 부산시립합창단
2021. 9.24(금) 영희향 김명준 | 부산시립합창단
2021. 10.29(금) 최복희에 올다, 예술의 미학은? 김대식 | 부산시립합창단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 협찬: BNK 부산은행, emc 부산도시공사, LOTTE

예매 및 문의 (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l.or.kr | 고객센터 전화: 351-607-6000

결제지 할인 2만 이상 즉시 구매 20% 할인

기고문 : 산업현장 사고사망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다.(9월 17일)

(인쇄매체) 구독비

음주운전·절도·도박... '자치' 앞둔 경찰 '자치 역량' 먹칠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0년 만에 기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명칭되면서 현명 이 교체됐다.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 3명 음주운전·방조 혐의의 직위해촉 진정무 창장 일선 시장 소집 "특단의 대책으로 쇄신해야"

새로 부산경찰청의 그랜드 리프트 날 않는다. 유익이 많다. 최근 10속 경찰청의 일방이 이어지면서 자치경찰제 는 음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에 대한 회의감과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일선경찰청에서 따르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경찰청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빼다 단속에 적발 됐다. 지난 2일 오후 부산시청 인근 지하 에서 흡사자리를 가진 후 경찰청 지하주 차장에서 대안적인 기사가 기다리는 주 차장 입구까지 승차한 기사가 나왔다. 4 일 행인과 접촉사고를 낸 뒤, 연선서는 직접

자랑을 올린 경찰관 2명을 계속 재판된 것. 경 관은 같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즉결심 판에 넘겨졌다. 일일이 돌아지 않자 부산경찰청은 내 부적으로 아무런 특별조치를 받았고 3일 일선 경찰청장 모두 경찰청으로 소집된 내부기감 단속을 나섰다. 지난해 부터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취관 화 의물 피오상으로 경찰청을 경찰청 임당심 서는 이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무 부산경찰청장은 "어떤 일을 계기로 강 도 높은 재발 대책을 마련해 부산 경찰 청이 전면 쇄신하는 게로 살아야 한다. 먼저 자취관 화 흡사해서 대책을 강도 높 게 시행하고 각종 의무인행이 근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이 특별 대책까지 마련할 정도로 내부 기감을 단속하는 건 오 7 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미흡한 수사결을

받게만는 데다 시청과 경찰청이 아닌 상 각으로 자치경찰청을 이끌어가고 할 상 황인지만 연이 벌어지는 일발 사고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굵지 않다. 최홍을 특이대 경찰청장과 교수는 자치경찰청의 혁신인 시민 신뢰를 높여 주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경찰의 윤리적 예가 사라질 수 있다. 윤리적으로도 조지 신뢰 회복에 앞장 서고 경찰 내부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에 대해 자치경찰청에 대해 일 제정을 준비 중인 김태현 행정위원회 위원 역시 "제도를 정비하는 부산 자치경찰 제에서는 이같은 일발 사고를 막고 신변 회복하기 위해 좀더 강력한 윤리 규정을 조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국·박민 기자 kbs@busan.com

부산 '집콕족' 늘자 화재도 늘었다

지난해 2499건 - 2.4% 증가 반라동를 인한 화재도 늘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른바 '집콕' 이 늘면서 부산의 화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는 249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9년도 2440건보다 59건(2.4%) 증가한 수치다.

부산의 화재 사고는 2017년 2609건 이던 것이 2018년 2471건, 2019년 244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러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산소방본부는 감소 추세에 있던 화재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살롱과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콕으로 인한 화재가 늘다 보니 인명 피해도 늘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화재로 179명(사망 13명, 부상 1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도보다 4명(37.7%)이나 늘어난 수치다.

(52.5%)이 비주거 시설(62명, 34.6%)보다 많았다. 연평균으로는 40~50대가 4.7%로 가장 높았다. 캐주얼로는 가솔 (54명, 30.2%), 시차대로는 오전 5시 부터 7시까지 이른 시간대(27명, 15.1%)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반라동를 비롯한 화재도 2019년 4건, 지난해 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급경구 현 아파트 주상복합에 난 불 역시고양가 인력선 부근에 높은 건축물 캐주얼이 올라가다가 건물 바닥을 누른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리프트 정류소와 화재 교습은 "열을 시진기 때문에 스위치 를 눌러주는 등 반라동를에 의한 화재 사 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화재 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부주에 의한 화재가 56.4% (141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7.9%) 2.3.4%, (685건), 미상 8.2%(205건) 순이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승시방편시설 등 주차도와 시설이 36.1%(901건),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33.3%(832건) 이다. 김성현 기자 ksh@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철도 차량정비공장 건설 현장 점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중소사업장 '추락과 끼임' 점검 나갑니다

노동부 오늘 '페트'를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 단)이 산재로 인한 사망과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점검에 앞장 '페트'를 현장 점검 할 예정이다. 페트란 '안전보건공단'을 위한 복지 조직과 기업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복지 조직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019년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은 전체 재해 사고의 53%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48.5%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는 직선다 점검 횟수를 전년 화에서 7만 회로 늘리고 점검 전문인력도 확대했다. 점검 대상은 120억 원 미만의 건설업 현장 등 50만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건설업 사망은 사고 사망 이 증가한 50억 원 미만의 핵심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핵심 고위험 작업은 비계, 돌기, 틈, 물 등의 작업이다. 제조업 사망은 2020년, 전역이, 리 프트, 사출기, 프레스 등 10대 위험기계가 늘 보일 수 있다. 권은 점검 추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은 위요인 기업을 위한 비용 을 적극 지원한다.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 사내 정비 팀을 구축할 경우 50만 원 내 제2사업장은 이동식리프트 등 위험 한 기계 교체와 노후관리 프로그램 개선 비용을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현행 비무용 공단 이상과 점검은 4 월 부산 서구 소재 자취관 부품 제조 사 장을 비롯해 기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자 업무 확대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팀을 찾아 방문형 작업의 추락 위험을 점검한다. 복지 예산은 '현장 점검 과 재교육을 병행해 안전 인력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ye@



스님이 제작한 심이신상 전시회

민간이 지핀 '선결제 캠페인' 공공으로 '활활'

부산시 오늘 범시민운동 협약식 업무추진비 30% 내달 중 결제 교육청·이전 공공기관 등 유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현금 선결제 캠페인' 부산 일보 지난해 15월 14일 보도)이 부산 에도 본격화한다. 민간에서 사자던 등 네 단골점을 살리는 운동이 자민자치 단체 정책 자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부산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리 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범시민운동 캠페인(이하 선결제 캠페인)' 협약식을 기인 20일이 밝혔다. 선결제 캠페인에는 부산 시, 부산시청 16개 구, 부산시공공 의소,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공공 기가맹점, BANK 부산은행 등이 참여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소 자금 부분 선 결제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공 통 결의문을 발표한 예정이다. 선결제 캠페인은 사자적 거리 두기 조

(50) 씨 가게에 최근 한 단골손님이 13 만 원을 결제했다. 이 손님은 코로나19 로 인해 단체 조공이나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후 손님의 가족 들이 언제든지 방문을 방문해 선결제 캠페인에서 사자하고 행을 가게에 대해 만 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선결제 캠페인이 본격화한다. 먼저 부산 시와 시의회, 16개 구·군에서 올해 업무 추진비 30%인 37억 원을 다음 달 중 달 조로 선결제했다. 이 중 25억 원은 선연수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은 각 공공기관 인근 식당, 카페 같은 소상공 인 업체이며 마트 등 대가점 관련 정보는 제외다. 부산시는 먼저 시와 기초자치체 먼저 선결제 캠페인에 앞장서고, 교육청, 이 전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의 참여와 홍보 를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 민 간에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ksh@

'부녀회는 입주자회의 하부조직 아니다' '수익금 회령' 유죄, 대법원서 파기환송

부산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7100만 원 회령' 1·2심 유죄 대법 '부녀회 수입은 부녀회' 회 의 수익은 부녀회회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재만 대법관)는 원형 행위로 기초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장 A 씨의 사생활 상에서 정액 6개월, 정액유예 1년을 시 고한 회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부녀회장이 다 신 판치기도 했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 2월까지 아파트 단지 생활용품 치리와 계산판 권고 등의 수익금 등 합계 7100만 원 을 회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17년 1월 부녀장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액 6개월, 정액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심은 담당법 부녀장은 A 씨가 속한 부녀회가 생활용품 처리 등으로 들어온 수익금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아 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회의의 소유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되는 만큼 회령 사안이 인정된다면 인정 되는 것이다. 심판장 대법관의 판은 다음과 같다. 대 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에 이르러 주택법 제 126조 제 2항은 모 인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지분 소유인 주민 대표회의로 정할 수 있는 없다"고 판 단했다. 김현수 기자 han@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에 초임금 대납

부산시 채무 5% 지원키로

학자금 대출 연체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산시가 채무 금액의 5%를 대납키로 했다. 부산시는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들이 학자금 대납을 신청하면 부산시가 채무 금액의 5%인 원금 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 청년들이고,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부터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까지다.

이전 신청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이다. 올해 예산 이 소진될 때까지 200여 명을 지원 할 방침이다. 신청에 앞서 한국 신용회복위원회(www.kssn.or.kr)에 신용 유예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 청년회(www.busan.youth.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 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까지다.

이전 신청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이다. 올해 예산 이 소진될 때까지 200여 명을 지원 할 방침이다. 신청에 앞서 한국 신용회복위원회(www.kssn.or.kr)에 신용 유예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 청년회(www.busan.youth.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 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 청년들이고,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부터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 일까지다.

중소사업장 '추락과 끼임' 점검 나갑니다.(2월 4일)

08 e대한경제신문사

사업명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자

실적

건설안전 기획기사 및 2021 스마트 건설안전포럼 추진

내용

- 기획기사 보도: 10회
 - <중대재해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붕괴에 의한 추락사고(4월 16일)
 - <중대재해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달비계 작업 '추락주의보'(5월 3일)
 - <중대재해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지붕공사 추락사고(5월 11일)
 - <중대재해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크롤러 크레인 작업(5월 18일)
 - <중대재해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고소작업대 사고(5월 26일)
 -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성료(7월 13일)
 - '달비계 안전'...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독꾼 조인다(10월 6일)
 - '승강기공사 추락사고' 예방, 공공이 팔 걸었다(10월 28일)
 - 추락·화재·질식...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비상등(11월 10일)
- 2021 스마트 건설안전 포럼
 - '중대재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스마트 안전기술, 미래안전기술, 제도·정책 개선방향 모색 등 총 3섹션으로 진행
 - 유튜브 <e대한경제> 채널 영상 업로드

“작업순서 안 지켜”… 곡선보 거더 ‘와르르’

■ 중대재해 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행택 물류센터** PC보기사

■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소재 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근로자 5명이 지상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물류센터 5층 지층의 견임 램프 부분에서 현장 상인을 받는 작업용 하얀 이륜은 현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재가 무너지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33)씨 등 3명이 심각한 상해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총 9명의 건설보안사 사상자를 낸 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조사용 필름은 국토교통부 공사대중조사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사대중조사팀에 “당시 사고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데 필요한 램프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램프를 설치하려다 붕괴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용 필름을 분석하고는 의혹 곡선보가 견도에서 보와 연결된 자른보와 테크플레이트가 탈락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곡선보가 견도인 원인은 곡선보 견조 후 거더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램프 콘크리트 시공과 우수호 모터부터 주입 전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 청북읍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PC 붕괴 사고 현장의 모습.

위해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거설보 및 부속자재의 하중 제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공계에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반영하고야야 할 상황임을 점검하는 제도 개선을 제발 방침대로 제시했다.

또 견도 방지 철근은 가능하면 다른 공법에 건설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볼트 파이프 너트를 체결할 경우에는 설계도서나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 표지하는 공법적 측면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큰 틀에서 개선책을 찾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PC 공사의 경우 지지부위가 각 공법별 작업 간

삼성물산이 도입한 로봇팔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척척’

높은 위치에서 내화보철 시공 유독성 물질 노출도 이상한 근로자 안전 확보 ‘효자 노릇’



삼성물산이 도입한 로봇 팔 10m 높에서 내화보철 작업을 하고 있다.

■ 지난해 13일 평택 F5빈도제강 건설현장 지상 10m 높에서 로봇팔의 ‘내화보철’ 작업이 진행됐다. 견임 근로자가 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해야 하는 공정이지만, 이곳에서는 상부에 로봇팔을 조종해 작업을 진행한다.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고 위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오세철은 건설현장에서는 대표적이긴 하지만 작업으로 분류되는 내화보철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현장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내화보철은 건물의 철골 기둥과 보에 내화재를 도포해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에 수반하는 경우도 많아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긴 만도 제 공장 건설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들이 유해물질 또는 고소작업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의 여러 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콘크리트 기둥에 구멍을 뚫는 작업도 로봇을 비롯해 30도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배관공급이 가능한 자동정밀 로봇 등이다. 이들 기술은 실제 현장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건설 기술 분야에는 새로운 효과적 안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안전을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우 기자 jkwo@

삼성엔지니어링-가스안전공사, 고성능 방호복 상용화 MOU

방폭 기능 갖춘 방화복 개발 국내 최초로 KAS제품 인증 해외 판로 개척 공동부 기제

삼성엔지니어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방호제품 안전성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강원도 영월군의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승중연구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엔지니어링 계약 사업팀 류기영 상무와 가스안전공사 주임팀 에너지안전실승중연구센터장 양 상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방호복은 방폭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방호복은 화재 방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폭발에는 다소 취약해 방폭 기능을 갖춘 방호복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

방호제품 산업현장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04. 15(수) 삼성엔지니어링(왼쪽)과 가스안전공사(오른쪽)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가 이어졌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하고 구조를 개선한 방호복을 개발하고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승중연구센터 테스트를 거쳐 방폭분 분야 최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제품인증을 받

소기업 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공동 체나 등을 통한 상호 기술협력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외에도 국내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생산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한해 체결 수 있는 등 방호복 내화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을 공동으로 개발해 국제화재안전성 인증인 FM(Fire Factory Mutual)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중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인 이번 협약은 해외 판로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우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업체 ‘대1 비대면 맞춤형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은 부실 품질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1 비대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부실품질 진단에 대한 관련 교육을 희망한 7개 안전진단업체가 참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판단하고서 직접 시 업체가 숙제하

야 할 기술 내용과 중요도가 사례별로 주요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기존 방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지역별 소규모 센터를 운영해 실시했다.

김경우 기자

Prestressed Pipe Strut Method

현장규모 : 290M x 101M x 굴착고 20.5M

Expertise Underground **지보공법의 새로운 기준 PPS** 서울 용인구 통방고동 장로로 6길 12 평양빌딩 4층
tel. 02. 799.6568 / fax. 02. 798.0360 www.pumyangenc.co.kr

본양 대이비 1784 신축 현장

현장규모 : 116M x 96M x 굴착고 40M | 상부 전체 복공판 시공

✓ 타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규모현장에서 장시간, 장심도 현장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완수

“기술의 진화 & 패러다임의 변화”

Prestressed Pipe Strut

- ▶ 공사비 절감: H형강대비 10% 절감
- ▶ 공기 절감: 지하 1개층당 15일 단축
- ▶ 건축 품질 향상: 지반 단수하 Post Pile 최소화

(주)평양이엔씨 PUMYANG E&C CO., LTD.

“외국인도 없다”… 건설업 ‘최악의 인력난’

건설업계의 외국인 고용현황이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내 채용 외국의 인력 수가 나날이 줄고 있는 데다 건설업의 고용허가제 인력까지 정밀하게 검토해 ‘합법’ 외국인력은 물론 불법인력 고용도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한다.

3월 국내 채용자 200만명 하회
코로나 탓에 지난해 50만명 ↓
‘고용허가제’ 쿼터 줄어 실업 부록
공사기간-시공품질 확보 ↓ ‘난항’



장기 계약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만 110만여 명으로 12.9% 줄었다. 한편 계약이유로가 지난해 110여 개와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고용허가제 쿼터가 줄고 있다.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가 건설업에 배정된 1만 9000명은 1800명으로 지난해 2300명보다 500명이나 줄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1~3분기 고용허가제 인력의 인력이 통제되면서 꾸준한 수급에 문제가 있다.

건설업에서는 달비계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외국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허가제와 취업제한 혜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간 협의에 따른 단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300명보다 500명이나 줄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1~3분기 고용허가제 인력의 인력이 통제되면서 꾸준한 수급에 문제가 있다.

건설업계의 외국인 고용현황이 ‘악화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내 채용 외국의 인력 수가 나날이 줄고 있는 데다 건설업의 고용허가제 인력까지 정밀하게 검토해 ‘합법’ 외국인력은 물론 불법인력 고용도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한다.

건설업에서는 달비계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외국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허가제와 취업제한 혜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간 협의에 따른 단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300명보다 500명이나 줄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1~3분기 고용허가제 인력의 인력이 통제되면서 꾸준한 수급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달비계 작업 중인 근로자의 모습. 안연복/건설업계 제공

연평균 13명 추락사… 대책 시급

■ 중대재해 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달비계 작업 추락 주의부

장식용 구조물 떨어지고 로프 파손 등 지난 10년동안 근로자 134명 사망
고유부 구멍줄 설치 등 점검 추진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분양보수 작업 중 로프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분양보수 작업 중 로프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안전 사다리 개발로 사망사고 예방하자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하게 사용되는 만큼 안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사다리 사고로 인해 308,83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37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정 사다리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에 활용되는데 불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사다리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에 활용되는데 불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업의 조건에서 안전 작업만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안전 사다리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해 주고, 유능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전 사다리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해 주고, 유능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종문 산업안전전문가 연구위원

Prestressed Pipe Strut Method

Expertise Undergroud **지보공법의 새로운 기준 PPS** 서울 용산구 통빙고동 정문로 6길 12 범양빌딩 4층
tel. 02.799.6568 / fax. 02.798.0360 www.pumyangenc.co.kr

▶ 공사비 절감 H형강대대 10% 절감

▶ 공기 절감 지하 1개층당 15일 단축

▶ 건축 품질 향상 지반 단수하 Post Pile 초소하

범양 내비버 1784 신축 현장
현장규모: 116M x 96M x 굴착고 40M | 상부 전체 복공판 시공

✓ 타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규모현장에서
장시간, 장심도 현장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완수

“기술의 진화 & 패러다임의 변화”

공통기획 안연복/건설업계 제공

중대재해 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달비계 추락, 5.3]

(이책매체) 31부 119

추락사고 막는다면서... 관련 규정은 '허술'

장부 건설현장 사고예방 총력
현장감독·규제 강화 나섰지만
안전인증·품질관리 대상서
추락방호망 등 망류 제외

현장서 저품질 제품 사용 빈번
산재사고 사망자 감축 효과 한계
업계 "품질인증 등 제도 정비해야"

장부 산재재해 사고 사망자 감축이
라는 목표대로 달성을 위해 각종 현장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장부
현장 안전인증 및 품질관리 대상서
제외되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보호망 등 망
류(網流)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나
품질관리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부는 지난 3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와 감
소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속도론 내기 시작했다.

특히 장부는 산재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인 추
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건설현장에서 사진 안전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에 달
하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감시사고가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감시사고는 안전보건법, 기계
경비 시 권원자 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방 가능하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조치
△개발 방지조치 △수직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3대 안전조치로 장하고, 사업장
주소 여부를 집중 점검·확산한다는 계

획이다. 별량 위상 시업장에 대해서는 더
욱 엄격히 감독할 방침이다.
망류 업계는 장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
해 인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재사망
사고 감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망류 품질과 관련한 제도 정비 등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망류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
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상 IC5 성능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규
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
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사용단계의 가설지재와 관련

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
무지침에 망류가 포함되지 않는 점도 문
제라고 입을 모았다.
망류 업계 관계자는 "품질시험 항목에
망류가 없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비용절
감을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인증 제품
을 몰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수직보호망(IC5 F80X)과 추락보호망
(IC5 F80X)을 품질시험 항목으로 추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산업표준화법, 건설
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른 IC5 인증제품
의 사용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에서도 IC5
성능기준 이하의 IC5 인증기준에 준
하는 망류 사용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해야 한다고도 인정한 사망사고 감축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IC5인
증을 받은 수직보호망 업계는 22개, 추
락보호망 업계는 18개가 있다.
업계에 또 다른 관건지는 "추락보호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한 설치되도록 설
치기준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단위의 위험 요인도 설계서에 반드시
시시하는 등 인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
다"면서도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서는 품질을 인증받은 망류
사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 및 관리자·작
업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boom@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 적용... 휴식권 보장하자"

강행법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명절·어린이날 등서 확대 주장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
는 방안이 발의됐다.
강행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외여행에서 수시 지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결정할 경우 모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
다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
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휴일에 대해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부처
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외여행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
로 했다.
현행 공휴일인 법일이 아닌 대통령령
인 '법정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설날, 추석·어린이날에만
현행적으로 적용하는 대체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
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
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모든 국민에게 공

휴일제 적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이어 "휴일 근무는 중소기업 기
회 상실로 이어져 구직난을 유발시키고
고령자경제가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모든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평
등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달린 관계 시회적 현
황하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
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요소 투입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고 저숙련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촉진 할 필요성이 경제성장을 견인한
다. 내실적 성장이론이 적용을 받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109일 기준)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며 "과다한 근로는 근로자 휴
식 권리를 위시함과 동시에 자기개발
역량을 훼손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진단했다.

권영우기자

중대재해 사례로 본 건설안전 [지붕공사 추락사고]



지붕 공사시 추락 위험 요소

선라이트 밝아 떨어지는 경우 많아 30cm 이상 발판·방호막 설치해야

불빛 공해와 복사 등의 지붕 보수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연일 보고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붕공사 중 10명
이 넘는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해 경
우를 보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
든 주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지붕공사 중 총 183건의 추락 사망사
고 발생했다. 올해도 4월까지 사망
사고 11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는 불
빛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불빛(30.7%)에 가장 높았으며 이
는 2016년(28.4%)에서 2020년(33.0%)
으로 증가했다.

지붕공사의 특성상 기구나 좋지
않은 여부와 겨울철보다 봄 가을에
많은 작업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
된다.

봄 가을철에 지붕공사가 다수 이
뤄지는 추사와 광장 등에서, 특히 지
붕 보수에 따라 지붕 보수 공사
에서 가장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나타났다.

올해 3월 2일 강원도 횡성군 소재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가 기존 설치된 선라이트 고정용
볼트를 헛들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노후된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4.8m 아래에서 바닥으로 떨어
져 사망했다.

같은 달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명빌딩 보수작업 현장에서 근로
자가 추락 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에 발이 파손되면서 추락해 사

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공단은 저지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
를 통해 전국 지붕 시공업체 및 공사
현장을 파악하고 시공사, 보수 공사
주, 용역 등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사
모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
고, 또 추락 위험을 점검해 지붕공사
현장의 △저지체 등 안전시설 설치
△선라이트 구간 발판 및 안전방막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지붕작업 3
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재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선
라이트 주변 안전방막과 지붕공사
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물류" 보급을 대폭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붕 작업 때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 선라이트 주변에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부에 추락보호망이 설
치가 필수적"이라며 "안전대 부착할
때를 부착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 위
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
에 설치하고 작업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점검이 철저하
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기기자 boom@

공통기획
안전보건공단 대한경제

(주)JH금속은 관 이음쇠 생산업체로서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고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50만㎡ 주물공관 최신 생산 설비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 이음쇠

무용점! 저렴한 비용!

파이브로 PIBRO

[난간-안전계단 구조물]

스프링클러&노출

에폭시 컬러파이프

※ 전국 당일 물류 시스템

(주)JH금속

MECH

본 사 ·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안벤처타운 59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90빌딩 5F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359빌딩 37-1

www.jhmeta.co.kr 문의전화 ☎ 1566-5489

중대재해 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지붕공사 추락, 5.11]

안전규제에 근로감독 강화... 건설 '초긴장'

당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근로감독 강화에 따라 건설업계 안전 규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안전 규제가 더해 건설기능인 등 급격한 직업안전문제 시정 등에 맞춰 건설업계에 대한 노동청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감독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 측은 매년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가 천리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있어, 별도의 정부 신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 신설에 관한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지원하고 반대를 촉구해 온 건설업계는 근로감독청 신설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역과 산업안전보건법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시업종에서는 각종 안전 규제가 더해 근로감독까지 강화될 것인 반면 현장에 맞붙은 안전관리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관리 및 현장부터 설치, 신재배방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재배방상정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에서 고용부 직제 개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도 올해 '2021년 산업사정조사' 감독방안을 통해 오는 7월 산업안전담당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당청,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속 최근 국회 '근로감독청' 신설 입법 고용부 산하에 두고 노동행정 전담

건설현장 압박 심해져 부담 가중 노사갈등 심화 '부작용' 우려도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관리 및 현장부터 설치, 신재배방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재배방상정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에서 고용부 직제 개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도 올해 '2021년 산업사정조사' 감독방안을 통해 오는 7월 산업안전담당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사례로 본 건설안전 크레인 크레인 작업



PC시장 커지면서 운반 중 사고 늘어 연결부 붕괴...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최근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특히 연결부 붕괴 사고는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크레인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발생.

전문건설 철콘 노사, 생산성 향상에 손잡았다

이례적 노사협의 열고 머리 맞대 현장관리·불법 외국인 문제 해결 양측 공감대 속 방향성 논의 '첫발'

전문건설업계 노사가 건설현장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17일 전문건설업계 노사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 양측이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건설업계 노사가 건설현장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17일 전문건설업계 노사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 양측이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례적 노사협의 열고 머리 맞대 현장관리·불법 외국인 문제 해결 양측 공감대 속 방향성 논의 '첫발'

전문건설업계 노사가 건설현장 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17일 전문건설업계 노사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 양측이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 양측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www.dongyang.co.kr

새롭게~
또, 한번 도약합니다!

동양에레베이터가 또 한번 도약합니다!
언제나 불기능을 모르는 도전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온 동양에레베이터!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열정으로
안전과 행복을 향해 가겠습니다

東洋에레베이터
DONGYANG
ELEVATOR CO., LTD.

공동기획
대한건설안전연구원

서울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 303호
Tel. 02.3280.8677 Fax. 02.823.5756
분사: 충북 음성군 대신면 대리로 904, 기동202호 공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543-18
Tel. 043.877.8677 Fax. 043.877.8678 Tel. 043.877.8670 Fax. 043.877.8671

중대재해 사례로 알아보는 건설안전 [크레인 작업, 5.18]

(인쇄매체) 31면 11

산업현장 안전보건, 권리와 가치 높였다

2021 안전 강조주간 행사 성료

5일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전시회
사내 발표·인자리 박람회 통해
노사·국민에 안전 중요성 알리기
신기술 향연 정보공유의 장 제공

경북이 공과기관, 기업, 근로자가 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2021
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각계
의 관심 속에 성료됐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에
힘을 쏟던 기업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다양한 안전보건 신기술 소개와 신제품
정보공유 등 성과도 돋보였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
일까지 경기 일산 컨벤션에서 5일간 열
린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
째 주 일요일을 '산업안전보건 날'로
정해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 기념 일'로, 모두 노골 권
리법 제정 50주년(1971년) 유공자 포
상 50주년 안전보건 전시회, 산업안전
보건법 제정 50주년 기념식, 산업안전
보건법 제정 50주년 기념식, 산업안전
보건법 제정 50주년 기념식 등 다채
로운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강조주간에는 코로나19 방
역 대책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 소
통을 병행해, 국민적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공적 행사를 평가
했다.



지난 9일 2021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시회에서 개최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안전관리 업체들이 전시 부스를 열고 기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정된 고용노동 환경은 행사 차남
산재예방 유공자 30여명에게 표창포상을
수여했다.

통합산업안전은 오랜 기간 실무경
험과 안전 기술로 안전 관련 지역 취
득과 특허를 보유하고 13종의 저서와 발
간 배후를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한 남해화학이 재능 공로장에
게. 일산산업진흥원은 현장 내 안전교육
체계 교육장 및 플랫폼 운영에 맞춘 가상
체험 교육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등 사
업장 안락으로 재해예방에 앞장선 한진
중공업 신사업화기원행사 조경우 차
장에게 수여했다.

석탄산업진흥원은 영국 지게차 안전관
리프로그램 등 해외 선진 안전 관리법
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관리자 취
득 수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
를 이력년 O.S.생활건강 해비타와 의
상관 강도관리로 선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실용성은 연구
와 정책자 등을 맡아온 박동욱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총장, 여성 기업인으로
서 안전보건 개선을 통해 5년간 무재
해 달성해 온 유수사(주) 박지현 대표
이사, 할비 테크 안전활동으로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는 등 12년 7개월간 무재
해 달성한 조스도신소재 경영자 담당
은 각계 산업공로로 선정되었다.

안정된 고용노동 환경은 행사 차남
산재예방 유공자 30여명에게 표창포
상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안전보건 위헌성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19개 기관·단체
가 시상장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6개 사
업장이 각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위헌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해 위험을
인용 과학에 관측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
하는 모든 안전보건 과정을 말한다.

이날 행사는 '안전보건 유공자'에
대해 인사팀 드린다. '7월 기념식'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지하며, 노동자는 안
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실천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안전보건 위헌성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19개 기관·단체
가 시상장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6개 사
업장이 각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위헌성

인터뷰 김두진 사회정서화운동본부 이사장

"건설사 무너지면 일자리도 없어 상식과 법에 맞는 노사관계 절실"

법적 절차없이 다수의 힘을 내세워 권
력장악을 시도하고, 실패를 행사해도 권
력장악이 끝날 때까지 재발이 이뤄
지지 않는 식의
사회정서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
사장은 이번 비정상의 정서화 운동에
나선12년째 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
날 것 없이 인력을 분산해야 할 지라도 건
설노조 단체가 힘으로는 더욱 실재적이고, 공
관력은 더욱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절차 없이 다수의 힘을 내세워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실패를 행사해도 권력장악이 끝날 때까지 재발이 이뤄지지 않는 식의 사회정서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사장은 이번 비정상의 정서화 운동에 나선12년째 출생했다.

우후죽순 노조 설립, 노조 갈등
도 닦음 힘으로 건설시장 위기
위험행위, 강력한 법집행 요구
선진 건설문화, 시민운동 전개

과거 대한민국철도 상임관사를 역임
하면서 건설현장의 비정상을 직접 목
격한 김두진 이사장은 건설산업과 시
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노조, 노사 갈등은 현장의 어려움
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
일까.

최근 노조 갈등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자기도 모르는 채용 간교, 비노조인 비
지시, 노조인 양방과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위는 날 일이다. 지속적인 노
조인의 입장을 숙련물 수준으로 요구하
거나 각종 집회와 시위로 현장 직임을
분쇄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이런 노조 갈등은 우수인재를 끌
어오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노조
행위와 현장과 노동자 수로는 정해져
있지만, 신생 노조까지 소속 채용 제
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노조인도 노
조의 불법행위에 굴복하고 건설사에게
대항하는 고소, 고발 등 관제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경찰 등 공권력에 강력히 법
집행과 대응을 요구한다.

시원단체의 역할은 '시원'의 관사이다.
행위 다른 시민화단체와 연대를 통해
서도 올바른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법
적 배후 세우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내세워 사색을 탐하고 있다. 법을 위

노사 노사나, 보다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는가.

무엇보다 건설사업이 위기 상황이라
는 것을 노조가 인식해야 한다. 건설사
가 무너지면 노조인도 또한 일자리가 없
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노조단체들은 과거의 피
해를 반성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인데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노동자가 아니라
건설업체와 비노조인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와 법에 맞는 노사관계가
절실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공권
력의 공정한 법집행도 시급하다.

사회정서화운동본부 정서화 안전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가.

본부는 비정상의 정서화에 앞장서는
시민단체로서, 건설업체의 목소리와 노
조의 목소리 모두 경청하면서 나아갈 방
향을 찾는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사들이 노
조의 불법행위에 굴복하고 건설사에게
대항하는 고소, 고발 등 관제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경찰 등 공권력에 강력히 법
집행과 대응을 요구한다.

시원단체의 역할은 '시원'의 관사이다.
행위 다른 시민화단체와 연대를 통해
서도 올바른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법
적 배후 세우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내세워 사색을 탐하고 있다. 법을 위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진단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은 민간 진단기업인
다들기출산, 우리기술 등과 함께 베트남
남동성 노후교량 보수에 유자격 기술
을 갖춘 건설사들에 참여한다고 13일 밝
혔다.

이 사업은 관리원의 '인도네시아 국가
교량 안전성 진단-터미널 통합관리 시스
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
은 '2021년 6월 15일'까지 4개
월이다. 총 사업예산은 47억 원 규모다.
체류국으로는 스마트 유자격 기술
매뉴얼 개발을 비롯, 2년치 전문가 역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
은 '2021년 6월 15일'까지 4개
월이다. 총 사업예산은 47억 원 규모다.
체류국으로는 스마트 유자격 기술
매뉴얼 개발을 비롯, 2년치 전문가 역



베트남 평양성에 위치한 노후 교량의 모습.

경화 교육 시설사업 및 기술지원 지원
2년간 장비 보수·수리·가자재 공여
등으로, 관리원을 이종 현지 전문가 고
용과 기자재 공여 등을 말한다.

박정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관리원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
이 주도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첫 사례"
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
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공정기자 kwon88@

특허 제10-2134887호 www.az2007.co.kr

획기적 공사기간 단축, 신기원을 연다.

강관단단 그라우트의 혁신 RES-CEMENT

(주)에이지는 단순히 상품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약속과 믿음을 함께 드립니다.

RES Cement
Rapid Early Strength Concrete

RES Cement
Rapid Early Strength Concrete

시멘트+벤트나이트
시멘트+물유리

18hr

AZ RES-CEMENT
(속성상 밀도/속성/수입)

2hr 2hr

특수시멘트 영업사원 모집

무기질계 주입재 및 급결재

RES-CEMENT와 기존 주입재 작업시간 비교

AZ Co., Ltd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6, (성남동, 대현테크노밸리) TEL. 031)726-2030 Fax. 031-726-2023
 공장: 충청남도 서천군 관산공단길 26 TEL. 041)935-2020 Fax. 041-933-1336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성료[7월 13일]

(인쇄매체) 31면 110

공공주택 복합사업 탄력... 서울 도심 4곳 예정지구 지정

(중산4구역 연신내·영등포)

국토부, 2·4대책 발표 9개월만에 이른 내달 사정청약 시작
3.3만평 1931만~2257만원

구역	면적(㎡)	유형	세종시	연평 5단지	연평 6단지	연평 7단지	연평 8단지	연평 9단지
영선4	16.7만	295%	4122	4.9%	6.2%	0.9%		
영선5	0.8만	600%	427	4.9%	6.4%	1.3%		
영선6	1.6만	400%	640	4.7%	6.1%	1.3%		
영선7	0.8만	550%	400	4.8%	6.1%	0.8%		

신청 시범 계획안도 신청가능. 향후 시공사별 수급권에서 분기가능



실제 이전에 예정지구 4곳의 추정 분양가는 3.3만평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중산4구역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7억 3000만원, 연신내와 영등포역권 경우 84㎡도 각각 7억4500만원 및 6억7000만원으로 추렸다. 영선4의 경우 84㎡는 6억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도심 내 역사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여 여부를 고려했다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번째 주기가 나왔다. 2·4대책 발표된 지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는 중산4구역(연신내, 영등포역권, 영선4~7)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를 포함해 3분기 2 이상인 주민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구 19곳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상남구에 연세분주도 지정된 예정이다.

국토부는 19곳의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평균 1만 5000여 가구로, 20만 8000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주택사업은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분양주택에 분양가능 주택을 적용해 전체의 60% 수준에서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로 지정된 4곳은 국토부는 설명한다. 분주주도 지정된 사업장이 동이 걸리기를 거쳐 2~3개월 후 분양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선직선 경선사업이 지구지정에서 분담까지 1년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영선4도 도심주택사업도 지정된 약 20%를 적용해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정된 3천 200여 가구의 예산이 20%인 460만 원에 불과하다. 중산4(79%)와 연신내(67%), 영선6(70%), 영선7(79%)은 예산이 20%인 460만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를 포함해 3분기 2 이상인 주민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구 19곳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상남구에 연세분주도 지정된 예정이다.

국토부는 19곳의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평균 1만 5000여 가구로, 20만 8000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주택사업은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분양주택에 분양가능 주택을 적용해 전체의 60% 수준에서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이전에 예정지구 4곳의 추정 분양가는 3.3만평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중산4구역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7억 3000만원, 연신내와 영등포역권 경우 84㎡도 각각 7억4500만원 및 6억7000만원으로 추렸다. 영선4의 경우 84㎡는 6억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민관 협력,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

고용부·안전공단, 기술 시연회 민간에 제공... 계약사업 추진

로 시행했고, 2017년 5월 ~2018년 7월 ~2019년 5월 ~2020년 5월 ~2021년 1~9월 2회 등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잃었다.

해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가 추락사고에 이어 가장 위험한 사고로 꼽히는 실정이다.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에 관한 기술을 민간에 우선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27일 오후 서울 나포구 나포1구역 제2지구 재개발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사업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를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차관과 박용우 안전공단 이사장은 비계용 안전 TFC 오터스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 4개 제조사 대표와 비계 설치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승강기 공사현장에서 매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16년 8월이 직접 추락사고와

향후 승강기 공사는 빠른 승강기 통로 내내 직접 작업자가 들어가 관리·점검·조리해 작업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승강기 정비에 활용될 승강기 통로 밖에서 미리 준비된 작업량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장비는 가동과 신속한 설치 가능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계용 고용부 차관은 이날 "승강기 안전을 비계 개발기술을 민간에 우선으로 공개하고,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정비에 적극 활용되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계용 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제2, 제3의 주요안전용 맞춤형 안전설비 개발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발표회



27일 서울 나포구 재개발 현장에서 개최된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 발표회 행사. 사진은 안전공단 차관(가운데) 박용우 안전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며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공공부문의 이 같은 안전사고에 공평한 반성을 내놓고 있다. 유계, 차질 유무로 민간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과 안전사고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 공공부문의 이 같은 안전사고에 공평한 반성을 내놓고 있다. 유계, 차질 유무로 민간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과 안전사고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연방하는 토지 및 물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에 같이 변경 하고 하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공고를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권소재 내역에 착오없이 물주에게서 열람을 받으신 후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지번	소유자	면적(㎡)	보상액(₩)	비고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 보성군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민관 협력,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10월 28일)

보성군 수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업에 공사 입찰 우대

공항소음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민간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2023년 '렐'을 LdenB로 변경 실질적 소음 측정도 효과적 반영 타 교통수단 등과 비교 쉬워질 듯

내년 6개 공항 소음대책지역 발표 인근 기업 우대 지원받도록 추진

오는 2021년부터 추진이 예정하는
항공기 소음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반
영하기 위해 소음 측정 단위가 렐
(WECPNL)에서 데시벨(dB)과 유사한
단위인 LdenB로 변경된다.

또 내년 중 새로운 소음 측정단위를 적용
할 피해지역사업을 추진할 공항별 소
음대책지역을 새로 선정하고, 공항운영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서
피해지역 및 인근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업을 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민간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
2023년 1월부터 현재 웨이(WECPNL)에서 데시벨, 필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B 단위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선정
내년 6개 공항, 강도, 길세, 재주, 유선, 유수 등 6개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발표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 우대 지원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민간
공사 사업장 소음의 경우 ‘구제’ 등의 용어
대입 및 계약에서 제외 기업에 우대

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
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
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오는 2023년 1
일부터 현재 웨이(WECPNL)에서 도
도, 필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
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B 단위로 변경하되 했다.

렐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되는 운
행 소음도를 아란, 심야시간의 운

행차수 가중치(아란 3배, 심야 10배)를
각종에 하주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하
는 방식이다.

이번 LdenB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할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아란, 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
중(아란+5dB, 심야+10dB)해 하루 등가
소음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음 단위가 웨이에서
Lden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과 크기가 비슷
해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LdenB는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
려한 개념으로, 최고소음도를 기준으
로 하는 웨이보다 실질적인 소음 제감
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
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지방항공
청의 주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역사업을 심화하
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공항별로 발표하
기로 했다. 대상 공항은 인천과 김포, 김
해, 제주 출신 여수 등 6곳이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
역에 위치한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
안도 담겼다.

경쟁연약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계약 시 소음공사를 비롯, 볼륨의 제
도 구제 용어 등의 입찰 및 계약에서 여
러 제외된다(다)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중소안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주
변의 소음피해 지역을 위해 항공기 소음
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및
중소기업 확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자 haeseok@



추워진 날씨... 건설안전 '비상등' "추락·화재·질식사고 주의하세요"

난방기구 화재·갈탄 질식 등 사망사고 위험 철저 대비해야

지난해 12월 경기 근로자 아파트 발
코너 화재 화재 현장에 근로자 2명
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세대 내
가설하는 우레탄 용접기가 적체해 있
었는데, 인근에 있던 전기보일러에 의해 폭
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장호, 이재호
등을 건설현장 작업자 2명이 이 폭발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추위, 얼
린 인양 및 결단 작업이 발생하는 등, 난
방기구 등 에 의한 화재와 낙산은 겨울에
서 콘크리트 양생에 위해 파우더는 길한
난방기 등에 의한 질식 사고가 대표적 사고
사례도 꼽힌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동결기는 장
비물과 더불어 영동 안전사고가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 “결빙에 대한
은 기준을 강등 등에 따라 겨울철 자주
보통 작업을 하던 중 승합이 인양에서 발
생한 일산화탄소 위해 발생했다. 이 사
고로 해당 근로자 2명은 모두 유명을 달
리했다.

관계자의 기준이 급격히 떨어지다 “겨울
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경고조는 92%” “달라한 한 추위가 추
속적으로 유입해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
이 0도 밑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이어질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추위가 배가 내린 다
이 때문에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급격한
추위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크고 있다. 동결기 건설현장에서 추
우 발생하는 사고 종류는 추락, 스라이
동결로 인한 붕괴, 사망 등 집중 추 동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 사고로 인한

“블라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선 응
급 중단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이 있는
불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고 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길한 보온 양생막 입
장 물품 전 산소 일산화탄소 누출 측정
및 공기조화기 등을 착용하고, 방화제
용품으로 인한 중독을 막기 위해 MSDS
경고표지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기자 haeseok@

공통기회
안전보건공단 e-대한경제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장비 양산권 소규모 현장에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영남권 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
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건설사
고 사용자 관측을 위해 안전관리원 및
안전 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이
용과 시공사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지원 장비는 지능형 CCTV를 비롯해
복합 안전관리 장비, 충돌 방지 장비,
자판, 스마트 안전 락, 안전 고리 등 이
다.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모바일과
충돌상황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
이용과 시공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
도록 시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했
다.

또 관리원은 이달 5개 건설현장을 유
추기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사업
효과와 보안사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 이
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건설기자 haeseok@

美 “세계 각지 대형 인프라 5~10개 투자”

첫 대상지 내년 1월 발표 예상
아프리카 세네갈이나 등 물망
중국 ‘일대일로’ 경제 분석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
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
하는 육상 해상 싼트르(신라)를 경제하
기 위해 세계 각지의 대형 인프라 투
자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대륙을 통해
게도국으로 ‘일대일로’에 빠진 뒤 부
달한 이익을 취하고, 북부병하고 감
감의 운영으로 유익에 이르지 못하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디지
탈 기술, 생명공학 등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투자 대상 개도
국에 필요하지만 자본 참여, 대출 보
충, 전문 기술 제공 등 모든 범위의 개
국적 도구를 제공해 기후, 보건, 디지
탈 기술, 생명공학 등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노
동자 보충, 경제를 강화하고, 기후 반
화에 대한 영향이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한 예언이라고 볼
때 긍정적이다.”

건설

건설업 면허 우수 컨설팅업체

(주)건설랜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 일반, 전문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http://www.consland.co.kr
- 신규면허 즉시신청 및 총괄 추기
- 법인신청 및 자본금 증자, 잔고충당 상담
- 법인 인수합병 및 분할업무 대행
- 영업정당 및 면허변남합인법업
- 기업정당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주택면허

전화: 02537-9583 팩스: 02537-9581, 6919-1515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정보물 코타(COTA)
고액의 입찰에서 먼저 생각하세요 코타입니다.

- 종합건설, 전문건설 양도양수
- 건설업 신규등록
- 건설업 기업정당
- 건설업 실태조사
- 가자자금, 잉여금 제거 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1710호 (영재동, 삼호출산빌딩)
전화: 02-589-2350
팩스: 0505-990-2350
이메일: cotat1@daum.net

금융시장 대변환기를 뛰어넘음

화폐 자산에 투자하라 발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3고자산... '똑똑한' 달러·금·코인 투자 '질러잡이'

- 100억 원 이상 자산 보유 100만 명 이상
- 100억 원 이상 자산 보유 100만 명 이상
- 2000억 원 이상 자산 보유 100만 명 이상

100억 원 이상 자산 보유 100만 명 이상

추워진 날씨.. 건설안전 비상등 추락·화재·질식사고 주의하세요[11월 10일]

(이해관계) 스텝 비

09 (주)내일신문

사업명

필수노동자 현장 무사고 그날까지

실적

기획기사 및 카드뉴스, 동영상, 전자책 등 제작·기재

내용

- 기획기사(2021.04.19.) :
 - 선진일터, 안전투자로 시작하자 (16면)
- 기획기사(2021.06.29.)
 - ‘재래식 재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막아라 (18면)
- 기획기사(2021.07.27.)
 - 열악한 근무조건에 재해·과로 위험 ‘수두룩’ 등 (18면)
- 기획기사(2021.09.28.)
 - 중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 불감증’ 여전 등 (18면)
- 기획기사(2021.11.02.)
 - 교통사고도 줄었는데 산재사고 왜 못 줄이나 (18면)
- 카드뉴스
 - (2021.05.27.)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 당신은 누구신가요?
 - (2021.06.16.)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 사고예방 대책은?
 - (2021.07.16.)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 지원정책은?
 - (2021.08.13.)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 분야별 대책 톺아보기!
 - (2021.09.13.) : 추락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 동영상
 - 필수노동자들의 하루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함께 볼까요?
 - 2020년 산재사고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율 추락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재래식 재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막아라

사고 87.3%가 12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 ...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 활용이 ‘답’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보다 27명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46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건설업 신축시공사업과 시공유형별로는 노면 추락사고가 238명(51.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공사규모별로 보면 87.3%가 1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신원기장은 고용부가 공단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다량대 지원사업인 ‘재래식 재해’ 건설현장 신축시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관리본부의 도록으로 신재재인 신축시(메트루키)를 타고 서울 강남 입구정동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현장을 둘러봤다.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21.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관리본부 소속 박성규 차장과 김기태 대리하는 하남시 신재재인 순찰차로 40여분을 달린 서울 강남구 양정동 한 상가빌딩 신축현장에 도착했다. 한 차장팀은 현상조사 등 현장 곳곳을 점검하러 나왔다. 지하층 주차 대면벽의 지붕을 기둥에 부착하는 난간과 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한 차장은 적잖이 발칵펴내며 추락 사고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하층의 작업반으로 사용하는 파손된 말뚝이(같이 남 파손)도 폐기 등도 지적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이 아찔해보이니 정부도 중소기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과 함께 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 차등 지원 안 함 활용에도 안전문화 확산사업도 크게 활용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동식 크레인, 차량 고소작업 등 지원 = 공단은 올해 사망사고 발생현황이 높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등 위험한 기계기구 고를 지원하는 ‘연말추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중량만 안전성 불 대(지대)가 뛰어나 크레인이 넘어져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흔히 발생하는 추락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다. 관련 관측서 “안전문화 확산사업은 2020년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이기에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50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대상 사업이다. 기계가 고대(대) 50%를 사업 1억 1천만 원 지원한다. 올해 이동식 크레인 222대와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69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지원한다.

◆고용부 7월부터 전국현장 일제점검 = 공단은 또 ‘달린사업장 조사항목’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50%의 중소기업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과 추락방지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은 현상 완료 당 3000만원 이내, 추락방지망 설치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50~150%를 지원한다.

최근 지원금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량형 안전망’에 추락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추락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추락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22. 22일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 차장과 이동식 크레인(중소기업)을 도입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축시공사업은 신축시공사업에 추락사고 위험을 현상조사하고 있다. 차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소개했다. 차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소개했다.

건설현장에서 ‘재래식 재해’로 불리는 추락사고를 막는 것은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라 다른 산업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하는 인체의 상해가 강한 특성이 있다. 실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는 안전장비 제대로 갖추면 막을 수 있는 추락사고다. 고공작업 중 안전장비 사용이 제대로 안 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위험요인 개선은 위한 비용 지원이 나온다. 현상점검은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에 손발-점검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추락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 현상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상점검 전담차량을 기존 10대에서 30대로 늘렸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신축사업장의 키워드는 ‘현상점검’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정하고,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보건 시설부재가 비율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대부분(87.3%)은 120억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소규모 현상조사액이 1388명(56.7%)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2020년 건설업 공사규모별 '추락' 사고사망자

계	1억 미만	1~20억원 미만	20~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분류불능
238명	77명	84명	45명	29명	19명

2020년 건설업 기간돌발 '추락' 사고사망자

계	비계	지붕 및 대면벽	활동면 프레스	타워	사다리	육상유압식 승강장치	개구부	기타
238명	47명	47명	29명	24명	13명	13명	11명	53명

“2020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높은 층을 건설할 때 고공(高空)을 지날 때 낙하(落下)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고공(高空)을 지날 때 낙하(落下)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비계’와 ‘개구부 안전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바로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정부지원 필요 = 실제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반이나 노동자용으로 설치된 ‘비계’나 공사장에서 이물질이 쌓여있는 곳이다. ‘개구부’

고공작업 시 안전장비 사용이 제대로 안 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위험요인 개선은 위한 비용 지원이 나온다. 현상점검은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에 손발-점검하는 방식이다.

비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지만, 비계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입자(입자)에서 작업반이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

별반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일반노동자(노동자)와 구조물(물)을 원만(원만) 이사(이사)를 위한 임시(임시) 건물(건물)로 임시(임시) 만들었지만 지금은 강(강)을 재료(재료)로 만든다.

강을 사용한 비계는 일반(일반)과 시스템(시스템)으로 나뉜다. 일반(일반)비계도 규격(규격)에 맞는 재료(재료)를 쓰고(쓰고) 발판(발판)을 놓(놓)으면 어느 정도(정도) 안전(안전)을 확보(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공사)현장에서 공사(공사)를 위해 발판(발판)을 드르(드르)고 설치(설치)하는 비계(비계)와 비계(비계)에 안전(안전)띠 등(등) 안전(안전)장비(장비)를 고(고)치(치)지(지)는 경우가 종종(종종) 있어(있어) 추락(추락)사고의 주요(주요) 원(원)인(인)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시스템 비계’다. 시스템 비계(일제(일제) 작업반(작업반)은 발판(발판)과 통로(통로), 안전(안전)간(간)을 공중(공중)에서 시공(시공) 제작(제작)해 일(일)체(체)로 설치(설치)한다. 작업(작업)자(자)를 안전(안전)띠를 착용(착용)하고 작업(작업)할 수(수) 있는(있는) 발판(발판)이 떨어(떨어)지지(지)지(지)는 구조(구조)를 가진(가진)다.

한편 7월 1일부터 전국현장 일제점검 = 공단은 또 ‘달린사업장 조사항목’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50%의 중소기업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과 추락방지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은 현상 완료 당 3000만원 이내, 추락방지망 설치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50~15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문화 확산사업은 현상점검을 소규모 건설현장을 늘리기 위해 ‘신축시공사업(신축시공사업)’을 고(고)치(치)지(지)는 구조(구조)를 가진(가진)다. 한(한) 차(차)장(장)은 추락(추락)사고(사고) 예방(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소개(소개)했다.

다시, 일상으로!

진심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일상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YTN

●●YTNplus ●●YTN2 ●●YTN라디오 ●●YTNworld ●●YTN dmb ●●YTN사이언스 ●●YTNseoultower

기획기사(2021.6.29.) -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재래식 재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막아라

팬데믹 속 필수노동자

열악한 근무조건에 재해·과로 위험 '수두룩'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사회기능 유지 역할 부각...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 지원 노력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서도 경제업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핵심 종사자'로 지칭하고 식품 가공·배달,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핵심 종사자'로 정의한다. 영국에서는 의료·사회복지, 교육·보육, 핵심 공공서비스, 식품·배달, 공공안전 및 국외연락, 교통(운수), 공익사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분류했다. 미국은 에너지, 보육, 농업, 식품제조, 필수수업업, 필수수입(에너지, 기반 시설 등), 교통(운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칭했다.

필수노동자는 지난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하 '보호법')으로 개정해 정부차원에서 '핵심'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생명·안전을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필수노동자는 지난해 시작 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두됐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지원,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에 따른 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물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 기술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하지만 각종 직장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수노동자들이다. 필수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감염이다. 의료·물류 등 직종은 대인·접촉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었. 일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대구, 경기 고령 등의 병원성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그리고 의료 인력 코로나(동양인) 격리가 대표적 사례다. 콜센터 콜루터 등 밀집지역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수도 간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 우동 관내에 위치한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산업을 해야 하니 바람이 바뀌어오기 수밖에 없는 환경인 줄 알지만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스크를 쓰고 상담하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고객의 불만이 들어오면 이는 성격과 직위가 때문이다.



요양노동자 현장 고령... 2월 27일 서울 중구 국제관광호텔 앞에서 한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요양노동자들이 '우리는 '이웃', '전염병'을 막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구호를 들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 필수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에도 많이 노출된다. 근로계약 체결이 대표적이다. 근로계약결정환은 △반복적인 등차,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일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에 취약하며 반복적인 심정근육 및 고주파 신체조직 손상 나타난다.

근로계약결정환이 발생하는 직종으로는 물론, 특히 요양보호사가 많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당시 이후 급격히 늘었다. 요양원·공공성 활가중·아(아보)·방문요양·지배안심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 업무시간, 근무환경은 과로와 열악한 근로조건과 업무량 증가로 고통을 겪는다.

보호법 제정 이후 코로나19 유행(경사대상) 체제를 비롯해 근로 보호, 방역 조치 등의 일부 속에서 끊임없이 감염·노출에 시달린다. 특히 간접채취시에는 물리적 함께 힘을 쏟거나 손목관절 하고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수백에 달한다.

택배노동자들도 물품 취급으로 배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짜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는 감염노동자에게 적합한 휴식과 휴게 시간, 치료·심리상담, 고령증대 업무 대우 등 세력 강화의 조치가 해야 한다.

(13.2%)을 운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보호조치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보호조치에서 '장비'는 물론 보호복 차가 확산·장착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정보 개방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직종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연장·취우제도 확대** = 정부도 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가결했다.

법은 그동안 모호했던 '필수업무'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에 대해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힘쓰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연역 부족 등 어려운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의 지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환경 입찰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배양인 감소될 뿐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고령연장과 취우제 관련 근로조건과 심리적 지원 보호를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민 기자 hanmin@naver.com



'유압구에서 강제채취' 지난 22일 광주 동구보건소 상시비밀접촉센터 의료진이 유압구 등 간접채취시범을 진행 중이며, 검사명령 받고 있다. 한민 기자 hanmin@naver.com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사업 추진

안전보건공단 '건강진단비'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 되자 원천적 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대한 마스크 보급에 나섰다.

올해도 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고 있다. 3월부터 '근로계약체결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고위험직종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해 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지원한다.

'근로계약체결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은 택배노동자와 환빙·화물업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진단을 받고 있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한민 기자 hanmin@naver.com

조사 결과 최종 조사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인력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50만 미만 기업에 대한 마스크 보급에 나선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필수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이 목적이다.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안운전자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20인 미만 사업장의 원정(비정규직)이다. 이들에게는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에 대해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약 1만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된 택배노동자 등이 신청해 순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한민 기자 hanmin@naver.com

다시, 일상으로!

진실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일상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YTN

●●YTN plus ●●YTN2 ●●YTN 라디오 ●●YTN world ●●YTN dmb ●●YTN 시아선스 ●●YTN seoutower

(이)책(매)체()기(부)비()

필수노동자 현장 무사고 그날까지 : 1탄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당신은 누구신가요?



- 카드뉴스(2021.05.27.)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 당신은 누구신가요?

필수노동자 현장 무사고 그날까지 : 2탄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사고예방 대책은?



- 카드뉴스(2021.06.16.)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 사고예방 대책은?

필수노동자 현장 무사고 그날까지: 4탄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분야별 대책 톺아보기!



- 카드뉴스(2021.08.13.)
 - 매일 마주치는 필수노동자 - 분야별 대책 톺아보기!

서울
내원

오늘도 퇴근 못한 노동자가 발생했다 망심할 때 발생하는 추락사고



- 추락사고 원인과 예방방법 -

- 카드뉴스(2021.09.13.)
 - 추락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 동영상(2021.06.28.)
 - 필수노동자들의 하루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함께 볼까요?



- 동영상(2021.09.30.)
 - 2020년 산재사고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율 추락사고!!

10 (주)동아일보사

사업명

필수 및 플랫폼 노동자 사고사망 예방 캠페인

실적

기획기사 게재 및 산업안전 캠페인(전광판) 송출 등

내용

- 기획기사 게재 : 5회
 -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자가 할 일
 -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사업 큰 효과
 - 건설현장 추락사 5년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내달까지 집중단속
 - 지붕공사 현장 42.7% '안전조치 미흡'
- 산업안전 캠페인 송출
 - 동아일보 옥외 전광판 영상 송출(1개월)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9월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자가 할 일

기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최근 가는 곳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전의 역사에서 이 법만큼 뜨거운 관심과 찬반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 사업장이나 경영자들로부터는 하나같이 힘들다, 너무 이르다는 불멘소리를 듣는다. 노동계나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3년간 적용 유예한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면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영계에서도 이제 안전을 제대로 지켜야 하며 적어도 사망사고 정도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에는 동의하는 눈치다.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도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되던 시대'였다.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나 절박성이 크지도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안전을 법령을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해놓는 '명령-통제형 규제'는 대개 기술적이고 획일적이다. 기술적 획일적 규제는 천차만별의 사업장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

렵다. 더구나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이 쏟아지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쫓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영계가 틈만 나면 규제완화를 요구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장이 안전보건 규제를 준수했던 것은, 그것만 하면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형식적 법령만 지켰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단지 법령을 준수했느냐 여부만이 아니라 사업장이나 경영자가 정말로 예방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법보다 무서운 것이 사회적 비난 여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이고 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태도와 진정성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 기술적, 물리적 조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서 산재사고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여론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경영자의 태도나 진정성이 중요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경영자의 태도와 진정성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경영자가 진정성이 없다면 사고는 예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지금 경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야 할 곳은 법 무법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일하는 사람들과 일선 현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자가 할 일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사업 큰 효과

택배·돌봄·보건의료 노동자 대상 무리한 작업자세 개선법 알려주고 보호대-진단비용 지원해 질병 예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非)대면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노동자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외도 돌봄 물류 운송업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의 수요와 노동력이 늘면서 근로자 몸이 이상이 생길 우려가 커진다. 국내 필수노동자는 가사·돌봄 108만700명, 보건의료 22만5000명, 택배 44만4000명, 환경미화 4만1000명을 비롯해 약 200만 명을 헤아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장 중심 건강관리에 더해 근로자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도입한 '근골격계질환 부담 작업 유해인 조차 및 기

전 지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근골격계(筋骨格系)질환 부담 작업 유해인 인 조차 및 개선 지원 사업은 택배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다. 무거운 물체를 무리하게 들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들은 무리한 작업 자세를 갖게 돼 목 허리 어깨 팔다리 신경과 근육을 다치기 쉬운 직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사업장을 찾아 작업장 환경 및 상황, 작업 조건, 근로자 증상 등을 조사한다. 근골격계에 유해한 작업 환경, 작업 자세를 개선할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를 지원한다. 이런 신체 부위 통증이 있는 근로자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21개 근로자 건강센터(본소)에서 전문적 상담을 비롯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환경미화 및 택배 관련 사업장 약 4600개소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택배기사 배

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20인 미만 사업장 환경미화원이 맞춤형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 일반건강진단에서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근로자에게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있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항목을 주로 검사받는다. 자동차가 다녀 배연을 많이 접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호흡기계(氣) 검사와 근골격계질환을 중점 검사한다. 지난날 현재 30여 명이 신청해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연계해 건강진단 결과물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나 뇌심혈관질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도 받게 하는 사업이다. 소요 비용 80%는 안전보건공단이 지급하고 2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업무상 질병자 및 근골격계질환자 추이

(단위: 명)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2020년)



안전보건공단은 플렉스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오토바이 배달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배달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이 시스템은 사고 다발 구역에 접근하면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울려나온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면서 필수노동자는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사회 기능 유지에 중요한 필수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佛 국립 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에 내달 25일부터 '바다, 미지로의 탐험'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 특별전 '바다, 미지로의 탐험'이 다음 달 25일부터 내년 9월 6일까지 서울 성북구 북서울 꿈의숲 상상박물관에서 열린다.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 국내 초대 전시다. 1730년 개관한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은 표본 1억 건 이상을 소장한 세계 최대 규모 자연사박물관이다. 지난 10년간 세상에 알려진 해양생물의 약 20%를 발견하는 등 상설 탐사를 이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직접 제작한 3차원(3D) 해양생물 오리지널 북체 표본이 전시된다. 미디어아트와 멀티미디어를 통한 잠수형 생태 탐험, 해양생물 및 분자구조 관할을 할 수 있고 생태 생물 시청각 자료 등의 콘텐츠도 마련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후원하며 허아이더리가 작가 주관한다. 티켓 판매는 23일부터. 자세한 내용은 '바다, 미지로의 탐험'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oceanlove.2021) 참조.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사업 큰 효과

건설현장 추락사 5년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추락사, 산재사망자의 29%나 달해 안전설비 소홀 원인 후진국형 재해 선진국선 현장관리자 책임 강화

정부, 노후크레인 교체 1억 지원 점검차량도 108대에서 404대로 늘려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공단은 공사대금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오피스빌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타워크레인인 건물용 연결하는 지지대를 철거하던 중 돌을 기항하는 줄이 끊어진 것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공장 지붕을 고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348명이나 된다. 전체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2378명 중 56.7%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4641명)의 29%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셈이다. 추락 사망사고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재해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춰거나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현장의 사고 위험이 얼마나 큰지는 근로자를

이 가장 잘 체감한다. 경기 부천시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장모 씨(48)는 "고층 건물 바깥에 매달려 일할 때 작업 발판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여러 번 떨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락사고로 숨진 238명 중 건물 바깥의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와 지붕 및 대들보에서 추락한 경우가 각각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난 현장은 기본적으로 안전설비마저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계에 제대로 된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쓰다가 발판이 부서지거나 기울어져 추락한 경우도 있다. 안전 난간을 위아래로 이중 설치하지 않고 하나만 설치해 추락을 막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사

망사고는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중소 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의 87.3%(209명)는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다. 소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안전시설을 위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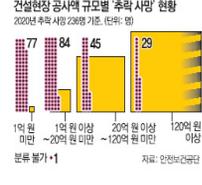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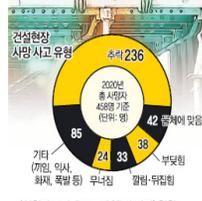
● **노후 크레인 교체, 1억 원까지 지원**

선진국들은 이런 추락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고소(高所) 작업'에 관한 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을 도입한 후 추락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

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책임자들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했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의 법질 18점 이상이면 입찰 참여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넘어지거나 쭈이는 사고가 잦은 이동식 크레인인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기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의 5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이동식 크레인 2550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884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공사 비용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일제형 작업 발판과 추락방지망 설치 비용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에는 지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재량장 안전로개와 안전블록 세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해 사망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장 점검(테드) 차량을 기존 108대에서 올해 404대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이월부터 사망 확률이 높은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고용부는 "특히 사망사고가 잦은 중소 규모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건설현장 추락사 5년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東亞日報

2021년 09월 15일 수요일 B07면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내달까지 집중단속

안전보건공단, 위험현장 불시 감독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사법 조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업 현장을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점검·감독 포인트는 3가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집중 점검·감독, 주말과 휴일 위험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 불시 감독,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 반영 기획 감독이다.

중소 산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 및 끼임 예방 조치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을 찾아내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 중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험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점검 감독 행정 및 사법 조치를 반복한다. 2018~2020년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2.3%는 주말이나 공휴일 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발생했다. 위험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건설기계 사용, 굴착, 건물 해체 등을 말한다. 휴일에 위험 작업을 계획한 현장의 작업계획서를 사전 점검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는지,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이 누락됐는지, 안전조치 수준은 어떤지를 확인해 미비한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감독한다.



건설현장을 찾은 안전관리 현장점검단. 안전보건공단 제공

지역별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지역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 형태를 심층 분석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한 뒤 지역 특성화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 3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난 점을 볼 때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지금이 중요하다. 가을 자원을 총동원해 위험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주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지붕공사 현장 42.7% '안전조치 미흡'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합동점검

공사 잦은 봄가을 추락사고 빈번
개인보호구 착용불량 가장 큰 원인
공단 "안전덮개-블록 구입비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개량 공사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 8월 말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고용부와 공단이 지붕 공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32곳(42.7%)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곳 가운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10곳(31.3%)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난간 미비' 7곳(21.9%), '지붕 추락 예방조치 불량' 6곳(18.8%),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불량' 3곳(9.3%) 등이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지붕 단부(端部·끝머리)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sunlight·플라카보네이트 재질 지붕재)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지붕 개량 공사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중심의 점검과 행정 및 사법 조치 중심의 감독을 병행해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다.

공단은 지붕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은 물론 안전덮개와 안전블록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붕 공사 전을 채광장 안전덮개를 새로 개발한 공단은 올 5월부터 안전블록과 함께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광장 안전덮개는 공사 도중 파손돼 추락하지 않도록 일정 무게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무게 약 3.8kg인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게 했다.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안전대)와 연결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자동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완공이 자동적으로 수축돼 추락을 예방하도록 했다.



안전대(왼쪽) 및 안전블록 세트, 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부와 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과 봄에 각각 52건, 58건이 발생했다. 모두 110건(60.1%)이 봄가을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잦아 공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여름이나 눈과 추운 날씨 탓에 공사가 힘든 겨울이 오기 전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공단 측은 분석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장과 옥사 지붕공사에서 추락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지붕이 많이 남아서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추락사고의 절반 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붕재 파손에 의한 추락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끝머리에서의 미끄러짐, 지붕에서 이동하는 도중 추락 순이었다. 실제 이달 1일 경북 상주시의 한 건물 지붕에서 채광장(采光柵)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밟고 있던 선라이트 채광장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세종시의 한 군부대에서 지붕방수 공사를 하다 지붕에 깔아놓은 방수시트 비닐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약 6m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가 숨지기도 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지붕공사 현장 42.7% '안전조치 미흡'



동아일보 옥외 전광판 영상 송출(1개월)

11 머니투데이

사업명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킵시다

실적

기획기사 게재 및 페이스북(SNS) 홍보

내용

- 기획기사 : 4회
 - [기고]뿌리산업, 안전이 우선이다 (5월 17일)
 - 열사병 예방수칙 안 지키는 일터 1588-3088로 신고하세요(8월 12일)
 - 공장서 손가락 다친 '오징어게임' 알리...현실에선 매해 7000명(10월 19일)
 - '시간' 쫓기는 배달 라이더 사고, 데이터 기반 알림으로 막는다(10월 26일)
- 기타 : 지면 캠페인 광고 및 페이스북(SNS) 홍보

머니투데이

2021-08-13 (금) 004면

열사병 예방수칙 위반편 ☎ 1588-3088 신고하세요

여름철 폭염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156명이 다쳤고 이중 2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재해예방 집중점검과 특별신고기간 운영, 폭염 대응용품 지원 등으로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폭염 재해 예방 집중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 1만5000곳과 5명 이상 전국 물류사업장 630개소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하며 미개선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에 연계한다.

이달 5~20일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옥외작

업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응용품도 지원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쿨토시, 쿨타월, 안전도넛 등 구형 쿨키트 7만5000개와 얼음물을 보급한다.

최우영 기자 young@

열사병 예방수칙 안 지키는 일터 1588-3088로 신고하세요(8월 12일)

머니투데이

2021-10-26 (화) 004면

배달 라이더 안전사고 '빅데이터'로 막는다

산업안전보건공, 세계 최초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구축
사고알림 등 서비스... 내달부터 택배·대리기사로 확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대로 활황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 배달플랫폼업계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관련 배달라이더들은 빠른 배송을 위한 시간적 압박에 내몰리면서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선제적 산재예방에 나섰다.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방과 해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륜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늘면서 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세다. 일반 이륜 이륜차 사고도 포함된 수치지만 배달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에 대응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

해 세계 최초로 2020년 11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

이와 관련, △데이터 기반 재해예방 △지역기반 사업·업종확대 △데이터 직접수집 및 기계적 요인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사고알림 시스템은 현재 매일 100만회 가량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더 나아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GPS, 가속도, 자이로 센서 등)를 이륜차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시간대별·지역별 사용데이터를 수집,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재해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으로는 지역 일선기관

에서는 현재 사고다발구역에 대한 단일 알고리즘을 생성,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지역 일선기관

담당자가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특정사고를 1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해당 지역 전체 종사자에게 스포팅상으로 송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륜차 배달종사자 외에 업종을 확대해 택배기사, 택시·대리운전기사 대상 서비스도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안전배달 시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간산출 전산개발 및 외부공개를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각 종사자의 이륜차에 장착해 평균 운행시간을 실시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의무이행이 미흡한 업체는 철저히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종 기자 danoh@

'시간' 쫓기는 배달 라이더 사고, 데이터 기반 알림으로 막는다(10월 26일)

우리 현장 산업재해는 3대 안전수칙으로 예방 완료!

추락위험 방지 수칙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등

끼임위험 방지 수칙
원동기, 회전축에
안전장치설치,
수린·점검시 운전정지 등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지급, 착용

KOSHA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면캠페인 광고 시안

머니투데이

2021-10-19 (화) 006면



‘현실 속 알리’ 매년 7000명 취약계층 산재 막는 울타리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는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등장한다. 현실에서도 매해 7000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재해를 입는다.

이같은 취약계층의 산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교육과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두트랙전략을 적극 실행해왔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문제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언어지원, 외국어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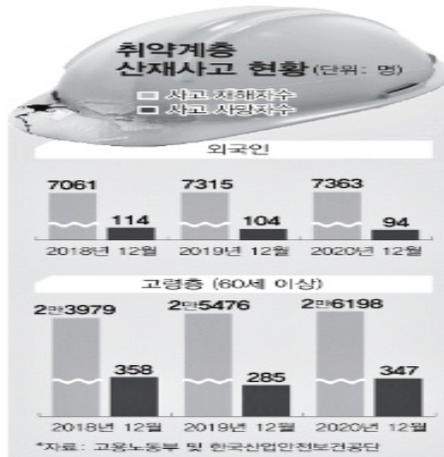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2018년 7061명에서 2019년 7315명, 지난해에는 7363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가 2018년 114명, 2019년 104명, 지난해 94명으로 줄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고령·여성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령노동자 가운데 산재사망자는 2018년 358명, 2019년 285명, 지난해 347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사고사망자 수가 2018년 43명, 2019년 1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9명으로 늘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산재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안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사업을 통해 올 8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9735명이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장년·여성노동자는 1만193명이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또 청년인턴과 같은 예비산업인력들의 경우 현장실습을 나가기에 앞서 직군 및 전공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는데 현재까지 1만3604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외국어로 된 동영상 교육과 안전보건자료 외국어 서비스, 앱을 통한 외국어 소통 지원을



외국어 등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 작업환경 모니터링 안전보건공, 두트랙 지원

제공한다. 안전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 교체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자금을 보조한다.

또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용자’, 안전보건공단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를 집중관리하는 ‘업종별 재해 예방’, 발암성물질 등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유해작업 환경개선’ 등에도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취약사업장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종 기자 danoh@

공장서 손가락 다친 ‘오징어게임’ 알리...현실에선 매해 7000명(10월 19일)

머니투데이  MT
 게시자: 뉴스 머니투데이  · 19분 · 

'오징어게임' 알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선...



NEWS.MT.CO.KR
공장서 손가락 다친 '오징어게임' 알리...현실에선 매해 7000명

페이스북(SNS) 홍보

머니투데이  MT
 게시자: 뉴스 머니투데이  · 7시간 · 

점점 빨라지는 라이더들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



NEWS.MT.CO.KR
'시간' 쫓기는 배달 라이더 사고, 데이터 기반 알림으로 막는다

페이스북(SNS) 홍보

